

# 모심과 살림

3호  
2014년  
여름

생명운동이론지

**모심의 눈** 동학, 120년 전의 생명사상

**제언** 전환, 생명중심 사회를 향하여  
세월호 이후, 촛불의 마음으로 다시 세우는 마을과 사회

**특집 무위당과 새로운 사회운동**

원주그룹과 사회운동적 전환의 장면들

새로운 사회운동, 생활공동체로부터

생명운동과 종교적 이상주의

무위당과 모심의 지역운동

한국 생태주의 운동의 태동과 진화

무위당과 영성적 사회운동

**기고** 파국을 넘어 전환의 새로운 길로  
흔들리는 유기농업의 정체성  
다른 사회를 위한 새로운 협동운동

**살림의 길** 생명문화 경계를 흐리는 음악, 문화, 삶  
생활협동 협동조합과 거버넌스  
사회실천 분노와 망각을 넘어서

**지구의 창** 심고 나누고 되살리는 지역 씨앗 연결망 운동  
우리가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다

모심과  
살림연구소



# 여름과 겨울, 1년에 두 차례 전환을 위한 ‘오래된 새길’ 이야기를 나눕니다.

## 모심과 살림 2호 (2013년 겨울)

### [특집] 새로운 삶과 사회를 여는 노동의 대안

- 문명의 전환과 노동의 미래
- 생명의 시선과 탈근대적 노동
-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의 삶과 노동
- 협동조합에서의 노동
- 좌담 노동의 현실과 현실의 대안



### 모심과 살림 1호 (2013년 여름)

- [특집] 전환기의 사회운동,  
전환을 위한 사회운동

### 모심과 살림 0호 (2012년)

- [특집] 생명의 눈으로 본 협동조합

1호, 2호는 각 5천원, 0호는 3천원입니다.

구입 문의 : 모심과살림연구소 02-6931-3604 <http://mosim.or.kr>

생명운동이론지

3호  
2014년  
여름

# 모심과 살김

떠내는 글

## 지금 여기, 다시 쓰는 생명운동의 길

2014년 여름, 한국 사회의 헤드라인은 여전한 슬픔과 분노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그렇게 계절을 넘기도록 진행 중입니다. 바다는 한동안 우리에게 휴가철의 떠들썩함 대신 가라앉는 배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고통스런 기억을 떠올리게 할 것 같습니다. 진도 앞바다의 상흔, 눈물 어린 팽목항의 풍경과 추모의 ‘노란 물결’ 또한 쉬이 걷히지 않을 듯합니다.

한편에서는 4.16을 우리 시대 하나의 분기점 혹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전의 낡은 관습과 돈·물질 중심 사회로부터 사람과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를 새롭게 열어가자는 간절한 호소와 구체적인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한 다시 돌아온 갑오년, 동학혁명 2주갑이자 무위당 장일순 선생 20주기를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모심과 살림』 3호에서는 생명평화 사회로의 전환을 외치고 모색하는 현재의 목소리와 몸짓들을 놓치지 않는 한편, 120년 전의 생명사상이라 할 수 있을 동학, 한국 사회운동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무위당의 생명사상과 그 실천을 조명하고 그 속에서 2014년 오늘 전환을 위한 영감과 지혜를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모심의 눈에서는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생명사상으로서의 동학사상’의 의미를 듣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생명이 부당하게 억압받고 왜곡당하는 지금, 그것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항상성, 저항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입니다.”(박맹수) ‘생명’의 관점에서 120년 전과 지금의 우리 사회 모

습은 어떻게 같고 다를까요? 민초들의 생명과 삶을 살리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동학 농민군들의 모습이, 수운과 해월의 사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특집 지면을 관통하는 단어는 '무위당'과 '전환'입니다. 70-80년대 원주그룹의 활동 속에서 사회운동적 전환의 장면들을 살펴보고, 생활공동체와 생명사상, 지역, 영성, 생태주의 등 무위당의 사상과 실천을 아우르는 몇 가지 키워드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모방'과 '받들'을 넘어 수정과 창조를 통한 새로운 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말씀처럼, 그를 거울삼아 지금 여기 우리 시대 사회운동의 모습을 비춰보고 앞길을 내다보고자 하였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생명평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제언과 기고 글에서는 그러한 '절박함'을 담아 다양한 관점에서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한국사회를 진단하고 과제를 제시합니다.

또한 '생태적 순환'과 '지역(local)'을 중시하는 농업살림의 관점에서 흔들리는 유기농의 정체성을 다시 묻고, 지구의 창에서는 씨앗을 심고 나누고 되살리며 고유의 '종'을 보존하는 각지의 지역씨앗연결망 운동을 살펴보았습니다. '1대 99'라는 점령(occupy)운동을 구체화해 '빛 청산' 직접행동을 펼치는 나라 안팎의 움직임이 한편 눈길을 끕니다.

협동운동 또한 '탈근대'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삶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새로운 협동운동이 주목해야 할 지점을 찾아보고, 영국 협동조합 사례를 통해 협동조합에서의 거버넌스에 물음을 던집니다. 음악가 김반장으로부터 경계를 흐리는 문화, '비빔'의 미학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생명운동 30년과 무위당 20주기라는 역사의 한 '장'을 넘깁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언어를 구체적으로 현실에 뿌리내리게 하는 일을 저마다의 꽃을 피우듯 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생명운동이 삶에 바탕을 둔 치열하면서도 부드럽고 엄격하지만 따뜻한 운동이 될 때, 지금 가장 필요한 우리 사회의 '구명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모심과살림연구소는**

전일적 생명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활양식과 문명을 창조하는 지혜와 지식을 나누고자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생명사상과 협동운동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세미나 및 포럼 개최,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100-412) 서울시 중구 광희동2가 360번지 동훈빌딩 5층  
<http://mosim.or.kr> [salim@hansalim.or.kr](mailto:salim@hansalim.or.kr) 02-6931-3604

**모심과 살림 3호**

발행인 박맹수

편집인 주요섭

편 집 김현

디자인 디자인 이인

펴낸날 2014년 6월 30일

펴낸곳 (사)모심과살림연구소

※ 책값은 7천원입니다.

002 퍼내는 글 · 편집부

모심의 눈 006 동학, 120년 전의 생명사상 · 박명수

제언 020 전환, 생명중심 사회를 향하여 · 이병철

030 세월호 이후, 촛불의 마음으로 다시 세우는 마을과 사회 · 이민철

### 특집 무위당과 새로운 사회운동

046 원주그룹과 사회운동적 전환의 장면들 · 김소남

056 새로운 사회운동, 생활공동체로부터 · 이경란

068 생명운동과 종교적 이상주의 · 서영표

082 무위당과 모심의 지역운동 · 이영우

092 한국형 생태주의 운동의 태동과 진화 · 구도완

104 무위당과 영성적 사회운동 · 주요섭

기고 123 파국을 넘어 전환의 새로운 길로 - 국가개조론에 부쳐 · 정규호

140 흔들리는 유기농업의 정체성 · 윤병선

155 다른 사회를 위한 새로운 협동운동 · 김성훈

살림의 166 생명문화 경계를 흐리는 음악, 문화, 삶 · 편집부

길 178 생활협동 협동조합과 거버넌스 · 하만조

190 사회실천 분노와 망각을 넘어서 · 편집부

지구의 201 심고 나누고 되살리는 지역 씨앗 연결망 운동 · 박지은

창 213 우리가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다 · 김이경

# 동학, 120년 전의 생명사상\*\*

## 동학 새롭기 보기: 서로 활짝 열린 ‘동’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독자 여러분께 말 걸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동학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200~300만 명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동학,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최대 민중운동이자 민족운동인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아십니까? 갑오년(1894) 조선 인구가 1,052만 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소 1/4에서 1/3, 즉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혁명 대열에 참여했더라도요. 물론 다 죽창을 든 것은 아니고 뒤에서 도운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 중에서 30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이 기록은 전라북도 익산 출신 오지영 선생의 『동학사』에, 상해임시정부 최초 대통령인 백암 박은식 선생의 『한국 독립운동지혈사』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한글에는 한자의 음과 한글의 음을 결합시켜서 한자화

---

\* 원광대 교수, 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장  
\*\* 제23차 모심과살림포럼 “전환의 시대, 동학으로부터 배우는 새로운 삶·사회·문명”(2014.4)과 무위당 20주기 기념 강연(2014.5)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원고임.

된 게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동<sub>東</sub>’자인데요. 일반적으로 아는 ‘동’은 ‘동녘 동’으로, 동쪽이라는 방위를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위로써 ‘동’은 원래 우리말이 아니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동학 창도의 배경을 서세가 물밑 듯 들어오고 우리 정체성에 위기를 느껴서 그걸 극복하고 대항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죠. 많은 역사교과서에서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자가 ‘동녘 동’이 아니라, ‘족속, 또는 무리로써의 동’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동족’과 ‘이족’이 합쳐져서 우리 조상 ‘동이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남 양산의 효암학원 이사장으로 계시는 채현국 언어고고학자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고대 역사 속의 동이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산해경」이라든지 「위지동이전」 같은 중국의 옛 문헌에 나타난 동이족의 특성은 ‘호생불살생(好生不殺生)’, 즉 ‘생명을 살리기를 좋아하고 죽이기를 싫어하는 민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일본에 체류할 시, 서울대에 유학하여 한국 철학을 전공한 오구라 기조(小倉紀藏)<sup>1)</sup> 교토대학 교수와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 분 말씀도 동학을 서에 대한 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동’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못 본 거라고 해요. 원래 한민족의 무대가 중앙아시아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동으로 동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경로가 실크로드와 거의 평행하죠. 밝음과 광명과 빛과 생명을 찾아서 동으로 온 것입니다. 바로 그 1만 5천 년 전의 역사적 기억을 수운 최제우 선생이 다시 19세기 판으로 리바이벌한 게 동학이라는 것입니다. 채현국 선생 이야기와도 상통합니다. 이처럼 우선 동학에 대한 이미지부터 바뀌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에 대한 동, 서학과 대립되는 동, 서를 극복하는 ‘동’이 아니라, 생명, 살림, 빛, 광명을 내포하는 동,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꼈던 조상들의 마음을 새롭게 리바이벌한 게 동학인 것입니다.

---

1)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韓國は、一個の哲学である)』(日本, 講談社, 1998)의 저자

수운 선생 당대에도 동학에 대해서 여러 시시비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동학 수련의 핵심이 21자 주문인데, 거기에 ‘천주天主’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당시 널리 유행하던 천주학의 천주와 같다고 해서 서학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2009년에 번역한 『동경대전』에 수운 최제우 선생께서 동학과 서학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선생님의 가르침에는 동학과 서학이 어떤 관계이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니 이렇게 간단히 답을 했어요. ‘운즉일運則一이고 도즉동道則同이며 이즉비理則非라.’ 운은 하나요 도는 같으며 이치는 다르다. 우선 ‘운’이라는 것을 학자들이 풀어서 ‘모더니티’라고 합니다.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의 요청으로써 서학이 한국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것이나 동학이 등장한 것이나 똑같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수운 선생은 상대방인 서학을 100%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도즉동’이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서학(지금의 천주교, 가톨릭을 말합니다)이 추구하는 길이나 동학이 추구하는 궁극적 길은 똑같다. ‘도’의 보편성을 얘기한 거죠. 타 종교와 타 사상에 대해서, 요즘 언어로 표현하면 다원주의적 사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치는 서로 다르다고 했어요.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는 동에서 태어나서 동에서 도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서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동학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라고요. 이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의 상황에 충실하다는 얘기인 동시에 나의 주체성과 개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타 종교나 사상, 문화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방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나는 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열려 있으면서도 자기 주체성을 갖는 것이 바로 동학인 것 같아요. 보편적인 걸 인정하면서도 내가 서 있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충실하는 것이죠. 따라서, 1860년에 등장했던 동학은 제 나라 제 땅에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세상과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학은 이처럼 미래지향적인 실천운동이었는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120년간 짓밟히고 폄훼당하고 왜곡당했던 역사가 아닌가 합니다. 동학이 만약 민족주의적 사상에 머물렀다거나 다른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사고였다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시 쳐다볼 이유가 없겠지요. 120년이 된 지금, 바로 그 진정한 의미를 되물어서 살려내는 새로운 출발의 해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 살림의 사상, 살림의 군대

1860년~1894년까지 이 나라와 이 땅은 국운이 급전직하(急轉直下)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동학이 등장했습니다. 수운 최제우 선생이 1861년에 세상을 향해 선포한 「포덕문(布德文)」에 자신이 동학을 만든 이유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국(我國)은 악질(惡疾)이 만세(滿世)하여 민무사(民無四時)지안(之安)하니, 시역(是亦), 상해지수(傷害之數)라’ 즉, ‘우리나라는 나쁜 병이 가득차서 모든 백성들이 한시 한때도 편안한 날이 없으니, 이 또한 생명들이 다 상처를 입는 운수(運數)다’라는 뜻입니다.

밖으로는 서세동점이라는 서양 열강의 침탈 위기, 안으로는 삼정문란이라는 내적 위기, 여기에 콜레라와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들이 10년 간격으로 유행하고 기근과 흉년이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동학이 창도될 그 무렵에 이 땅의 민초들은 단 한 때도 편안하게 숨 쉬고 살 수가 없었어요. 나라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 백성이 죽어가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농민들이 왜 죽창을 들었겠습니까. 나라가 민초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의 생활과 생명과 생업을 보장하지 못했잖아요. 도리어 압살하고 억압했죠. 바로 이런 시대상황 속에서 동학이 ‘보국안민(輔國安民)’의 하나의 계책으로 등장합니다. 나라와 민초들을 살리려고 등장한 것입니다. 부족한 나라, 모자라는 나라, 잘못되어가는 나라를 바로잡고 돕는 것의 목적은 바로 ‘안

민'입니다. 그럼 동학의 궁극적 지향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투쟁과 저항? 아닙니다. 살리는 데 있었던 거죠.

동학농민군이 일어나던 당시 상황을 볼까요? 흔히 동학의 역사에서 갑오년에 해월 선생과 전봉준 장군이 대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월 선생은 전봉준이 병사(兵事)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동학 도인들이 타살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호랑이가 집에 쳐들어와서 사람을 물어 죽이고 있는데 앉아서 죽을 수가 있느냐. 참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워라.”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학자들이 그걸 갑오년 9월로 해석하고 해월과 전봉준이 대립한 것으로 말해 왔습니다. 동학의 역사가 왜곡되어 온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해월 선생이 폭력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해월 선생이 내린 명령을 보면 “우리 동학농민군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것을 으뜸으로 삼고,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사람의 목숨만은 해치지 않으며, 행진하면서 지나갈 때 남의 물건에 해를 끼치거나 민폐를 절대 끼치지 말고, 충신과 효자와 열녀와 존경받는 학자가 있는 동네에는 절대 주둔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일본 외교 사료관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국 동학당 동정에 관한 제국공사관 보고 일건」이라는 자료에 들어있는, 동학농민군들이 갑오년 당시에 선포했던 행동강령과 규율 관련 문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갑오년 혁명 당시 풀뿌리 백성, 농사짓던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 1년 이상을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그 많은 농민군들이 어디서 먹고 자고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동학군들이 내세웠던 보국안민의 슬로건에 공감했던 전·현직 관리들은 말할 것 없고, 지방의 뜻있는 지식인들과 부자 양반들이 뒤에서 몰래 도왔던 것입니다. 전라도 쪽 상황을 보면, 군수나 현감들이 무기고나 군량창고 열쇠를 놓고 슬며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동학군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들어가서 밥해 먹고 또 이동하고, 그렇게 뜻 있는 관리들과 부자들이 몰래 도왔더라고요. 그래서 1년 이상 버틸 수 있

있던 것입니다.

제가 2010년에, 동학농민군을 토벌한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라는 일본군 대대장의 후손 집에서 갑오년 당시 압수해 갔던 동학 문서 35건을 찾아서 국내에서 전시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는 뒤에서 몰래 동학농민군을 도와줬던 관리 10여 명의 죄상을 적은 1.2미터 길이의 두루마리 문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산부사 유제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가 따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 유제관 여산부사가 전봉준을 도왔던 대목이 나옵니다. 군량미 300석과 짚신 3천 켤레를 제공하고, 농민군 지도부가 여산을 지나갈 때는 소 일곱 마리를 잡아서 걸게 대접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듯 갑오년 동학혁명 당시에 현직 관리를 비롯하여 생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혁명 대열에 가담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항사상으로서의 동학, 또는 투쟁 부대로서의 농민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동학농민군이 실현하고자 했던 세상, 실현하고자 했던 가치에 대한 나름의 공감과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겠죠.

## 시천주와 유무상자: 한국적 평등사상과 공동체정신

동학에 대한 그 시기 민중들의 폭발적 반응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863년에 선전관 정운구가 수운 선생을 체포하라는 조정의 명령을 받고 내려갑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문경새재쯤 갔더니, 그로부터 경주가 400리(약 160km) 정도인데, 골짜기 마을 마을마다 동학 주문이 아니 들리는 날이 없고 아니 들리는 곳이 없다고 나옵니다. 경상도가 동학 판이 되어 버린 거죠.

수운 선생이 1860년 4월 5일에 득도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집에 데리고 있던 어린 여자 종 두 명을 해방시켜서 각각 며느리와 수양딸

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후에 어린이운동 하셨던 소춘 김기전이라는 분이 경주에 가서, 그 당시 노비였던 80대의 주씨 할머니를 만나서 인터뷰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수운 선생 당대 때 상황을 얘기해달라고 하니, 용담에 신인이 났다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집지(스승을 찾아볼 때 가지고 가는 예물)로 한지(韓紙) 한 다발이나 꽃감을 주로 많이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꽃감을 먹고 남은 가지를 버렸더니 집 앞에 산을 이룰 정도라, 마을 사람들이 나무하러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용담정 앞에 쌓여 있던 나무를 한 짐씩 가져갔을 정도로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씨 할머니의 어렸을 적 회상 속에 용담정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게 밥하면서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수운 선생 당시 무엇이 그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우선 동학의 핵심 사상인 ‘시천주’ 가운데 ‘시(侍)’라는 내용 하나만 간단히 소개하면, 「논학문」이라는 글에서 수운 선생이 이렇게 해설합니다. ‘내유신령(內有神靈)하고 외유기화(外有氣化)하며 일세지인(一世之人)이 각지불이자야(各知不移者也)라’. 안으로 신령함을 가지고 있고, 밖으로는 널리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온 세상 사람들이 옮기지 못할 것임을 철저히 깨닫는 데 있는 것이다. 이걸 제 나름대로 간단히 얘기하면, ‘시’의 상태는 영성과 혁명이 통일된 상태, 자기완성과 이웃사랑이 통일된 상태예요. 내유신령이라는 게 자기 완성, 즉 영성이라고 한다면 외유기화는 이웃사랑, 곧 세상 혁명이예요. ‘시=모심’의 경지에 있는 사람은 안으로 늘 신령스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즉 영성의 상태를 늘 발휘할 수 있고, 밖으로는 그런 영성의 바탕에서 모든 사람을 요즘 말로 한 차원 높은 경지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한 단계 높이는, 이게 ‘시’의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수운 선생의 ‘시’는 한국적 영성과 혁명을 통일시킨 사상입니다.

양반이나 상놈이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두가 다 시

천주 상태로 태어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게 수운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은 제 안에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존재를 모시고 있다. 이 내용이 사람들에게 파고들면서 1860년대 초반에 동학이 거대한 속도로 퍼져 나갑니다. 경상도 상주에 있는 도남서원과 우산서원이라는, 동학을 탄압하고 배척했던 서원들 간의 연락문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동학은 신분의 등위가 없어서 술장사들과 백정들이 좋아하고, 남녀의 차별이 없어서 홀아비와 과부들이 좋아하고…’ 굉장히 악의적인 표현이지만 또 한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 뒤를 이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도우니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한다.’, ‘당시에 이 세상이 이대로 가선 안 된다고 고민하는 일부 호기심 많은 지식인들도 다투어 동학에 뛰어들었다.’고 나옵니다. 시천주가 결국은 우리 근대의 한국적 평등사상으로 정립된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죠.

이런 내용은 갑오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매천 황현(1855-1910) 선생이 갑오년의 상황들을 기록한 『오하기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책을 남겼는데 최근에 한글로 번역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집에서 양반과 상놈이 동학에 뛰어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까지는 분명 나으리고 종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서로 동학 신도가 되어서 양반이 종한테 맞절을 하니깐 종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주종관계가 어떻게 갑자기 바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절을 못 받고 노비들이 도망간다는 내용, 서로 맞절을 해 사람 차별이 없었다는 대목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처럼 동학을 배척하고 탄압하고 비판했던 보수 지식인으로부터도 동학 조직의 평등함을 표현한 내용들이 아주 풍부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평등사상이라는 게 엄청나게 민중들을 휘감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동학에 뛰어들면 굶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무상자(有無相資)입니다. 단순히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거나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재물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서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로, 없는 사람은 노동으로, 많이 배운 사람은 문자

를 못 배운 사람에게 깨우쳐주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가르쳐주고, 이러한 유무상자가 갑오년까지 끊이지 않고 실천되었습니다. 갑오년에 충청도 서산에서 농민군 접주가 되어서 싸우다가 가까스로 살아남은 홍중식이라는 분이 <동학난 실화>라는 증언을 남겼는데, 후배들이 찾아가서 “선배님은 어떻게 갑오년 동학혁명에 뛰어드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동학에 뛰어들면 우선 첫째는 굶는 사람이 없었다.” 유무상자(有無相資)죠. “또 하나는 동학에 하루 늦게 들어가면 하루 늦게까지 상놈으로 있고 하루 먼저 들어가면 하루 먼저 양반이 된다. 그런 말을 들어서 양반과 상놈들이 서로 맞절을 한다.” 이렇게 동학에 들어가면 굶는 사람이 없고 차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뛰어들었다고 대답했어요. 바로 그런 부분이 1860년부터 1894년까지 모든 민초들이 동학에 다투어 뛰어들게 된 결정적 요인이 아닌가. 시천주(侍天主)라는 만인평등 사상, 유무상자(有無相資)라는 공동체적 요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동학에 끌어들이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조선왕조 500년,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사회 체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민초들 차원의 새로운 생활양식, 삶의 실천이 동학 접포 조직에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움직임으로 갑오년(1894) 또는 그 이전인 경신년(1860) 무렵부터 조선 사회를 휩쓸었습니다. 그 핵심 키워드 하나는 ‘살림’이고, 또 하나는 ‘개벽’이었습니다.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보자는 대안적인 삶의 양식들을 동학이 참으로 모범적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갑오년 동학군들이 일 년 이상 싸울 수 있었고 수백만 명이 뛰어들어 30만 명이 희생되는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합니다.

## 사람이 하늘, 밥이 하늘: 해월 사상의 구체성

그런 동학을 있게 한, 가장 결정적으로 큰 공을 세운 분이 해월 최시형 (1827-1898) 선생입니다. 1861년에 동학에 뛰어들어 1898년에 처형될 때까지 38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동학사상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조직을 재건하고 경전을 집성하고 전국을 네트워크로 연결했습니다. 해월 선생은 무엇보다 동학의 핵심 가르침을 평범한 주부나 어린이, 노비, 평민들이 누구나 알기 쉽게 대중화하고 사회화한 공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890년대 초에 동학이 널리 퍼지니 조직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접이나 포를 다시 일으키는 방편으로 편의장(便義長)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해원 선생이 전북 익산의 백정 출신 남계천이란 분을 전라 좌도와 우도를 총괄하는 편의장으로 임명합니다. 엄청난 상징적 사건이었죠. 백정 출신이 동학 최고의 해월 선생 다음의 위계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가문·문벌 중심 사고를 가졌던 제자들을 설득 혹은 제압해버렸습니다. 그 뒤에 남긴 말씀이, “내가 젊었을 때 머슴살이를 했는데, 그때 양반들이 머슴놈, 머슴놈 하는 말을 듣고 한이 맺혔다. 사람이 하늘인데 어떻게 천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해월 선생 평생의 화두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즉천(人即天), 사람 섬기기를 하늘처럼 하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 사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남계천 얘기를 한 거죠. 또한 매우 흥미로운 것은 동학혁명이 한참 진행될 때에도, 해월 선생께서는 충청북도 옥천 청산의 문바위골에서 수련과 공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농민군 지도자, 대접주, 접주들이 봉기해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도 교대로 올라오게 해서 수련을 시킵니다. 갑오년 혁명 정국하에서도 제자들을 끊임없이 공부시켰다는 것,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실입니다.

어느 날은 청주를 지나가면서 서택순이라는 제자 집에서 하룻밤 머무는

데, 밤늦게 건넌방에서 베 짜는 소리가 들리니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고 묻습니다. 제자가 답하길 “며느리가 베 짜는 소리죠.” 하니 안타까워 하면서, “며느리가 베 짜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님’이 베 짜는 소리다.”라고 하죠. 여기에 한국적 양성평등 사상의 원형이 나옵니다. 또 1889-90년 사이에 경북 김천 복호동에 숨어있으면서,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여성들 가운데 도통한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여성들이 공부하고 수도해야 한다는 뜻에서 여성 수도 규칙 「내칙」과 「내수도문」을 선포합니다. 다가올 시대에 역할 해야 할 여성들의 위상을 확실히 보여주는 수도규칙입니다. 그 「내칙」과 「내수도문」에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기르고 잉태하고 가꿔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이에 관한 말씀이 “어린이를 때리지 말라.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다. 한울님은 생명의 기가 꺾이는 것, 상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가에 손님이 오셨으면 손님이 오셨다고 말하지 말고, 한울님이 강림하셨다고 말해라.” 이런 내용들이 해월 선생 말씀 속에 나옵니다.

또 하나, 밥 이야기입니다. 1888년은 조선 땅에 대가뭄이 드는 해입니다. 무자년(戊子年) 대홍년은 기록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가뭄이었어요. 전라도, 충청도 쪽은 거의 황토밭으로 변해 버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때 해월 선생의 ‘밥’에 관한 법설이 나옵니다. ‘밥 한 그릇의 이치를 알면 온 우주의 이치를 안다’는, 만사지(万事知)가 식일완(食一碗)이라는 법설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해월 선생 말씀이 상황이라든지 구체적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장 절박하고 절실하고 간절하게 무언가를 꿈꾸고 그리워한 그 시기에 나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월 최시형 선생께서 동학의 역사, 한국 근대사에서 하신 역할은 모든 사람은 거룩한 한울님이라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더욱 더 구체화시키고 사회화시키고 대중화시키고 확대시켜서, 모든 신분 계층, 계급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한울님으로 드러나도록 아주 실감나는 말씀으로 전파한 것이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만물이 다 거룩한 한울님을 모신 존재라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천지만물 막비시천주야天地萬物 莫非待天主也’입니다. 이게 최시형 선생의 역할이었습니다.

## 동학,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상

동양에는 예로부터 60간지 중에 ‘갑甲’자가 들어가는 해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전통적 사고가 있습니다. 올해가 마침 그런 해네요.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라는 큰 비극을 겪었는데, 그 비극이 주는 교훈과 어떤 비전이 있다면 이 갑오년에 정말 새로운 세상을 열고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면 그에 걸맞은 어떤 사상과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삶과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시간적으로는 동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합니다. ‘생명’이라는 가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항입니다. 생명은 저항하는 것 같습니다. 생물학을 하시는 분이 항상성恒常性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모든 생명체는 비정상적 상태에 있을 때 정상적 상태로 가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거죠. 사람으로 보면 부당한 억압과 체제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당한 것을 뚫고 어떻게 정상적 상태를 회복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상태입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성세대 믿지 마라. 전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의 몸으로, 머리로, 손발로 하나씩 확인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생명이 부당하게 억압받고 왜곡당하는 지금, 그것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항상

성, 저항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동학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없애버리려고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속에서 뭔가 건져 올리려고 한다는 것. 수운 선생, 해월 선생, 수많은 무명의 동학농민군들이 이 땅에 실현하려고 했던 정신, 가치가 나라와 국경과 민족과 계층을 뛰어넘어 울림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인 일본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개혁으로 가는 상서로운 조짐이 아닌가 합니다. 각자가 그 흐름에 동참해 개혁 세상을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 한일 시민들이 함께 찾는 동학의 발자취

### - 동학농민군 역사를 찾아가는 기행

한일시민동학기행은 한일을 대표하는 동학 연구자인 원광대 박명수 교수(모심과살림연구소 이사장)와 일본 나라여대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가 중심이 되어 한국과 일본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기행 프로그램으로 지난해(2013년)까지 모두 여덟 차례 진행되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여성의 눈으로 보는 동학'을 주제로, 일본 측 참여자 20여 명과 한국의 여성작가 그룹이 동행해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기행을 떠나는 올해는 특히 동학혁명 1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일본에서도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을 예정입니다. '생명의 눈으로 보는 동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월 18일 경북 경주의 수운 최제우 선생 득도지인 용담정 견학을 시작으로 대구의 수운 선생 처형지, 전북 남원의 김개남 장군 주둔지, 고창의 혁명 기포지, 정읍의 무명농민군 위령탑과 사발통문 모의탑, 그 밖에 각 지역의 동학군 교전지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유적지 등을 돌아보며 동학사상과 농민군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또한 방문하는 지역에서 열리는 지역사회 활동가, 시민들과의 교류회 등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살리는 사상과 운동으로써 동학의 정신은 역사적 사실을 넘어 오늘에까지 생생히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불어 한일 시민들이 함께 공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새로운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자리로 계속해 이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제언 글 이병철\*

# 전환, 생명중심 사회를 향하여



• 지리산생태영성학교 교장

## 대 회심(回心)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느새 칠월입니다. 그렇게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의 충격으로 인해 가슴에 바위처럼 얽힌 이 답답함은 갈수록 그 무게를 더해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의 그 비통함과 분노는 이제 점차 깊은 무력감과 우울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개울 옆의 커다란 자귀나무에 핀 꿈결 속 같은 합환화 그 연분홍 빛깔도 예전과 같지 않아 보입니다. 아침을 깨우는 피꼬리 소리도, 오후에 들려오는 산비둘기 구성진 소리도 모두 그렇습니다.

남은 한 해의 절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든 이 우울증과 무력감의 늪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 세월호 참사의 충격으로 인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어떻게든 치유해야 합니다.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슬픔을 가슴에 묻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회심 없이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번 재앙의 근본 원인은 시스템이나 관리체계 이전에 우리 사회, 우리 시대와 그 문명의 바탕인 물신숭배, 물질중심주의에 있음을 이제 우리 대부분은 느끼고 있습니다. 생명·사람·존재보다 돈·물질·소유를 더 중시한 사회와 그 시스템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가치관이 빚은 필연적 재난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예견된 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자연생태계를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생명을 돈과 바꾸며 사람보다 물질과 그 소유를 더 중시해 온 우리의 가치관과 그 삶의 방식이 빚어낸 참사가 세월호 비극의 외면당한 진상이라는 것,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해 온 가치관과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는 극심한 경쟁 속의 삶의 방식이 빚어낸 필연적인 재앙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 것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이 같

은 비극과 불행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나의 문제를 다른 이들에게 투사하는 것으로 회피하는 비겁함으로는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정치권과 각 정파들이 또 다시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그 통한의 비극이 우리 사회를 생명중심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다시 진영과 정파의 논리와 그 이해관계로 이용되고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미 선거 등의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휩쓸려 우리 사회를 생명중심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동력으로 그 기운들이 모아지지 못하고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운들, 이 염원들을 제대로 모아내어 참으로 생명이 중심인, 사람과 존재가 중심인 사회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월호 참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재난과 고통을,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리라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모두의 가슴속 이 염원, 참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세대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 간절함을 제대로 모으고 엮어내어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상을 위한 동력으로 만드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침몰한 것은 한국호 그 자체라는 지적처럼 우리 사회는 총체적 부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당장 예상되는 위험 요인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깊게 보면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 그 자체가 우리가 탄배를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난파선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대부분은 이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그 침몰 원인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데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참사와 비극 앞에서도 한반도의 절반을 송두리째 폐허로 만들어 버릴 만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미 수명이 다해 노후한 고리원전은 여전히 시한

폭탄처럼 가동되고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돈벌이 경쟁에 매달리면서 우리 아이들을 선행학습과 과외, 입시경쟁의 족쇄 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행위가 스스로의 무덤을 파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회심, 그 근원적인 전환 없이 우리는 이 난파선에서 살아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난파선에서 구명정을 마련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돈보다 생명이, 물질적 가치보다 사람의 존재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니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생명, 이 존재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뼈에 깊게 새기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 목숨붙이들부터 먼저 품어 안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 세월호의 참사로 비명에 죽어간 영혼들이 우리에게 죽음으로써 전하는 메시지이고, 그것이 난파선에서 우리가 마련해야 하는 구명정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모든 생명이, 모든 존재가 서로 모시고 서로 돌보며 함께 사는 것이 바른 길이며 제대로 사는 길임을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가 한 목숨 줄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난파선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태워 보낼 목숨 줄인 그 구명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생명 가치가, 존재 가치가 그 어떤 가치보다 더 우선하는 세상, 그 사회와 문명을 일구어가는 것이 그 구명정일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회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미친 듯이 달리기를 멈추고 숨을 고르고 천천히 가면서 우선 내 아이부터 저 선행학습과 과외와 입시의 사슬에서 풀어내야 합니다. 고리원전의 가동을 멈추기 위해 내 집의 한 등의 전등을 먼저 끄고 한 평의 텃밭을 더 가꾸며 우리 삶을 보다 단순히 하고 아끼고 서로 돌보며 마음 모아 함께 나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

이제는 정말 정직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살아남고 제대로 사는

길인지를 우리 가슴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가슴이 명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 나 또한 무관하지 않다고, 그렇게 비명 속에 죽임 당한 영령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짐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바로 생명이 중심인 사회를 위해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어물거리고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즉각 행동에 나서서 '생명중심, 사람우선' 하고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남는 길이고 함께 사는 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세대들이 난파선의 이 생명 위기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이런 불행과 비극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생명중심 사회로의 전환일 것입니다.

## 생명중심 사회를 위한 시민행동을 제안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운들을 한곳으로 모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히 생명 위기에 예민한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청소년들이 먼저 나서서 '생명중심,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며 그런 사회로 바꾸어가는 일에 나설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과 기운들을, 참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염원들을 한곳으로 모아내어 사회 전환의 동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틀로써 '생명중심 사회를 위한 시민행동'을 제안합니다. 그 이름을 '생명중심 시민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제안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생명중심 사회로 전환하는 운동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메모입니다.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모든 시민사

회 단체와 여러 조직 단위에서 그 일의 최우선적 과제로 ‘생명중심 사회를 위한 시민행동 과제’를 채택하고 집중한다면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절감하는 시민들이 직접 행동으로 나서서 생명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시대의 기운을 만드는 것이 그 일차적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물질중심, 화폐중심 사회에서 생명중심, 사람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기운과 에너지를 모아내는 시민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생명권과 자위권을 위한 직접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하여 생명가치 중심의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와 문명의 기틀을 만들어 갑니다.

### 생명중심 시민행동 요령(5대 약속)

생명중심 시민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실천강령으로 다섯 가지의 공동약속입니다.

첫째, 밝은 기운과 파동, 에너지를 모아내어 상생과 화쟁의 새로운 사회문화와 기운을 형성합니다.

둘째, 제안된 의견이 나와 이웃, 미래세대에 함께 이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제시된 모든 의견을 존중하며 비난을 금지하고 경청의 문화, 신뢰서클을 형성합니다.

넷째, 생명의 대의와 화쟁정신으로 정파와 진영의 논리를 벗어나고 넘어섭니다.

다섯째, 합의된(공감, 동의된) 의견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실행합니다.

### 생명중심 시민행동 과제(5대 의제)

생명중심 시민행동 과제로 5대 의제를 둡니다. 이 5대 기본 의제를 시민행동의 각 단위에서 검토, 논의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제안합니다.

첫째, 세월호 참사에서 배우기

주된 원인과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거기에서 나와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교훈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숙의합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생명 위해 요소 파악과 해결법 찾기

당장 시급한 위험 요소와 해결 방법, 구체적으로 우리 단위와 전체가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셋째, 청소년과 미래세대들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위해 폐기하거나 중단해야 할 우선적 과제와 실행 방안 마련하기

넷째,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 등 환경 재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대처 방안 찾기

다섯째, 생명중심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지금 나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 보고 실행 과제 마련하기

### 생명중심 시민행동 참여 방법

● 생명중심 시민행동에 참여하는 각 단위는 지역별, 모임(직장, 서클, 단체 등)별, 가족 단위로 구성하고 이들 각 단위가 독자적, 수평적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소통하고 연대합니다.

(개별 참여로 하지 않는 이유는 각 단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생명중심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과제를 찾고 합의하는 과정 자체가 일차적 행동이고 이 운동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 각 단위의 고유 명칭으로 '생명중심 사회를 위한 ○○시민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중심 철수네 시민행동', '생명중심 무등어머니회 시민행동' '생명중심 한살림 과천 시민행동' 등으로 하여 제안 주체를 나타냅니다.)

● 각 단위는 생명행동 요령에 동의하고 생명행동 과제(의제)를 논의, 수렴하고 공유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둡니다.

(이 공론의 장은 생명중심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찾는 학습과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심장입니다. 이의 활성화 여부가 이 운동의 성패를 가늠할 것입니다.)

● 모든 논의와 의결은 공의회(공론의 장)를 통한 직접·숙의민주주의의 원칙과 화쟁의 정신에 따릅니다.

● 각 단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기 위해 각 단위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더 큰 규모의 공론의 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안에는 전체의 공동 행동과제와 제안 단위의 구체적 자기 행동 과제를 포함합니

다. 전체 과제의 공론화와 이를 수렴하고 공유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안자들의 자기 실천 행동 과제가 없으면 관념적이거나 공론화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제가 되어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전국적인 의제의 공론화를 위해 각 단위의 대표가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공의회를 둡니다.
- 생명중심 시민행동 학교/교실/프로그램/학습모임 등을 각 단위별로 둘 수 있습니다.

(시민행동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각 단위마다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중심 시민행동 무등어머니학교’, ‘생명중심 시민행동 과천학부모교실’ 등을 운영하여 생명중심 사회 만들기에 대해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 실행 방법

이 제안이 실행되기 위해선 먼저 여기에 동의하는 그룹(모임)에서부터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제안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의하는 그룹들이 상호 네트워크를 통하여 소통하고 연대하면서 각 지역·영역별 1차 플랫폼 역할을 담당해 간다면 이 운동을 전국적인 연대망으로 넓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각 지역 단위에서 생명중심 시민행동에 참여하는 종교계가 일차적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풀뿌리 지역공동체가 지역 실천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생명중심 시민행동은 어머니, 여성, 청소년, 학부모들이 주축이 되고 이를 종교계, 교육계가 뒷받침하며 시민사회단체가 그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가 되면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동력을 모아내어 근본적인 전환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 여러 구체적 실행방법에 대해선 여기에 참여하는 각 단위에서 중지를 모아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시민행동요령과 시민행동 5대 과제의 시행을 돕기 위한 대화문화, 중도의 길 찾기 등을 위한 학습자료와 학습장(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공하는 일과 시민행동의 취지를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는 순회 강연회의 조직, 문화 예술가들을 주축으로 문화활동 조직화(생명중심 사회의 내용을 시, 노래, 연극, 영상 등으로 표현하여 순회공연)하는 일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활동들을 지원하며 네트워크 형태로 수렴하고 확산

하기 위한 역할과 향후 한중일을 중심으로 국제적 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 등도 주요한 실행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그동안의 우리 사회의 운동 경험과 성과들, 특히 87년 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 민회운동, 대화와 연찬 문화, 화쟁과 야단법석 등의 사례들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생명이 중심인 사회를 꿈꾸며

전환만이 희망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미 120년 전 이 땅의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꿈꾸었던 생명대동세상의 열망, 그 개벽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이루어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지금 여기저기서 개벽의 물결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흐름이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물질중심주의에 바탕한 문명, 돈 중심의 삶과 사회가 이제 한계치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세대의 운명이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돈의 길에서 삶의 길, 그 생명의 길로 바꾸어야 합니다. 돈의 길, 물신의 길에서 생명의 길, 삶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돈보다 우선하는 가치의 회복, 이것이 물신주의로 빙의된 이 시대에 제정신으로, 다시 사람의 길로 돌아오는 진정한 개벽이며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길일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시간보다, 경쟁에 이기기 위해 머리 싸매는 시간보다 생명을 돌보고 사랑하는 데 더 많은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일구기, 이런 삶을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생명중심 사회로 전환하는 길이고 그 삶일 것입니다.

다시 꿈꿉시다. 그리고 설레는 가슴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우리의 이 슬픔을 위로해주고 가슴의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맙시다. 상처 입은 이 가슴으로 상처 받은 가슴들을 서로 품어 안으면서 '생명중심, 사람 먼저!'라고 외칩시다. 그렇게 시민들이 삶의 그 자리에서부터 생명중심 사회를, 그런 세상을 다시 열어 갑시다. 그렇게 열릴 푸른 개혁의 그 세상을 함께 꿈꿉시다. 사람이 사람을 모시고, 한 물건이라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사람과 자연 생태계의 모든 생명들이 서로 돌보고 함께 어울려 사는 생명평화의 대동 세상을. 삶이 기쁘이고 축제인 그 세상을.●

제언 글 이민철\*

# 세월호 이후, 촛불의 마음으로 다시 세우는 마을과 사회



• 광주 시민상주모임 연락 담당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사고로 3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대참사의 장례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국 사회는 하루하루 망각의 늪으로 빠져들어 갑니다. 일상의 버거움, 선거와 월드컵이, 기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망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알 수 없는 의문들로 가득합니다. 아직 분명한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았고 그 무수한 사람들의 목숨이 왜 허망하게 이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다루는 여러 글들을 읽어보면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대동소이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안전보다 이윤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사회 풍조, 무책임과 무능력으로 일관된 국가 관료 구조,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규제를 해체해 가는 경제 만능주의 등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문화와 시스템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근본적 원인 찾기의 반복이 좀 답답해집니다. 관성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듭니다. 모든 것이 신자유주의로, 반생명적 문화로, 국가의 구조적 문제로 귀결되고 나면 좀 허망합니다. 현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월호라는 실체가 사라지고 없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미세한 울림은 찾아들고, 기계적인 마무리 가운데 패배감과 무력감만 커져갑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도블록 조그만 틈 사이 피어난 풀꽃들을 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찌면 거대한 모순 가운데 나 있는 조그만 틈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기계적인 분석이나 대응은 거대한 시스템과 같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을 울리지 못합니다. 아픈 사람들과 함께 우는 마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묵묵히 끈질기게 실천하는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작은 꽃들을 피워낸 현장들을 접하면서 그곳에 우리의 길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 시민상주모임: 생명 자치

지난 6월 9일 일곡, 수완, 첨단에서 마을 촛불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몇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도 나누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나누는 자리였는데 세월호가 남긴 숙제를 해가는 데 만만치 않은 과정이 필요하고, 더 중요하게는 희생자 가족들이 외롭지 않도록 곁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우리 사회의 옛 전통을 되살려 3년 동안의 시민상주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상주'라는 단어가 주는 무거움과 가부장적인 전통 등의 이유로 본래 취지를 살린 다른 언어를 찾아보자고 하였는데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시민상주'만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설명할 분명한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개개인의 분명한 책임과 결단을 이 '시민상주'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6월 16일 22명이 시민상주로 참여한 가운데 첫 모임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갈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1주일이 지난 23일, 특별히 독려하지도 않았는데 80여 명이 SNS 등으로 참여의 뜻을 밝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다양한 이력과 직업을 가지고 있는 시민상주들이 매일 몇백 개의 의견을 주고받는 가운데 모임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으며, 그 의견들 사이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면서 자율성, 연대와 협력이라는 생명 자치를 꽃피우는 중입니다.

##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 그 안에서 꼼꼼하게 대안 찾기

저는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진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 많은 생명이 죽어갔는지 정확히 밝히는 일은 먼저 간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푸는 고리가 될 것이고, 다시는 그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문제부터 거대한 구조의 문제까지 꼼꼼하게 문제점을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국회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은 암울합니다. 이전의 많은 사건처럼 정치 공방만 왔다 갔다 하다 유야무야 될 우려가 생깁니다. 어쩌면 현재의 국회, 특히나 사건의 당사자가 속해 있는 국회가 진실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지 모릅니다. 가족대책위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 또한 그 이유여서 시민상주모임은 7월까지 천만인 서명운동을 집중해서 벌일 계획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국가나 공적 체계 안의 진실 규명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시민들이 자치적으로 진실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고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건의 전 과정을 파헤쳐갈 필요를 느낍니다. 범국민대책위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재판이 또한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6월 10일 광주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고 매주 1회 정도 진행되는 재판에 가족들이 80여 명씩 참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두 번의 재판에서 15명 중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선원은 딱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들 심정이 어떠실지 생각하면 역장이 무너집니다.

시민상주모임에서는 재판에 참여하는 가족들을 지지하고 힘을 드리기 위해 광주정신을 살려 주먹밥을 만들고 음료와 과일을 준비해 귀가하는 버스에 실어 드렸습니다. 법원 근처에서는 피켓을 들고 진실 규명을 외쳤고, 피켓 인간띠로 주변 거리를 에워쌀 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가족들을 위한 귀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본 것은 사람들이 일상의 버거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것을 희생자 가족들과 나누기 위해 기꺼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아픈 사람들이 서로 서로 위로하며 힘을 내고 그 힘으로 먼 길도 충분히 갈 수 있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시민상주모임 채팅방과 SNS에는 매일 여기저기

활동 소식이 올라오는데 마음이 쩡한 일들이 많고, 시민상주들 스스로도 깜짝 깜짝 놀랍니다. 자신들이 한 일에 스스로 감동하는 사람들, 참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 마을 촛불과 새로운 마을 세워가기

세월호 사고 이후 달라진 현상은 촛불이 마을로 들어가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도 4월 29일 처음 촛불모임을 가진 이후 매주 수요일마다 이어오고 있고, 광주 전체적으로는 8개 마을에서 촛불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상주모임에서는 매주 1회씩 마을에서 촛불모임과 서명운동을 진행하자고 제안하고 있고, 새로운 시민상주들이 늘어나면서 마을 촛불도 늘어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을 촛불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엄마들입니다. 열 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안고 있어서 세월호 아이들 이야기만 나와도 눈물이 난다는 사람들이 상주모임과 마을 촛불을 이끌고 있습니다. 촛불이 샅터인 마을에서 켜지고 있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겠지요. 엄마들과 아이들이 주축인 마을 촛불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모르지만 전보다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대 자본주의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우정과 보살핌의 관계망은 하나씩 망가져서 이제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이윤의 관계망이 채워가면서 경제적 인간은 완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돈이 없으면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십대들은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을 동경하고, 많은 돈을 준다면 교도소에 10년쯤 있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해댑니다. 돈을 숭배하는 자본주의의 절

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을 회복하는 것은 이윤 동기를 갖지 않는 관계, 즉 우정과 호혜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돈이 매개가 되지 않고도 상부상조하며 삶을 풍요롭게 꾸려갈 수 있는 관계망, 그것이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을이 붕괴되다 보니 돈이 없이는 못 살게 되었고, 거꾸로 마을을 회복한다면 적은 돈으로도 삶을 충분히 영위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극단적으로 개인이 삶을 책임져야 하는 시스템과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라도 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일하지만 공공의 재산과 공유지대는 점점 허물어지고 개인의 삶의 기반 또한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소유하는 공유지대를 늘리고 공공의 영역을 잘 지켜간다면 혼자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을 촛불이 마을을 새로 세워가는 일과 잘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함께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곡마을에서도 지난 4월 29일 이후로 매주 촛불모임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20여 명의 주민들이 나와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한 고등학교 교사회가 주축이 되어 열었던 마을 추모음악회에서는 주민, 교사, 신부님과 수녀님들까지 300여 명이 모여 추모와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마을 촛불은 '삶을 가꾸는 일곡마을회의'가 진행하고 있는데 마을에 있는 여러 모임들과 생협들의 회의모임입니다. 작년부터 주민인권학교도 하고 마을 주민총회 격의 원탁 토론도 하면서 마을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어린이

와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자고 원탁토론에서 결정했습니다. 일곡마을회의는 촛불모임과 더불어 주민들의 이야기마당을 펼치고, 마을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중입니다. 논밭을 밀어버리고 그 위에 인공적으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와 주택 단지의 전형적인 도시 공간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만들고 숨을 불어넣어 우정과 호혜로 연결된 사람의 마을을 세우는 일을 해 가는 중인데, 촛불모임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 마을의 방향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제시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 생명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세월호 사고는 사회적 재난, 다시 말해 인재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 방향으로 진행되면 그러한 재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재난이라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 더 나이 어린

생명들의 죽음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젊은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삶의 질을 떠나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삶을 계획한다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일 테니까요.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숙제는 생명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사회 곳곳의 안전을 다시 점검하고 개인의 대처 능력을 키우는 과정은 필수이겠고, 여기에 더해 서로의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는 수십 개의 핵발전소입니다. 그 중 하나만 사고가 나도 한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입니다. 탈핵, 핵을 벗어나는 일은 삶의 안전을 보장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고 세월호 이후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 10대와 20대들의 선택

저는 대안학교와 청소년 공간에서 10대와 20대들을 만나고 있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친구들을 떠나보낸 후 광주에서도 수많은 10대 청소년들이 촛불 모임과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와 기성 사회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더해 존재의 거처인 생명에 대한 불안까지 안고 살아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20대는 고실업과 불안 사회, 무한 경쟁 속에서 스펙 쌓기와 공무원 시험 등 개인적 탈출구를 찾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반한 것이었습니다. 탈출구를 찾은 그 몇 사람 또한 존재의 불안은

마찬가지 상황이니까요. 개인적인 탈출구 찾기가 아닌 모두를 위한 탈출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적어도 세월호 이후 10대들을 바라보는 부모들과 교사들의 따뜻한 시선이 유지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말이죠.

세월호 사건을 겪은 10대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처지에서 개인적인 안전과 미래를 위한 더욱 극단적인 경쟁을 선택할 수도 있겠고, 미래보다 오늘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사람들도 나타낼지요. 미래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력과 패배감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테고 전망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10대와 20대들에게는 비밀 언덕이 필요합니다. 삶을 의지하고, 세상의 문법을 벗어나 탈출을 감행하는 용기와 뗏목과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곳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늘 그랬지만 지금은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되었죠. 가장 주목할 수 있는 버팀목은 대안학교와 마을, 청소년-청년 공간들이고, 탈출해서 살고 있는 어른들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대안적 공간과 대안의 삶을 살아가는 어른들이 만들어 가는 관계망이 중요한 지지대인 셈입니다.


10대를 주로 만나는 청년 활동가가 했던 고백이 기억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길을 가라고 10대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고생이 많을 텐데 하는 걱정 또한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기반이 붕괴된 상황에서 20대가 느끼는 사회적 불안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붕괴된 땅에 10대와 20대의 지지대를 세우는 작업과 그들에게 자신 있게 주류 문법을 탈출해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돈이 아닌 인간의 가치와 우정을 피워가도록 지원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맺으며

삶이란 원래 만만치 않은 것이고, 고생하는 것은 어딜 가나 당연한 것이니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어디로 정하느냐는 것이겠지요. 세상 살이 돈이 다 해결한다고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아니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몇 안 되니 초등학생들도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인간의 안전이, 존엄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한 목소리로 해야겠지요.

이제 세월호가 남긴 숙제를 하나씩 꼼꼼히 해 나갈 참입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따져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세월호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이 당장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돈에 놀리고 돈에 포위되어 살지 않도록 마을과 관계망을 회복하는 일과, 10대와 20대 청년들이 새로운 길을 과감히 개척할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세우고 자신 있게 새로운 삶을 권하는 것까지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요새 분명하게 배운 게 있다면 현장을 통해 창조적으로 현실을 돌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도블록 사이에 묘하게 꽃을 피운 풀들처럼 각자가 삶의 터전에서 묘한 돌파구를 열어 가면 좋겠습니다.●



특집

# 무위당과 새로운 사회운동

46

원주그룹과 사회운동적  
전환의 장면들  
김소남

56

새로운 사회운동,  
생활공동체로부터  
이경란

68

생명운동과 종교적  
이상주의  
서영표

82

무위당과 모심의  
지역운동  
이영우

92

한국형 생태주의 운동의  
태동과 진화  
구도완

104

무위당과  
여성적 사회운동  
주요섭

# 왜 무위당과 사회운동인가?



무위당 장일순이 세월호 참사를 접했다면 무슨 말을 전했을까? 아마도 금세 그의 눈이 젖었을 것이다. 아마도 말없이 손을 꼭 잡아주셨을 것이다. 감정이입 때문만은 아니다.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세월호 승객들의 영혼과 무위당의 영혼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무위당 장일순(1928~1994)이 하늘로 돌아간 지 20년이 되는 해다. 그는 세상의 소금이였다. 1970년대에는 민주화운동의 보이지 않는 중심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는 생명운동의 스승으로, 밑으로 밑으로 기어 평생을 민초들과 함께했다. 무위당은 일가를 이룬 탁월한 서예가이기도 했고, 동학과 서학의 진리를 ‘생명’을 열쇠말로 재해석한 사상가였으며,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협동운동의 선구적 지도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무위당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그는 ‘살리는 사람’, 즉 생명운동가였다.

유신정권에 저항해 목숨을 건 싸움을 전개하던 1977년 즈음 하나의 깨달음이 그에게 왔다. ‘그대가 나’라는 새롭고도 깊은 마음이 그것이다. 이후 80년대 초까지 수년 동안을 원주의 벚들과 사색하고 토론하면서 ‘삶의 우주적 영역’을 탐색한다. 생과 사가 공존하는 생명의 역설을 발견한다. 기존의 세계에 대해 ‘아니다’라고 각성하며(覺非), 단호히 ‘엑서더스(대탈출)’를 감행한다. 그리고 1986년 12월, 한살림의 창립과 함께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 ‘생명의 길’이 그것이다. 무위당에게 생명운동은 새로운 삶의 다른 이름이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생명운동

“쓰러진 이웃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운동

“계산하지 마라” 생명운동

“그대가 나” 생명운동

“옆으로 답례” 생명운동

“하나가 되는” 생명운동

“자애와 검약과 겸손”의 생명운동

“혁명은 보듬어 안는 것” 생명운동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생명운동

무위당과 원주에서 씨앗이 뿌려진 모심의 생명운동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사회운동이라 하기에 충분하다. 이를테면 한국 사회운동의 대전환이었다. 생명이라는 화두를 전 사회에 던지며 새로운 사회운동 이념의 지평을 열었고, 체제변혁 중심이 아닌 생활 중심 사회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사회운동의 변방 원주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일깨웠으며, 새로운 차원의 협동운동 모델을 탄생시켰고, 영성에 기초한 사회운동의 싹을 틔웠고, 한국형 생태 환경운동의 탐색에 큰 영감을 주었다. 원주의 생명/협동운동이 무위당 개인만의 것은 물론 아니다. 이른바 진

정 원주그룹 전체의 협동적 실천의 산물이다. 지학순 주교와 김지하 시인, 김영주 선생과 박재일을 비롯한 수많은 활동가들이 원주의 생명운동과 협동운동을 탄생시키고 또 키워냈다.

원주보고서를 통해 생명운동이란 말이 세상에 나온 지 정확히 32년, 무위당이 생명나라로 돌아간 지 20년,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전환기에 처해 있다.

무위당은 당대에 이미 문명의 전환을 논하였거니와 바야흐로 의식의 전환, 삶의 전환, 사회의 전환은 현실의 과제가 되었다. 이념형 사회운동의 시대가 갔으나 새로운 사회운동의 철학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한 한때 유행처럼 지면을 장식했던 시민운동도 급격히 힘을 잃었다. 협동조합 열풍이 불고 있으나 정부의 입법과 제도적 지원 속에 체제의 일부로 편입되는 현실이다. 요컨대 한국의 사회운동은 정녕 새로운 길을 탐색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본 세상에  
사람이  
그나마  
살아  
있을  
때  
그나마  
살아  
있을  
때  
장학순  
2014. 9.

## 다시 무위당과 원주로부터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을 배운다

시인 김지하는 장일순을 일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다. 평소 깊은 존경의 마음을 나타내 온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은 그를 두고, “음<sub>陰</sub>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장일순은 스스로 ‘무위당<sub>無爲堂</sub>’이라 이름 불리기를 바랐다.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를 빌려 말한다. “나의 길은 무위일 뿐이다(吾道 無爲而化).”

무위당은 “생명은 하나”라는 마음과 “함<sub>含</sub>이 없는” 행함, 즉 자애와 무위는 둘이 아니라고 말한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친 사람이라면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바로 ‘나’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장일순에게 무위는 “계산하지 않는 참 마음”이다. 그렇다. 계산이 없으면 “자유로워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걱정도 사라지는 것”이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고, 자신을 버림으로써 싹이 트고 꽃이 열리고 열매를 맺는다.

바로 이것, ‘행함 없는 함<sub>含</sub>’이 무위당의 생명운동이다. ‘수많은 인연 덕분에 이루어지는 생명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작은 나를 축대로 이루어지는 ‘참나’의 실현이 생명운동이다. ‘덕분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숨겨진 하나됨의 실현이 ‘무위<sub>無爲</sub>’의 생명운동이다.

세월호의 슬픔과 충격을 가눌 수 없는 2014년 6월, 다시 무위당에게 묻는다. 무위당과 원주라는 거울을 통해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가 갈 길을 탐색해본다.●



## 원주그룹과 사회운동적 전환의 장면들

### 원주의 생명협동운동과 전환점

최근 원주지역은 민간이 주도하는 협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각계의 조명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원주지역의 협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원주지역 협동조합운동의 1세대라 할 수 있는 원주그룹이 전개했던 1960~80년대 협동운동과 생명운동에서 크게 기인한다.<sup>1)</sup>

1960~80년대 원주그룹이 전개한 생명협동운동에 있어 세 번의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 시기는 바로 '1965년', '1973년', '1982년'

---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소, 2011~2012년도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사 연구지원사업 "원주지역 협동운동과 민주화운동"과 "원주지역의 협동운동과 생명운동(1960-80년대)"을 (사)모심과살림연구소와 (사)무위당사람들과 공동으로 진행하였음.

1) 1960년대 중반~1970년대 반박정회정권운동을 전개하면서 형성된 원주지역의 사회활동가들을 1980년대 전반 외부에서 이른바 '원주캠프'라고 불렀다. 본 글에서 '원주그룹'이라고 함은 1972년 8월 남한강유역 대홍수를 계기로 1973년 1월 재해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펼친 부락개발운동을 기반으로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했던 인물들에 한정해서 지칭하고자 한다. 한편, 본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에 기초해서 작성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과 근거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김소남, 2014 「1960~80년대 원주지역의 민간 주도 협동조합운동 연구 : 부락개발, 신탁, 생명운동」, 연세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이다. 1965년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세계교회혁신운동에 따라 원주교구가 설정되고 지학순 주교가 부임한 해였다. 1973년은 전해 8월 남한강유역의 대홍수를 계기로 재해대책사업위원회가 창설되고 농촌과 광산지역에서 남한강유역수해복구사업(이하 남한강사업으로 약칭)이 착수되던 해였다. 1982년은 원주그룹이 추진해 왔던 부락개발운동과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이농(離農)의 급증, 농약·화학비료 등의 남용으로 인한 농촌 생태환경의 위협 등에 따라 새로운 운동의 모색 과정을 거쳐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문건이 제출된 해였다. 본 글에서는 세 시기를 중심으로 그 운동적 전환의 장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원주교구의 창설과 신탁운동

원주지역 생명협동운동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역사적 시기의 하나는 1965년이다. 이 해에 원주교구가 설정되었으며, 45세의 젊은 지학순 신부가 초대 주교로 선임되었다. 원주교구의 설정과 지학순 주교의 부임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 역사적 배경에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개최와 세계교회혁신운동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교황 요한 23세가 제2차 공의회 개최를 공식 선언한 것은 1959년 1월이었다. 공의회는 그로부터 3년 9개월 뒤인 1962년 10월 개최되었으며, 1965년 12월 폐막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사목현장에서 “구제해야 할 것은 인간이며, 개혁해야 할 것은 인간사회”라고 밝혔듯이 당시 세계 정세에서 핵병기를 보유한 인류 상호간의 영속적인 ‘지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과 빈부의 차가 극심한 국제사회에 정의의 합당한 질서를 실현하는 것, 분열된 교회 내의 일치를 가져오는 것 등 세 가지에 핵심 목적이 있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채택한 혁신적인 현장과 교령, 그리고 선언은 세계

교회를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공의회 논의에 참여했던 전 세계 각지의 주교들은 그들 나라의 교구로 돌아가 각 교구 내 평신도운동과 교회일치 운동, 그리고 교구가 소재했던 지역과 국가를 둘러싸고 직면했던 사회적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세계 천주교회는 공의회 이전의 폐쇄적·권위주의적 교회상에서 벗어나 평신도들이 사제와 함께 교회 혁신과 사회 참여에 적극 나서는 교회상으로 변모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하여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주교들이 앞장선 천주교회의 혁신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70년 부조리한 정치와 사회 현실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주창한 필리핀 주교회의의 공동성명서, 1971년 세계주교대의원회가 공포한 「세계의 정의」, 1973년 돔 헬더 까라마 대주교가 주도한 브라질 주교단의 인권 선언, 1974년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인권과 화해」 등을 통해 전 세계 주교들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기반으로 교회 혁신과 사회 현실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주도하였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한국 천주교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1965년 3월 원주교구의 설정과 지학순 주교의 선임으로 나타났다.<sup>2)</sup> 지학순 주교는 여러 분야에서 낙후되고 지극히 고식·보수적이었던 원주교구 내 천주교회를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따라 자체 혁신하면서 새로운 교회상을 만들어가야 할 중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지학순 주교는 원주교구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실현하고 평신도 중심의 교구가 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갔다. 먼저

---

2) 제2차 바티칸공의회 개최와 세계교회혁신운동이 한국 천주교회에 미친 영향은 먼저 1962년 3월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한국 천주교회가 자립교회로 성장하였다는 인식하에 한국교회에 교계제도를 수립한다는 교서의 반포로 나타났다. 그 결과 서울, 대구, 광주대목구가 대교구로 승격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원교구와 원주교구, 마산교구, 안동교구, 제주교구 등이 연이어 창설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원주교구의 지학순 주교뿐만 아니라 수원교구의 윤공희 주교, 마산교구의 김수환 주교, 안동교구의 드봉 주교 등과 같이 이들 교구의 창설과 주교 선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63년 로마 교황청에 의해 수원교구가 창설되면서 초대 주교로 윤공희 신부가 선임되었으며, 1966년 5월 마산교구의 초대 주교에 김수환 신부가 임명되었다. 1969년 5월 대구교구에서 분리된 안동교구의 초대 주교에 당시 파리외방전교회 한국지부장이자 대전교구 상서국장이었던 드봉 레나드(Rene Dupont) 신부가 임명되었다. 이 시기 이들 주교들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한국사회와 각 교구 내에서 실현시켜 나가면서 가톨릭 내 혁신세력을 형성시켜 나가고 있었다.

자신을 대신해 공의회 정신에 따른 주교의 구상을 추진할 인물과 조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원주지역 혁신 세력의 중심인물이었던 장일순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를 통해 원주교구가 평신도 중심의 교구가 될 수 있는 조직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학순 주교는 여전히 교회가 성직자들에 의해 존립한다는 전통적 교회관에 젖어 있는 사제와 신자들의 의식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평신도운동’이자 ‘평신도와 성직자의 협력형 신심운동’이었던 꾸르실료운동에 기반한 평신도 교육과 단체 조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967년 8월 지학순 주교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꾸르실료에 장일순이 참여토록 했으며, 제3차 꾸르실료에 최창규 원동성당 주임신부를 파견함으로써 평신도에 입각한 교구상 정립을 위한 꾸르실료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꾸르실료교육의 활성화는 그 특성상 사제와 평신도가 차별 없이 사도직을 행한다는 의미에서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가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지학순 주교는 부임 초기 원주교구가 관할하고 있었던 농촌과 광산촌, 어촌 지역을 둘러보면서 대부분의 농민과 광부, 서민 등이 열악한 사회경제적·문화적·지리적 조건하에서 곤궁하게 살아가는 현실을 보았다. 지학순 주교는 전교도 중요하지만 우선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으며, 고리채에 시달리던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였다. 당시 지학순 주교는 1959년 7월 청주대목구 제임스 파디(James V. Pardy) 주교의 비서신부와 1962년 4월 부산 초당동성당의 주임신부로 봉직하면서 지켜보았던 부산 지역의 신협운동을 교구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 1966년 11월 원동성당 내 신협 창립을 필두로 황지신협(1966.11), 문막신협(1966.12), 단구동신협(1968.2), 삼척신협(1969.10)이 설립되도록 추동하였다.<sup>3)</sup>

---

3) 원주그룹의 신협운동이 본격화되기 전인 1962년 8월 강원도지역에서 당시 춘천교구 소속의 장성성당 이영선 신부의 주도하에 태백신협(이사장 조성두, 창립조합원 33명), 철암 요셉신협(최명섭, 40명), 황지신협(19명) 등

1969년 1월 원주그룹은 원주지역 신협운동의 발전적 전기를 마련하고자 신협연합회의 지원하에 원주 가톨릭센터에서 조합원 강습회와 임원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원주그룹은 이를 통해 다른 지역과 달리 강원도만이 강원지구평의회와 주재 지도역이 부재해 신협운동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강원도 지역의 신협운동을 주도할 조직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1969년 10월 원주그룹은 원주교구 내 진광학교의 협동교육연구소를 설립했으며, 1972년 4월 협동교육연구소가 주도한 원주원성지구 신협임원 강습회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1972년 6월 12개 단위조합 중심으로 신협 강원지구평의회가 창립되면서 원주그룹은 강원 지역의 신협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였다.<sup>4)</sup>

## 재해대책사업위원회의 창설과 협동운동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던 원주그룹의 신협운동이 그 지역적 범위를 3개 도 13개 시군, 80~90여 개 농촌부락과 10여 개 탄광지부를 대상으로 확대한 역사적 계기는

---

3개 신협이 설립 운영되고 있었다. 당시 이영섭 신부는 사목현장에서 광산지역의 비참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목도하면서 가난 추방과 인간성 회복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신협운동에 주목하였고, 협동조합교도봉사회를 지원받아 3개 신협을 설립하였다. 당시 이들 신협들은 장성분당을 중심으로 광산공소였던 철암과 황지공소의 신자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던 이영섭 신부는 원주교구 설정 후 지학순 주교와 함께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담은 교회혁신운동과 교회일치운동에 앞장서 활동하였다.

- 4) 이 시기 신협운동의 사상적, 이론적 기반은 안티고니쉬운동의 지역사회개발운동이었다. 안티고니쉬는 캐나다의 동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노바스코시아(Nova Scotia) 반도 내의 소도시이다. 1919년 대공황 이후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던 안티고니쉬 지역주민들이 비참한 생활상태에 빠지자 그 지역의 세인트 프란시스 세비아 대학(St. Francis Xavier University)의 톰킨스(James Thomkins)와 코디(M. Coady) 교수 등이 중심이 되어 농어촌의 사회구조적 제반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21년 민중학교를 개설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자립 기반 마련과 지역공동체운동을 전개하면서 안티고니쉬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M. Coady, 유영 역, 1968 『안티고니쉬운동』). 1950년대 말~1960년대 초기 신협운동을 이끌었던 장대익 신부와 가브리엘라 수녀는 모두 세비아 대학에서 안티고니쉬운동을 직접 배우고 귀국한 후 이에 기반해서 신협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 시기 신협운동의 사상적·교육적 이론적 기반이었다.

1972년 8월 남한강유역의 대홍수 발생과 1973년 1월 창설된 재해대책 사업위원회에 의해 남한강사업이 추진되면서였다. 1972년 8월 남한강유역에서 대홍수가 발생하자 지학순 주교는 원주교구 관내 농촌과 광산지역의 수해를 입은 농민과 광부들을 구호하고자 자체적인 구호 활동에 나서는 한편, 세계 각국의 천주교 외원기관에 구호를 위한 자금을 요청하였다. 1972년 9월 서독의 가톨릭 외원기관이었던 미제레오가 원주교구의 구호 요청에 화답하면서 관계자 3명이 원주를 방문해 수해 지역의 비참한 참상을 둘러볼 수 있었으며, 자금 지원을 협의한 결과 당시 단양군 1년 예산에 해당되는 240만 마르크(약 3억6천만 원)를 지원키로 결정되었다.

1972년 말 지학순 주교는 서독의 대규모 외원 자금을 기반해 농민과 광부들을 위한 구호사업을 추진하되, 소위 '거지 근성'을 기르는 등 기존에 교회의 무상 구호를 통해 나타난 폐해를 지양하면서 수해민이 '자조',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국대 부설 농업문제연구소와 고려대 부설 노동문제연구소, 한국가톨릭농민회 등 제 전문기관에 요청하였다. 이들 전문기관은 논의 끝에 먼저 천주교의 범위를 벗어나 정부기관 및 사회기관의 대표들도 참여하도록 하는 제3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수해를 입은 농민과 광부들이 부락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적·협동적 사업을 구상하고 협동조직체를 결성할 때 초청 교육 이수생 전제로 그 협동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며, 그 지원 자금은 무이자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1973년 1월 지학순 주교를 중심으로 한 원주그룹은 남한강사업을 추진할 재해대책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원주교구 소속으로 하되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1973년 초 재해대책사업위원회는 부락 개발사업과 광산지역 장기구호사업 방안 마련을 위해 농업문제연구소와 노동문제연구소에 농촌과 광산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이들 기관들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한강사업의 사업 원칙과 자금 지원 원칙이 결정되었다. 또한 남한강사업 중 세부 사업인 농촌지역의 전담

복구사업과 부락개발사업, 광산지역의 장기구호사업 등에 이들 전문가들의 제안이 원용되어 적용되면서 농민과 광부 주도의 협동운동이 본격화될 수 있었다.

1970년대 원주그룹은 한우지원사업과 원주원성 수해복구사업, 광산소비조합 육성사업과 농촌소비조합육성사업 등의 제반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락개발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갔다. 특히, 원주그룹은 남한강사업 초기부터 농촌 지도자 교육과 광산 지도자 교육, 회계실무자 교육, 부락 대표자 교육, 부녀자 교육 등의 교육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갔다. 원주그룹은 교육운동을 통해 농민과 광부들을 해당 지역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대신해 지역 자립과 지역공동체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주도층으로 형성시키고자 하였고, 활발한 현장교육을 통해 협동운동의 참여층이 폭넓게 형성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원주그룹은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흐름 속 관계 협동조합운동과 새마을운동이 추진되는 기반 위에서 농촌과 광산지역에 새로이 형성된 농민·광산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수만 명에 달하는 지역민의 참여하에 민간 주도의 부락개발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갔다.

##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

1980년대 초 원주그룹은 내부적으로 1970년대 부락개발운동에 기반해 펼쳐온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을 모색하는 일련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1982년에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문건을 내놓았다. 이 문건은 1970년대 후반 원주지역의 반독재투쟁과 협동운동을 추진한 속에서 부딪쳤던 제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모색을 거쳐 형성된 중요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었다. 이 문건은 출옥 직후인 1980년 12월부터 원주교구 기획위원 신분이었던 김지하가 장일

순의 권유에 따라 사회개발위원회의 주요 평가회의에 참여하면서 1981년 9월경 초안이 작성되었고, 장일순과 사회개발위원회의 상담원들이 이를 검토·수정하여 1982년 초 완성·제출하였다.<sup>5)</sup>

1970년대 원주지역에서는 농촌과 광산지역을 무대로 한 재해대책사업위원회의 부락개발운동과 협동조합운동, 이창복이 주도한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 김지하를 중심으로 한 청년학생들의 민주화운동, 지학순 주교를 중심으로 한 천주교의 원주문화방송 부정부패반대운동 등이 전개되고 있었다. 또한 1974년 7월 민청학련 사건에 따른 지학순 주교의 구속과 김지하의 체포, 1976년 1월 원주선언과 3월 명동선언으로 인한 신현봉 신부의 구속 등 굵직한 정치적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원주교구 신부들을 포함해 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구속되었다. 당시 원주그룹은 한편으로는 구속된 인사들의 석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자칫 소모적일 수 있는 끝없는 정치투쟁으로부터 장기적인 싸움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었다.

재해대책사업위원회가 농촌지역에서 추동하였던 협동조직체인 작목반의 구성과 부락총회의 활동, 그리고 농촌신협에 기반한 협동조합운동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급증하던 이농 현상 탓에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농업 또한 오로지 생산성 증대라는 한 가지 목표를 배타적으로 추구하도록 강제된 결과 거의 모든 농토가 엄청난 양의 화학비료와 농약 살포로 생명력을 잃어갔으며, 농약으로 희생되는 농민이 급증하고 생태계 교란이 극심해지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1972년에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과잉 인구나 식량 부족,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등의 문제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음을 경고한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가 발표되고 같은 해 스톡홀름에서 현대 산업문

---

5) 1973년 1월 창설된 재해대책사업위원회는 1979년 9월 사회개발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1983년 11월 사회사업국 사회개발부로 개편되었다.

명의 위기를 경고한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f the Human Environment)가 개최되는 등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와 인식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원주그룹을 이끌었던 장일순은 1940년대 중반 포교소를 운영했던 원주읍의 오창세를 통해 동학사상을 접한 후 이를 내면화하고, 1970년대 후반 해월 사상을 주목하고 재해석하면서 맑스의 계급사상에 기반한 운동론과 무한 생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연의 한계에 대한 성찰, 경천(敬天·경인(敬人)·경물(敬物) 등 자연의 위격을 높여 공경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발전시켜 '생명의 세계관'을 마련해 나갔다. 원주그룹에서 1970년대 후반 개시된 생명운동으로의 전환 과정 중 '10·26'에 의한 유신체제 붕괴와 신군부에 의한 5공화국 성립, 그 과정에서 발생한 '5·18'로 인한 충격과 성찰은 내·외부에서 운동 노선을 둘러싼 격심한 논쟁을 전개시켰으나 결과적으로 그 변화의 속도와 폭을 크게 만드는 작용을 하였다.<sup>6)</sup> 1980년대 초 김지하는 장일순의 권유에 따라 박재일과 함께 '생명사상세미나'를 기획하였고, 여기에 개신교 계열에서 황인성과 나상기, 가톨릭 계열에서 정호경 신부와 제정구 등이 참여하면서 생명운동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 나갔다.<sup>7)</sup> 더 나아가 김지하가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의 초안을 쓰고 이것이 원주그룹 내에서 널리 유통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196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된 원주그룹 내에서 정서적·문화적으로 공유하되 모호하게 공존했던 인식론과

6) 당시 광주항쟁이 재야·학생운동세력·소장학계 등에 커다란 충격과 변화를 주면서 1980년대 전반 반미사상과 (반)식민지론, 계급혁명론에 입각한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스탈린주의, 그리고 주체사상 등이 급격하게 도입되었으며, 운동선상에서 극단적 무장투쟁론과 전위당론, 수령론 등이 급격하게 분출되고 있었다. 이러한 5공화국시대 극한적 투쟁론은 원주지역의 민주화투쟁세력 내에 형성된 생명운동의 흐름과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으며, 1980년대 초 원주그룹 내에서도 '개량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나타나고 있었다(2011년 10월 1일, 김상범 (주)살림농산 대표 구술(원주 밝음신협 4층 무위당기념관). 그러나 원주그룹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문건으로 자신들의 향후 운동방향을 정리해 나가고 있었으며, 1980년대 중반 원주소비조합과 한살림농산의 창설, 한살림모임의 구성과 한살림선언을 주도하면서 생명운동에 입각한 '생활협동운동'과 '생명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었다.

7) 김지하, 『흰 그늘의 길 3』, 학고재, 44-45쪽, 51-54쪽, 2003.

운동론의 차이가 이 시기에 와 생명운동으로 체계화되며 하나로 근접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원주그룹에 의해 체계화되어 나타난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은 1980년대 전반 모색 기간을 거쳐 1985년 6월 원주소비조합과 1986년 12월 한살림농산 출범, 1988년 4월 한살림소비조합 창립 등 생명운동에 기반을 둔 도농직거래운동에 기초한 소비조합운동으로 나타났으며, 1989년 11월 한살림모임이 발표한 「한살림선언」으로 이어져 한살림운동의 주요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sup>8)</sup> 요컨대 1980년대 초 발표된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과 1980년대 중후반 전개된 생명운동은 1960~70년대 원주그룹의 부락개발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전개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배태된 집단적 운동의 결과이자 원주그룹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

8) 한살림모임, 『한살림선언-생명의 지평을 바라보면서』, 1989; 한살림모임, 『문명의 위기에서 생명의 질서로』, 『더불어 사는 한살림』, 1990, 45-66쪽; 모심과살림연구소, 『죽임의 문명에서 살림의 문명으로-한살림선언 다시 읽기』, 도서출판 한살림, 2010.



## 새로운 사회운동, 생활공동체로부터

### 생명과 생활에 관한 오래된 새로운 언어들

요즘 많이 듣는 말들이 있다. 일상, 생활(세계, 생활권, 정치), 여성, 사회적 주부, 이웃, 주민, 주민자치, 마을(학교, 문화, 경제, 복지, 안전망, 미디어, 계획, 활동가), 로컬/글로컬, 풀뿌리운동,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커뮤니티(디자인, 비즈니스), 도시농업, 공동체, 네트워크, 퍼실리테이터(촉진자), 생명, 돌봄, 주제, 관계, 소통, 공유, 공익성, 통합, 통섭, 융합, 지속가능성, 건강, 힐링, 참여, 평등, 자유, 자립, 협동, 연대, 호혜, 평화, 공정, 사랑, 정직, 존중, 지금 여기, 어우러지는, 즐거운, 행복한, 작은, 평범한, 따뜻한,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예쁜, 활기찬, 고운, 부드러운, 다정한, 함께, 두루, '한 사람'..... 많이 익숙해진 말들이다. 또한 이 말들이 사람들 속에서 실현해가야 할 가치와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는 데 수긍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

\*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이 말들처럼 사는 세상을 떠올리면 웃음을 짓게 된다. 서로를 믿고-그 전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정직하며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 내가 사는 마을 안에 착하고 안정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호혜적인 관계망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면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떨까? 집 한 채를 위해 평생을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 교육을 위해서 평생 노예처럼 살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며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한다면, 어린 아이들과 몸이 불편한 노인들도 이웃들의 협동적 돌봄관계망 속에서 보살핌을 받는다면? 이런 상상, 재미있다. 또한 지금 우리는 이런 상상이 실현 가능하리라는 기대에 설레어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이 말들을 이렇게 당연하게 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을까? 이 말들이 거리낌 없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말일까? 약 2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이 언어들(거대담론의 하위담론이거나 그것을 보완하는 용어, 또는 강력한 지배질서에서 살아가기 위한 자구적 노력,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유토피아 혹은 영적 세계를 만날 때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 말들을 꿈꾸며 수많은 사람들은 피를 흘렸다. 마을공동체운동이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 돌봄이 실현되는 사회, 자유로운 교육 등의 말은 소수의 대안을 꿈꾸는 이들의 세계에서 정책 언어 또는 사회운동의 언어로 사용되었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생활세계라는 밑바닥에서부터 세계를 변화시키는 말이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대안을 나타내는 언어가 되었을까?

세월호의 참극을 보면서 아직 이 언어들(이 세상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으며, 여전히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음을 확인한다. 생명과 윤리, 돈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정치와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삶의 구석구석과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 일상적인 의사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자연스럽게 생명 가치가 녹아들도록 하기 위해

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곱씹어보게 된다.

아직은 멀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간의 노력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분명하다. 근현대 150년의 시간 동안, 짧게는 한국전쟁 이후 죽음과 폐허에서 삶을 복구시켜왔던 시간들, 더 짧게는 근대화와 산업화 속에서 새롭게 사람과 생명과 민주주의를 일깨워 왔던 선배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기계와 돈과 폭력의 정치경제에 대한 투쟁, 그것을 기억하고 계속 이어왔던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여기에 올 수 있었다. 최소한 사회운동 진영을 비롯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은 변하고 있다. 모든 존재의 생명 가치가 사회의 윤리와 세상의 기초가 되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평화로운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가려는 운동으로 수렴된다는 관점과 감각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본다. 세월호 참사를 겪는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이유이다.

그 전환의 과정을 이끌어 온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가운데 무위당을 비롯한 원주 활동가들의 제안과 실천은 두드러진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길의 가능성을 세상에 알리려 애쓰고 스스로 대안을 만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잇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 ‘생명운동에 관한 원주보고서’의 재발견

‘생명 가치’가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생명운동은 언제부터 사회적으로 발언되기 시작했을까? 그 답으로 30여 년 전 1980년대 전반기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주목한다. 하나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분기점이던 ‘서울의 봄’과 ‘광주’, 또 하나는 ‘생명’의 화두가 시작되었던 ‘원주보고서’의 제안이다.

광주항쟁 이후 사회운동은 이념과 계급주의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고, 사회운동 세력들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사회 모순을 파헤치는 ‘사회구

성체논쟁'에 몰입했다. 그 결과 군부 독재와 독점 자본, 미국(외세)의 문제가 분단체제와 깊게 얽혀 있는 사회구조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런 체제의 전복과 '권력' 장악을 위해서 계급운동으로서의 민중운동에 기반한 투쟁적·혁명적 운동이 필요함이 제안되었다. 이 방향에서 각 분야의 사회운동 세력들이 조직되고 재편되어 갔으며, 사회운동은 정치투쟁을 중심으로 급진화되어갔다.

지배적 사회운동의 논쟁 구도와 달리,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중심지였던 원주캠프는 다른 방향으로 사회운동을 전환하기를 제안하였다. 1982년에 발표한, 일명 '원주보고서'라 불리는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sup>1)</sup>은 '생명'을 중심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사회운동도 생명운동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제안을 간단히 살펴보자.

원주보고서는 현대세계를 '생명을 죽이는 죽음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계'로 규정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자들로 "독점자본주의자들, 제국주의자들, 사회제국주의자들, 신식민주의자들, 사회주의 파시스트들, 무기상인들, 관료주의자들, 정상배들, 매판자본가들, 극좌, 극우 모험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 독재자들, 왕조 공산주의자들, 국수주의자들, 분파주의자들, 부정과 악덕에 눈감는 종교인들, 도구화된 이성을 섬기는 지식인들"을 지목했다.

그들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폭탄과 무기를 만들어야 하고, 자식을 올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버가 불의와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쓸모없는 새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요긴한 옛것을 파괴해야 하고, 원조와 자선을 베풀기 위해 먼저 착취해야 하고, 더 튼튼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오염된 음식을 먹고 마셔야 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복지와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확실한 현재의 복지와 건강과 안전을 포기해야 하고 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더 기계화된 세계를 만들어야" 하는 모순된 방법으로 스스로를 파

---

1) 이 글은 김지하의 『남녘땅 뱃노래』(두레, 1985)에 "삶의 새로운 이해와 협동적 삶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실렸다.

괴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보았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생명 경시와 반생명 현상 위에 분단 상황까지 결합되어 생명 파괴가 가장 적나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나, 그것을 척결하려는 많은 운동들이 서구의 진보주의 세계관과 운동관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에 생명 파괴 현상이 더 심화되었다고 사회운동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런 사회를 바꾸는 운동은 “주체들 사이에 자유, 평등, 우애, 관용과 관심을 갖는 대화를 통해 공동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협동적 삶”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귀중한 생명이 가난과 억눌림, 무관심에서 벗어나며, 유기적 생명체인 민족이 분단된 채로 싸우지 않으며, 민족들 사이에서 일체의 멸시와 차별, 불신, 증오와 착취, 억압, 세뇌, 병탄, 학살, 보복, 전쟁이 악순환 되지 않으며, 수많은 생명체들이 약탈, 파괴, 멸종되지 않으며, 인류와 모든 중생의 삶의 터전이자 어머니인 물과 토지와 공기, 대기 전체와 태양과 달과 별들과 우주전체의 파멸되지 않”는 세상이 되리라 여겼다. 이들은 인간과 모든 존재들이 생명 그 자체로서 살며 갈등과 대립과 투쟁이 아닌 대화를 통해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를 희망하였다.

1980년대 사회운동 세력들 속에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 항쟁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의 날선 분위기 속에서, 사회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급 투쟁과 체제 전복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이런 견해는 개량주의적인 방법으로 보였고 원주캠프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원주캠프는 생명운동을 제3세계 민중운동으로 위치 지으면서 기존의 냉전 체제 논리를 벗어나고자 했다. 이들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모두의 반생명적인 방향을 비판하였다. 그 대신 무언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 숨은 채 드러나는 생명의 씨앗을 현실적으로 꽃피우는 일이 생명운동이라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민중이 일체의 생명 파괴에 저항하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공동체적 삶을 건설함으로써 모든 적대적인 또는 다양

한 기존의 이데올로기와 물신의 지배 아래 있는 생명이 있는 그대로의 체제 속에서 창조하고 해방하고 반생명에 저항하다 죽고 다시 부활하여 스스로 확장함으로써 자신을 변화시키고 체제 자체의 역사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철저히 소멸시킬 전면적인 부활과 해방과 개혁을 가져오는 변혁운동이며 동시에 자비와 사랑의 운동”을 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운동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 것이다.

그리고 생명운동의 구체적인 실현방법으로 삶의 현장에 있는 민중, 즉 농민, 어민, 노동자, 도시빈민, 여성, 대학생, 지식인, 문화 관계 종사자, 종교인 일반의 현실과 변화 방향, 다각적인 실천 방안과 통일운동으로서의 생명운동을 제안하였다.

이런 내용을 담은 ‘원주보고서’는 무위당 장일순을 중심으로 한 원주캠프가 1960년대 중반부터 해왔던 지역개발사업과 민중생존권운동, 그리고 70년대 유신정권에 대항하는 반독재투쟁의 경험을 성찰하면서 새롭게 자신들의 사상과 운동론을 체계화한 것이었다.

원주에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가톨릭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의 지원을 받아 무위당 장일순을 중심으로 한 활동가 그룹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신용협동조합 설립과 협동조합 교육, 학교소비조합 설립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꾀했다. 또한 1972년 남한강 대홍수 피해 농민들을 돕기 위해 조직한 재해대책사업위원회와 이후 그것을 개편한 사회개발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개발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이들은 외국에서 지원금으로 들여온 막대한 금액을 농민들에게 자립의 기초를 만들어주기 위한 농민 교육과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신협 - 소비자협동조합(구판장) - 생산자협동조합(작목반)’을 기반으로 하는 유기적 지역순환 경제구조 만들기 와 생활공동체운동에 집중 투여하였다.

원주캠프는 민중생존권운동과 농민생존권운동을 위해 조직된 가톨릭노동청년회(1964), 가톨릭농촌청년회(1966), 가톨릭농민회(1972) 등 가톨릭농민운동에 깊게 간여했다. 이들은 1970년 ‘뽕따사건’과 전태일 분신 등을

계기로 드러난 민중의 기본생존권 문제, 1971년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드러난 도시빈민의 생존권 문제, 사북지역 탄광노동자들의 처지 등을 검토하고 대응해 가면서 이것이 단순한 자유권과 민중 생존권을 넘어 '생명'의 존엄성에 관련된 문제임을 인식해 갔다.

또한 지학순 주교를 중심으로 한 천주교의 부정부패반대운동과 사회정의구현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1971년 원주문화방송 부정부패반대운동,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된 지학순 주교의 구속과 김지하의 체포, 1976년 1월 원주선언과 3월 명동선언 등, 원주캠프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앞장서 이끌어가는 핵심주체 중 하나였다.

1980년대 초, 원주캠프는 그간의 경험들을 근본적으로 성찰하였다. 그 시기를 거치며 원주캠프는 민중의 생존권 문제 속에 깔려 있는 반생명적 사회 구조와 환경·생태계 위기를 검토하면서 현대 산업문명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최시형의 동학사상에 대한 재해석을 거치면서 '사람'에서 '자연'과 '사물'의 영역으로 인식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런 인식의 변화에 따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맑시즘적 패러다임에 기반한 반독재운동의 악순환 구조를 발견하였고, 근대협동조합운동의 논리로 진행된 지역사회개발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면서 탈근대적 인식의 생명운동과 생활공동체운동으로 사회운동이 전환되어야 함을 절실하게 제안한 것이다. 이런 제안은 사회운동 세력에게 곧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원주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쳐 나갔다.

## 생활공동체운동의 확장과 전망

원주보고서가 발표된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까지의 20년은 '대안'의 실현을 통해 사회운동이 전환되어 갔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는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하나로 1980년대 후반부터 민중운동과 환경운동 그룹들이 점차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여러 분야에서 생명담론이 구체화되어 그것을 실현하는 조직들도 만들어졌다. 생명운동의 흐름을 보여주는 여러 단체들이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1990년 가톨릭농민회는 제20차 대의원대회 선언문을 통해 운동의 방향을 전환했다. 1991년 유기농 자재회사인 흙살림과 생명운동 담론지 『녹색평론』의 등장, 1993년 환경윤리종교인 선언 등에 이어 1994년에는 녹색연합과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가 창립되었다. 1994년에 열린 ‘생명가치를 찾는 민초들의 모임(생명민회)’이 이런 움직임을 더욱 촉발시켰다. 이 모임에서는 생명운동 관심자와 관계 단체들, 연구자들이 생명운동과 사회운동을 논의했다. 그 후 1996년 전국귀농운동본부 창립, 1998년 대안교육잡지 『민들레』 창간, 1999년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창립, 2000년 기독교 환경선언 발표, 2001년 불교환경연대 창립 등 생명운동은 다방면으로 확산되었다. 2003년 새만금 갯벌을 지키려는 새만금 삼보일배는 생명을 살리는 비폭력 사회운동의 전형을 만들었다. 또한 그해 열린 세계생명문화포럼은 생명운동과 생명문화운동이 세계 공통의 움직임이며 생명 가치가 한국 사회운동 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그리고 2004년부터 5년에 걸쳐 진행된 생명평화결사의 생명평화택발순례는 전국의 사회운동과 생활운동 세력들을 생명과 평화라는 화두로 연결시켰다. 한편 이러한 담론과 운동 세력의 성장은 밀바탕에서 그것을 지탱해주는 생활공동체 대안운동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의료생활협동조합, 대안학교 등을 들 수 있다.

1983년 76개의 소비조합이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를 창립함으로써 생활 밀착형 협동조합운동이 등장하였다. 한국의 소협운동은 유기농운동과 결합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협동조합운동이라

는 특징을 가진다. 농약 중독에 시달리던 농민들, 화학비료로 인한 흙과 농산물 오염이 현실 문제가 되면서 1980년대 초반부터 정농회, 가톨릭농민회, 기독교농민회 그룹 가운데 유기농업을 선택하는 농민들이 늘어났다. 유기농의 가치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도 환경과 생명 파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인간은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을 살리기 위해 1986년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유기농직거래사업체 한살림이 설립되었다. 생명 위기 시대의 소비자협동조합, 농업 위기 시대의 소비자협동조합의 새로운 상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1987년 이후 여성단체와 종교단체, 시민운동단체들이 유기농산물 직거래 협동조합을 속속 설립했고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들도 유기농업 직거래에 참여하는 등 생협운동은 급물살을 탔다. 생협운동의 성장은 생명운동의 외연을 빠르게 확장시켰다. 2000년대 들어 생협은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며 2012년 말 기준 전국 생협(126개 단위생협)의 조합원은 67만 세대, 공급액은 7,107억 원에 달하는 규모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지역의 여성 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생협의 조합원 조직화는 사회운동 진영이 봉착해 있던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사회적 주부'들이 만들어가는 지역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생협운동과 더불어 마을공동체운동의 토대가 된 것이 공동육아협동조합이었다. 1994년에 처음 설립된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지역 단위로 부모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조직이다. 1980년대 초반의 야학운동과 저소득층어린이 보육운동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보육운동', '공동육아 제도화' 운동의 실천방식으로 제안된 것이었다. 이는 조합원들이 대면할 수 있는 협동조합 속에서 생태적 보육과 양성평등, 부모와 교사가 아이를 함께 키우기, 민주적인 협동조합 운영이라는 협동조합 공동체의 모델을 실현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을 상당기간 경험하고 어린이집을 졸업한 부모들은 지역에서 방과후교실, 대안학교, 마을학교 등을 만들

거나 생협운동에 참여하는 등 마을공동체운동의 주체로 성장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상호돌봄'이 지역공동체의 기초임을 일깨운 것이 의료생협(현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었다. 안성의 농민병원에서 출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된 의료생협은 환자와 의사가 의료활동에 주체적으로 협력하여 주민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생협은 생명을 영리화하는 병원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주민들의 생명을 돌보는 병원을 만들어간다는 원칙하에 지역단위 조직으로서 해당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방문요양 사업과 질병예방 활동, 주치의 제도를 실현하고 있다. 이런 운동들과 더불어 일상화되어 당연하게 여겨 왔던 강제적 의무교육의 경쟁중심적 교육 현실을 일깨우고 대안적 교육의 틀을 만들어 간 대안 교육운동이나 귀농운동과 도시농업, 자발적이며 주체가 되는 노동에 기반한 새로운 기업활동 등 새로운 삶에 기반한 운동이 생활 각 분야로 퍼져가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여러 활동들이 제도화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1998년 생협법, 2005년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제도화, 2010년대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2014년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 등이다. 또한 이러한 운동들은 지역사회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지역운동, 마을만들기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현재 원주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영역이 활성화된 대표지역이다. 준비하고 있던 힘들은 2003년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가 창립되면서 전기를 맞았다. 협의회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새롭게 발생한 실업, 빈곤, 양극화, 복지 등 삶의 문제를 '지역'의 민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과 그 연대를 통해 해결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들을 만들었다. 유기농 생산의 본거지인 원주이니만큼 농업 생산과 농산 가공, 농산물 유통과 서비스, 친환경급식 영역이 주요한 협동조합이나 협동 사업으로 자리 잡아갔고, 돌봄복지교육 영역에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협동조합과 대안학교들이 활동하며 문화생협

과 노인생활, 자활조직 등이 주민 생활을 지원한다. 생활공동체로서 메워져야 할 틈은 많지만 원주는 ‘대안 사회’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표명한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창립선언문 가운데 아래의 한 구절에서 30년에 걸친 생명운동의 역사가 보인다.

“대안 사회의 실현은 지금 이곳에서 실현해야 할 절대 절명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상호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대 자본에 대항하여 주민 참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도시에 걸맞은 산업시스템을 갖추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경제의 이윤은 지역복지의 개선을 위해 환원되어 진정한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원주를 필두로 몇몇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지역 모델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시작일 뿐이다. 아직 ‘대안’에서 조금 나간 수준이다. 2010년대 들어 한국은 GDP(국내총생산) 기준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나, 선진국으로서는 처참할 만큼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GDP 수준도 생명의 가치를 높여오면서 이룩된 것이었음이 ‘세월호 참사’로 여지없이 폭로되고 있다. 동시에 대다수 사람들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이 살 수 없다는 위기감과 근원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대안’으로 사회의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생명운동과 생활공동체운동이 사회 제도와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현실은 환영할 일이다.

이것은 사회운동 세력들에게 기회이자 위기이다. 이 운동을 사회 전체로 확산할 만큼 주체 세력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어찌하겠는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30년 전 원주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모든 일을 생명 가치로 판단하고 주위에 차근차근 제안하면서, 자신의 지역과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토대에서부터 세상을 바꾸는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 참고 문헌

---

- 김소남. 2014. 「1960-80년대 원주지역의 민간주도 협동조합운동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김용우. 2007. 「원주 지역의 생명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전개과정 고찰」.
- 김형미 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2012. 『한국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푸른나무.
- 이경란. 2013. 「한국 근현대 협동운동의 역사와 생활협동조합」, 『역사비평』 102, 2013 봄.
- 조완형. 2010. 「한국 협동조합의 친환경유기농업 추진 경과와 과제」, 2010년도 한국유기농업 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발표문.
-



## 생명운동과 종교적 이상주의

### 볼 수 없고 감각할 수 없는 것

무위당 선생의 사상을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재평가하는 글을 부탁받았을 때 많이 망설였습니다. 우선 선생이 남긴 사상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제가 무위당의 사회운동론을 논한다는 것이 가당치 않은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망설임의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짧은 선생의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일상의 삶과 실천에서 벗어나 따르고 기념할 무엇인가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께서 씨앗을 뿌리셨던 한살림운동이 성장해가고 있지만 생명을 중시하고 아끼는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이라는 한살림선언의 주장은 생활협동조합의 실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생명과 협동의 정신과는 멀어져 잘 먹고 잘 사는 개인들의 소비행위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무위당 선생의 사상을 기념하고 논의하는 것은 선생님의 실천적 사회운동 정신을 곡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위無爲가

---

\* 제주대 교수, 사회학.

아닌 작위<sup>作爲</sup>로 치우쳐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한살림운동이 표방한 생명의 원리와 협동의 정신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의 말씀에 빗대자면 자연스러움의 원리를 체득하지 못해 여전히 원인을 찾으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 미숙한 존재일 따름입니다. 깊지는 않지만 선생이 남기신 글과 말씀을 읽고 고민한 지금에도, 선생의 삶과 실천에 깊이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위의 사상과 생명의 원리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합리주의적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보다는 인과적 설명을, 화합과 조화보다는 적대와 투쟁을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선생과 이현주 목사님이 노자를 강독하면서 나누신 아름다운 말씀에 매혹당했습니다. 평소 동양사상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던 터라 노자의 선<sup>禪</sup> 사상에서 출발하여 불교, 천도교, 기독교를 넘나들며 평화와 생명의 원리를 설파하시는 사상의 깊이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욕심과 물질적인 것을 배제하고 자연스러운 무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sup>道</sup>에 도달함으로써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은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종교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이러한 도의 경지일 것이라는 선생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붙잡혀 있는 '자연스럽지 못한' 속세의 습관과 관습, 삶의 방식으로 돌아오면 선생의 말씀은 너무 높고 아름다워서 우리네 삶에 스며들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선생도 이것을 아시고 생명살림의 실천을 무던히 강조하셨지만 하루하루를 생존의 '투쟁'에 내몰리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다가가기 어려운 '높은 말씀'일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감각의 세계에 빠져 느끼고 볼 수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감각의 세계가 가져오는 물질적인 욕망에 탐닉하는 우리들의 삶을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도의 원리를 통해 벗어나는 것은 아름다운 윤리적 주체들의 세계

입니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상가들이 ‘꿈꿨던’ 유토피아의 삶의 원리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언어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언어의 한계를 알지 못한 채, 언어의 형식을 빌려 세상에 대한 완벽한 설명에 도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굴레요 딜레마일 것입니다. 선생은 노자, 부처, 예수, 해월의 사상을 통해 이 굴레를 보았고 거기에서 벗어날 길을 찾으려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어 안에서 삶의 조건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인간의 삶 아닐까요? 높은 말씀과 ‘도’는 인간 지식의 한계를 지적하지만 그 딜레마와 굴레 자체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도를 삶의 좌표, 즉 도덕적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일상의 삶을 그것에 맞추어 영위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선생과 이현주 목사님이 ‘노자이야기’ 곳곳에서 토로하고 있는 우리의 한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바로 우리네 사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 기준과 일상적 경험 사이의 거리감을 끝없이 자각하고 느끼면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초래하는 우울과 강박, 분열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자본의 논리를 몸에 새기고 실천하고 있지만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몸과 마음으로부터 연대와 상호부조를 갈망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실증주의, 과학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적 근대성의 논리가 산산이 조각내어 버린 자신의 삶의 파편들을 짜 맞추어 일관성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굴레와 딜레마, 분열과 강박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영속적인 한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보면 선생의 말씀이 큰 울림을 줄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하지만 종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위당 선생의 사상을 종교 지도자들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비판’하는 이유는 종교적 원리들이 ‘지금-여기’에 살아 숨 쉬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을 넘어선 보편적 원리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무위당 선생과 같이 ‘경지’에 이르신 소수의 분들은 종교가 가르치는 보편적 도덕과 생활윤리를 체화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것을 ‘높은 말씀’으로 받들 뿐 실제 삶에서는 사적인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종교적 가르침은 아직 ‘높은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의 수양과 성찰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질타합니다. 혹시 종교적 가르침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기준을 내세우고 그것을 따르지 못한 자들을 종교적으로 단죄하면서 높고 아름다운 도덕과 윤리의 세계로 도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 새로운 사회운동의 힘은 어디로부터?

세상만사, 자연적 세계와 사회적 세계를 실증적인(positive) 것으로 설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탐색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탐색과 설명의 방법은 오로지 인간의 감각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학적 세계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지적 ‘오만함’이 팽배해 있습니다. 무위당 선생께서 감각의 세계를 벗어나 무위라는 도의 경지를 주장하신 것은 이렇듯 오만한 과학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선생의 실증주의(positivism) 비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증주의 비판을 넘어서는 바로 그 순간 선생과 저 사이에는 간극이 생겨납니다. 그 간극은, 감각의 세계를 비판하고 실증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과학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가 그 자체로 실천이며 감각의 세계를 초월할 수 없다는 ‘여전히’ 합리주의적인 저의 생각에서 생겨납니다.

새로운 사회운동을 설명하는 서구의 이론 중에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을 철저하게 물질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합리적 선택으로 설명합니다. 자원동원이론에 따르면 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무임승차자(free rider)'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합리적으로 이해관계를 따져 물을 수 있는 행위자들은 운동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운동의 결과만을 향유하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회운동의 성패는 운동을 조직하는 운동가가 무임승차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선택적 유인(selective incentives)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설명은 사회운동을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실증주의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볼 수 있는 것'의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착하며 물질적 이해관계에 붙들려 있음을 드러냅니다.

자원동원이론이 터하고 있는 이해관계의 세계와 물질적 이해타산을 계산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경쟁, 효율, 발전과 성장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게 한 근대 자본주의문명의 산물입니다. 그것을 산업주의문명이라고 불려도 그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근대성 또는 산업주의적 근대성에 대한 비판은 다양한 목소리로 나타났습니다. 경쟁적인 적자생존의 논리가 아닌 상호협동과 부조의 논리가 인간의 진화적 적응과 생존을 이끌어 낸 근본 원리임을 천명하는 입장, 근대문명 비판을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영성의 원리로부터 이끌어 내는 종교적 입장,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인간 본성을 근대성의 산물로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인간성의 구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비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생각들이 출현했습니다. 각각의 입장은 생태적 위기에 대한 저마다의 해석을 제시했고 현행의 사회체계를 전환하는 운동의 원리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앞의 두 가지 입장, 즉 상호부조적인 인간론과 종교적 입장은 자원동원이론과는 반대의 편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

성을 이기적으로 계산하는 합리적 주체로 가정하는 것과 상호 부조하는 협동적 존재로 상정하는 것은 모두 사회적 조건과 문화적 맥락을 간과하는 본질주의(essentialism)입니다. 생물학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문화적이고, 그래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구체적인 조건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일관성을 회복하기 위해 '투쟁하는' 존재임을 보지 못하고 '이미 가정된' 인간 본성의 원리에 근거해 '지금-여기'를 정당화하거나 비판하려 한다는 점에서 자원동원이론과 상호부조론은 본질주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본질주의는, 생태계와 인간의 공존을 가능하게 할 녹색 사회로의 전환이 딜레마와 굴레 속에서, 그리고 역사적 흔적과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 하는 '갈등하는 주체'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보지 못합니다. 본질주의적 비판은 이상과 관념에 치우쳐 현실 속에서 생겨나는 불만과 저항, 그리고 연대애의 열망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호소는 상호부조론의 입장과 많은 것을 공유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아닌 영적인 원리 또는 신(들)의 원리에 기대지만 삶의 현장과 동떨어져 '이상'에 호소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다만 상호부조론이 인간주의적이라면 종교적 입장은 종종 인간을 신 또는 영성 앞의 무수한 존재들과 구별되지 않는, 하지만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에 의해 질서를 해치는 존재로 파악하는 일종의 인간혐오주의로 기울 위험이 있습니다.

무위당 선생은 이 두 가지 입장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기대고 있지만 그것은 이상이 아닌 현실의 삶 속에서 체득되어야 하는 무위의 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리는 자연을 위해 인간을 지구생태계를 해치는 암적인 존재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고 그 존중의 모시는 마음을 삼라만상 모든 존재로 확대하는 것이 선생이 바라는 무위의 상태, 도의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합에도 불구하고 선생의 사상은 '이상주의'의 한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의 논조는 전근대시대 위정자에게 통치의 방식, 도를 통한 통치의 방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통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개인적 윤리를 곧바로 이끌어 내면 이상과 현실 사이의 커다란 간극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실증주의와 과학주의를 비판하는 세 번째 입장, 즉 사회적 비판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생겨납니다. 사회적 비판은 그 안에 다시 다양한 입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머레이 북친(Murray Bookchin)의 사회생태론(social ecology)에서 사회적 생태페미니즘(social eco-feminism), 그리고 생태마르크스주의와 생태사회주의까지, 생태적 위기를 초월적인 원리 또는 영성에 호소하지 않고 사회적 구조 안의 갈등과 모순으로부터 설명하고 그 조건 아래서의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통해 사회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입장들을 사회적 비판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을 여기서 모두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주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들이 초월적 원리와 정신이 아닌 '지금-여기'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사회운동의 근거를 이끌어내는 것은 굴레와 딜레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지만 굴레와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는 인간들, '지금-여기'에 살아 숨 쉬는 인간들로부터 사회 전환의 힘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사회적 비판은 무위당 선생이 말씀하신 문명의 전환과 협동과 생명의 원리를 실현하는 운동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생명 파괴를 조장하는 자본의 논리에 대한 저항에서도 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위당 선생이 제시하신 협동과 생명의 논리를 갈망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원리를 파괴하는 자본주의적 실천의 주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주의적 욕망 추구하고 경쟁 원리, 그리고 그것에 터한 무한한 성장에의 믿음을 비판하면서도 우리가 밟고 있는 현실의 물질적 조건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materialism)가 돈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라면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 속에 살고 있

는 인간의 존재 조건을 고려하는 것은 이론적 유물론(materialism)입니다. 헛된 욕망을 부추기는 물질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피와 뼈와 살을 가진, 공통의 문화 속에서 살지만 그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유물론적 분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무위당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는 생명운동은 유물론적 분석을 물질주의와 혼동합니다. 그러면서 영성주의로 빠져 버립니다.

이러한 유물론을 한살림운동의 창시자들이 비판하는 마르크스주의와 동일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유물론의 대표자도 아니며 유물론을 강조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위당 선생이 씨를 뿌린 생명운동이 문명전환을 향한 사회운동의 폭발으로 번성하기 위해서는 풀이 뿌리내려야 하는 토양의 상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할 따름입니다.

## 물질주의 비판과 유물론적 분석

사회적 비판의 입장에서 무위당 선생의 사상을 수용한다면 선생이 제시한 무위의 경지를 실천하면서도 굴레와 딜레마에 묶여 있는 인간들에 대한 ‘분석’을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물론적 분석은 언어의 감옥에 갇혀 있고 결코 삶의 조건과 스스로에 대한 완벽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 속에 살지만 합리적 설명을 추구하는 인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출발합니다. 우리는 분열적이고 진동하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분석해 왔습니다. 여기서 유물론적 접근은 인간 지식의 불완전함을 우리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완벽한 지식, 또는 보편적이고 중립적 지식의 축적은 구름 위의 관념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생이 말씀하신 ‘상호공존’과 ‘조화의 상태’란 불완전한 분석의 시도들, 결코 완성될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로서의 삶의 일관성 회복이라

는 과제를 둘러싼 서로 다른 생각들의 부딪힘과 만남을 통한 삶의 방식의 지속적인 갱신일 것입니다. 이러한 갱신의 과정은 갈등과 적대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적 조건은 관념의 세계에서처럼 조화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무위당 선생이 제시한 협동과 생명의 원리는 물질적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해석이 부딪히면서 성취되어야 할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선생이 강조하신 '무지의 상태' 또는 '무아의 상태'는 물질적 조건 속의 운동을 통해 도달해야 할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덧붙이자면 이 목적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로 지속적인 운동을 촉발하는 좌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는 서구의 분석적 사고를 비판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지만, 분석이라는 도구 자체를 함께 던져 버리는 것은 경계해야 할 반대극의 편향입니다.

어쭙지 않게 무위당 선생의 사상을 현실을 주목하지 못하는 '관념론'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의 의도가 아닙니다. 선생은 선생이 치열한 삶과 투쟁 속에서 체득한 삶의 원리와 방향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을 뿐입니다. 제가 비판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선생이 남긴 발자국과 사상의 궤적을 해석하고 또 다른 실천으로 나가야 하는 책무를 짊어진 후학들의 태도입니다. 무위당 선생은 종교적 관점에서 현대문명 비판의 규범적 지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록 열린 사고와 실천을 강조하셨지만 선생이 서 있던 종교적 기반은 '무위'와 '무지' 상태가 아닌 선지자적 태도로 해석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위기에 직면한 선각자로서 한실림운동의 '특권적인 위치'가 부각될 위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선생의 가르침을 현실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문명전환의 근거를 찾는 길에 필요한 자양분으로 여기기보다는 그것을 마치 또 다른 '교조'로 만들어 '--주의'를 비난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선생의 치열한 투쟁을 보지 않고 화해와 공존의 방향만을 일면적으로 해석하여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착취, 억압, 낭비의 논리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합니다. 선생이 지표로 제시했던 근본 원리를 개인의 결단과 선택의 문제로 끌어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합니다.

생명운동의 이상주의적 편향은 1970-90년대 한국 사회를 풍미했던 마르크스주의의 경직성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시도에서 생겨났습니다. 서구의 마르크스주의 진영 안에서는 이미 1950년대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고 1960-70년대 급진적 사회운동이 가져온 충격을 흡수하면서 다양한 마르크스주의 경향들이 출현했습니다. 계급적 모순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모순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경제에 의한 일방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심지어 이론적 모순과 투쟁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가 논의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문화, 무의식, 이데올로기를 통해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도 출현했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이 보였던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여성해방운동의 비판, 서구중심주의적 운동에 대한 흑인민권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비판, 계몽주의적인 성장주의적 환상을 극복하지 못했던 교조적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생태주의자들의 비판이 마르크스주의 안의 다양한 수정과 교정을 결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였던 마르크스주의는 이런 혼적이 지워진 편향되고 경직된 마르크스주의였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불행히도 편향된 마르크스주의 비판은 역시 편향된 사회운동 이론을 초래했습니다. 무위당 선생은 “전체의 사람 사는 세상의 꼬라지”를 살피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할 이론적 자원을 폐기처분함으로써 물질적 삶의 구조에 대한 비판을 포기하고 거대한 문명사적인 전환을 예견하는 선지자적 입장이라는 구름 위에 올라 앉아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 편향은 여전히 사회 비판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교조의 틀 안에 갇혀 있는 마르크스주의가 그 틀에서 풀려나와 현실과의 대화를 통해 전

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막아버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무위당 선생조차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입니다. 선생은 쉽고 간단한 이치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좋아하셨습니다. “누룩을 담가 놓으면 술이 되는 식으로 해라 이 말이야, 자연스럽게 해라 이 말이야”라고 말씀하셨을 때 선생이 염두에 두셨던 것은 거창하고 대단한, 어느 서구 사상가가 ‘거대서사’라고 불렀던 것에 기댄 운동이 아니라 삶의 곳곳에 스며든 인간다움과 자연스러움의 리듬을 따르는 운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연스러움과 인간다움을 짓누르는 구조의 힘을 과소평가하라는 가르침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선생은 이치를 알고 참여하는 것, 사욕을 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우주가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치를 깨달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를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다만 물질적 관계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과학적 분석으로 세계를 해석할 수 있다는 과학주의를 경계하는 데 몰두하셨을 뿐입니다. 이제 선생의 생각을 우리가 대결하고 있는 현 상태를 설명하고 극복하는 운동 자원의 하나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선생의 ‘정세적’ 개입을 우리의 정세적 개입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여기’에서의 해석적 독해라고 부르려 합니다. 해석적 독해로 나가지 못하고 선생의 이야기 그 자체를 ‘교조적’으로 읽게 되면 선생의 사상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선생의 현대 문명 비판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의 사상은 현대 문명을 만들고 그것에 기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불신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무위의 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위당 선생의 사상을 사회운동의 사표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러한 ‘비관’과 ‘낙관’을 삶이라는 실재 속에서 분석하고 그것으로부터, 한편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의 좌절과 절망,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저항과 열망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 한국 사회운동의 오늘, 그리고 내일

지금 생명운동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런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을까요? 무위당 선생을 모셔야 할 또 다른 어짐(賢)으로 받들고(尙)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선생이 강조하신 이치를 얻게 하는 ‘쉽고 간단함’은 종교와 도덕의 세계로의 침잠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보통사람들의 경험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회운동이 종교와 도덕이라는 구름 위의 아름다운 세상으로부터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지상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이 쉽고 간단함이고 그 곳에서만 이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되돌아온 지상은 구름 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시끄럽기 때문에 갈등하고 동요하고 구조의 힘 앞에 무너지지만 그것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사회적 비판을 포기한 도덕과 종교적 윤리에의 호소는 이러한 되돌아감, 현실 직시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선생이 말씀하신 “가지려 하지 않는 상태”, “활을 당기고 있는 무심한 상태 (利在挽弓之間)”는 도덕적 수양이 아닌 모순과 갈등으로 가득 찬 현실 세계에서의 공동의 경험을 통해 성취되는 구조와 주체의 동시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구조를 변화시키면 주체가 변화된다거나 주체가 대오각성하여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생각은 모두 반쪽짜리 생각인 것입니다. 선생은 반쪽짜리 생각의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 과감하게 반대쪽으로 막대를 구부렸습니다. 하지만 선생의 사상을 실천의 가르침으로 삼아 미래를 개척해야 할 우리는 두 가지 편향 모두를 경계하고 종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쩌면 사회적 비판과 무위당 선생의 생명사상은 서로 공약수가 없는 패러다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집합이 없는 사상적 패러다임을 하나로 만들기보다는 이들 사이의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누르는 것은 무위당 선생이 가장 경계하신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은 선생의 가르침에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극단적인 빈부 격차와 생태 위기와 인간성 상실이라는 조건이 종교적-도덕

적 비판과 구조적 비판이 마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21세기 자본주의는 우리의 몸을 지치게 하고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있으며 사회적 연대의 토대를 허물고 있습니다. 몸과 자연의 외적 한계는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기적인 경쟁의 논리를 내면화한 우리의 정신조차 경쟁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연대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분노와 종교적 윤리에의 호소가 물질적인 모순과 해우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사회비판가들은 생명사상을 통해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생명사상가들은 구조적 관점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반성은 서로 다른 패러다임들이 2014년 한국의 모순적 현실 속에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패러다임들이 운동과 실천을 통해 마주치고 대화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교조주의를 비판하면서 나타난 사상이 또 다른 교조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은 각각의 입장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완전함을 보완하는 것은 실천 속에서의 대화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물질주의를 비판하는 이론적 유물론의 교환입니다. 자연과 사물의 영역까지 인식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인간을 자연적 존재로 간주하며 동시에 자연적 대상을 인간의 필요 충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재적 가치를 갖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에의 도달은 우리 인식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물질적이고 구조적 조건 속의 실천을 통해 성취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유물론적 해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유물론의 시각에서 오늘의 생협운동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협운동은 기술문명과 물질문명 비판에 앞장서고 있을까요? 혹은 구조적 조건에 대한 비판은 말뿐이고 소비주의적 욕망의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협운동과 생명운동은 자본주의적 모순에 고통스러

워하는 비명과 신음에 귀 기울이고 있기는 한 것일까요? 자본주의 비판의 다양한 목소리와 교감하고 연대하려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기는 한 걸까요? 무위당 선생이 생전에 생협운동을 향해 던지셨던 경계의 목소리 하나를 인용하는 것으로 제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것들은 먹거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알아들어.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땐 말이지 얘기가 안 되는 거지. 먹거리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살자고 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체의 반생명적인 세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과 몸을 함께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공동체 소비자운동이 전부 이해가 될 거예요.”●



## 무위당과 모심의 지역운동

### 돌아보기 - 동지는 간데없고 찢어져 힘없이 날리는 깃발이여!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70~80년대는 '자유'와 '민주'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고자 했던 민주화운동 시기였다. 많은 이들이 탄압받고 희생당했으며,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함께했다. 그 정점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87년 6월 항쟁이었고, 이후 6.29선언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거쳐 절차적 민주화가 진전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분배의 정의, 통일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부문별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었으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운동 또한 꿈틀대기 시작했다. 변화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운동 전개 방식도 다양화되는 등의 진전이 있었다. 그렇지만, 몸집이 커지고 갈래가 많아진 반면 깃발과 대오는 갈수록 힘을 잃어갔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와 IMF 사태를 거치면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그 정도는 심각해졌다.

---

\* 나주공부모임

그 이유는 첫째, 진정성의 실종이다. 욕망과 안일에 빠져 본래의 초심을 상실해버린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과실 따먹기이다. 일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운동의 성과로 얻어진 기회를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개인의 출세와 돈으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그 결과 대오의 약화와 도덕성의 상실을 자초하였다. 세 번째, 앞의 이유들의 바탕은 운동 진영의 허약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혼을 올리는 사상, 넓고 깊고 긴 시선, 늘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넘치는 기풍, 선공후사<sup>先公後私</sup>의 헌신성 등, 지금에 와 그 어느 한 가지를 생각해보아도 시원한 대목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남을 탓하지 말자. 우리 운동은 진정성과 도덕성을 상실하고, 내공이 허약하고 편협하고 나태하고 헌신성마저 사라졌다. 주장과 외침은 그저 입에 발린 소리가 되었다. 기득권 세력에게 운동 진영은 더 이상 무서운 집단이 아니라 관리대상으로 전략해버렸고, 저토록 희망을 찾아 들쭉이는 역동적인 대중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해버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타깝고 답답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누구든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모두는 태어나 첫 걸음을 내딛는 아이처럼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때다.

##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만난 무위당

2007년부터 농업·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지역의 농민들과 공무원, 조합 직원들이 함께 2년여 동안 공부했다. 그 결론이 협동조합이었다. 그렇게 함께 공부한 이들과 협동조합을 시작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손을 들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

뿌리를 놓아둔 채 가지만 잡고 씨름했었다. 전체를 모른 채 부분이 전체인 줄 알았다. 본질을 소홀히 하고 현상에만 매달렸다. 근원과 하나가 되려는 노력은 게을리 하거나 미뤄두고 욕망과 거짓의 삶을 살아온 것이다.

바르지 않은 내 모습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향해간다는 것 자체가 어릿광대짓이었다. 실패는 당연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부끄러웠다. 패배감과 분노감 또한 상당했다. 꽤 힘겨운 시절이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2011년 어느 날 한 선배님의 안내로 부안에서 '무위당사람들'을 만났다. 원주의 '무위당사람들'과 호남의 '무위당만인회' 분들의 정기적인 교류의 장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그 이후 원주를 방문하기도 하고 책과 서화집을 보기도 하면서 무위당 선생의 삶과 사상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같은 해 여름 광주에 있는 인문학 학당 '무등공부방'을 만났고, 동학을 접하고, 화순의 성자 이현필 선생의 자취를 더듬기도 했다. 2012년 여름부터 나주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인문학 공부를 위한 '나주공부모임'을 시작했다. 마음의 스승이신 '자연의 농사꾼' 한원식 선생의 삶과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지금 나는 학생이다. 나이를 되돌릴 수 없어 주어지는 이런저런 일도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화두를 푸는 것이 나날의 중심 과제이니 분명코 학생이다. 모든 것이 부연 안개 속에 휩싸여 있고, 더러 작게 반짝거리는 빛을 보기도 한다. 이런 내가 주제를 정하여 논한다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지만, 어설피고 부족한 대로 몇 가지 생각을 두서없이 말하고자 한다.

## 나라 한 알과 지역

나라 한 알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내가 이 이치를 모두 이해하고 체득한다면 또 다른 무위당이 되어 천지간을 흘러가겠지만, 아직 잘 알지 못한다.

나라 한 알은 그 자체가 생명일 것이다. 싹이 터 자라고 꽃피어 맺힌 열매

이자 새싹을 간직하고 있으니 생명이다. 천지자연의 큰 생명의 한 발현이다. 솔에서 밥이 되거나 썩어서 밥이 되어 다른 생명을 살게 하니 생명이다. 나라 한 알은 수천수만 년 전부터 이어져온 농사의 세월과 농경생활을 영위해 온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고 자연환경의 변화 또한 품고 있을 것이니 인류와 자연의 역사이기도 할 것이다. 나라 한 알은 햇빛과 비와 바람과 달과 별, 대지와 초목과 사람의 피와 땀, 지렁이와 땅강아지, 춤추는 벌 나비와 지나치던 작은 짐승 등 하늘땅의 수많은 존재들이 어우러진 소산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라 한 알은 어느 지역, 어느 대지에서 그곳만의 기후와 토질과 농사법과 관계되어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담고 있을 것이니, 분명 지역성을 품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 구체적 개체로서의 나라 한 알은 지역을 통해 실현된다. 지역마다 품종이 다르고 맛과 품질도 다르다. 심지어 수입 개방을 둘러싼 찬반 시비마저도 '나라 한 알과 지역'의 문제일 수 있다.

지역운동은 우리 운동의 전체 흐름과 대체적으로 그 길을 같이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 운동의 한계와 과제는 지역운동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운동은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누가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인식과 실천이다. 현재의 지역운동은 자기 지역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조차 거의 하지 않는다. 자치, 교육, 복지,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정보와 사례를 감각적으로 풀어내어 어설피게 움직이고 있다. 이 지경이다 보니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일반 사람들의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없고 당연히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도 없다. '지역이 위기'라고 한다. 지방 자치는 토호자치가 되어버렸고, 지역의 문화는 천박하고, 지역사회는 갈가리 찢겨 대립과 갈등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돈과 자신(과 가족)'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사소하고 하찮게 여긴다. 가치 실종의 시절이다. 입만 벌리면 '탓'하기에 급급하다. 가슴 속에서는 욕망과 분노가 들끓

을 뿐, 자성하고 근본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려 하지 않는다.

지역의 위기는 지역운동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제 변해야 할 때다. '나라 한 알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하신 무위당 선생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으로 지역운동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지 않을까?

## ‘인간은 존엄하다’와 ‘모심(持)’

우리가 학교와 사회에서 배우고 보고 들어 아는 것들 대부분은 서구적 가치와 사상이었다. 그 가치와 사상의 핵심은 ‘인간은 존엄하다’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구절이 아닐까? 지구상에 사람이 홀로 우뚝한 존재라는 이 오만한 사상이 물질문명을 정당화해 왔다고 생각한다. 물질문명의 발전은 일시적으로 인류에게 풍요와 편리를 가져다 주었지만, 자연 파괴, 동류인 인간에 대한 억압과 착취, 전쟁, 그리고 결국은 지구 생명의 공멸이라는 위기를 향한 폭주로 이어지고 있음은 이제 상식이다.

참으로 위험하고 잘못된 사상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은 바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자연을 죽이고, 인간을 죽이고, 지구까지도 파괴하고 있다. 나라가 서양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사는 곳이 서울이 아니라 해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는 각자, 그리고 모두 함께 소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 않은가? 물질문명의 폐해를 말하지만 정작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해월 선생은 ‘천지만물 막비시천주야(天地萬物 莫非待天主也)’라 말씀하셨다. 무위당 선생이 해설하길 ‘하늘과 땅과 세상의 돌이나 벌레나 모두가 한울님을 모시지 않은 것이 없다’<sup>1)</sup>고 했다. 모두 한울님을 모셨으니 모두가 한울님인 것이다. 어떤 존재는 존엄하고 어떤 존재는 비천하다는 식의 차별

---

1) 『나라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1997, 49쪽.

이 없다. 무등<sup>無等</sup>이다. 모두가 신령한 한울님을 모시는 것, 동고동락<sup>同苦同樂</sup>하는 것이 시<sup>侍</sup>(모심)라는 것이다.

지구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지역이 어렵다. 무엇이 원인이고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혼란스럽다. 이러한 일대 위기상황에서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근원이 무엇일까? 생명이요 한울님이다. 모든 생명 즉 모든 한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모든 생명(한울님)과 동고동락하는 데 위기 해결의 큰 길이 있다는 무위당 선생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본다.

## 지역운동과 지역의 '어른'

원주의 '생명과 협동의 공동체'에서 길을 찾기 위해 매년 전국에서 수천 수만 명이 원주를 찾는다고 한다. 왜 원주에 사람들이 몰려드는가? 다른 지역에서도 원주에서처럼 신흥운동, 카톨릭농민회 운동, 민주화운동 등이 전개되었다. 그렇지만 원주에는 무위당 선생과 지학순 주교라는 큰 어른이 계셨기에, 그들과 함께했던 후학들이 지금도 그 뜻을 이어 지역의 어른으로 또 일꾼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다른 지역과 달리 원주에 생명·협동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운동을 진지하게 하는 이들 대다수가 지역사회에 존경할 만한 어른이 계시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어른을 모시고 지역운동을 하는 이들이 많지 않고, 지역운동에서 어른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지역도 많지 않다. 지역사회에 존경할 만한 어른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른을 찾고 모시지 않기 때문에 어른이 없는 것이 아닐까? 어른들의 경륜과 지혜야말로 우리에게 부족한 덕목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선 이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노고 덕분이기에, 우리는 어른을 모시고 존경해야 하는 것이다. 지극히 계산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어른들은 매우 중요한 집단이다. 노령화 사회에서, 특히 그 정도가 심한 농촌 사회에서 어른들이야말로 지역운동의 잠재적 중추세력이다.

세태는 바야흐로 SNS 시대를 맞아 갈수록 빠른 것을 선호하고, 경쟁적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편한 것을 좋아하면서, 어른들을 불편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연에서는 노거수(老巨樹)와 작은 풀들과 어린 새싹이 어우러져 숲을 이루고, 앞 물결과 뒤 물결이 이어져 유장하게 흐른다. 어른의 지혜와 장년층의 원숙함, 청년들의 활기와 아이들의 생동하는 기운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지역공동체는 비로소 제 모습을 찾아가리라 믿는다.

## 지역운동과 '소박한 삶'

우리 사회가 가진 큰 문제의 하나는 지역 간 불균형 발전과 지역감정이다. 그 출발은 산업화 과정에서 일부 세력의 나쁜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엄연한 현실이 되어버렸고 쉽게 해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소외된 지역에서는 균형발전과 배려를 요구하고, 앞서가는 지역에서는 효율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 현상은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어 점점 더 고착화되는 것 같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고루 잘 살 수 있어야 하고, 상호 존중하며 더불어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물질적 차원에서의 격차나 푸대접, 기회의 불균등 등의 해소를 물질문명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 미래를 과거의 연장선상에서만 설정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관점에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물질문명의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하고,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존중되고, 생명과 자립과 협동, 평화가 넘치는 지역의 미래를 즐겁게 상상하자.

이를 위해 욕망의 절제를 전제로 하는 ‘소박한 삶’<sup>2)</sup>을 주민들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선택하는 용기 있는 결단과 도전이 필요하다. 또한, 더 이상 사람과 자연과 역사문화 등을 ‘자원’으로 접근하지 말고, 고귀한 생명으로, 신성한 가치로 존중하자.

## 지역운동과 ‘인문학적 결사’

비상한 시절이다. 일락서산에 해는 지는데 길은 첩첩산중이다.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의견과 공리는 천만 가지인데, 그 무엇 하나 명쾌하게 ‘이것이다’ 하고 주어진 답은 없다. 다행히 무위당 선생처럼 시대의 큰 스승이 계시고, 동서고금의 많은 스승들이 계시기에 그분들의 삶과 사상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또한 생명과 협동과 평화의 공동체를 모색하고 실천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된다.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자각과 위기의식의 공감대가 점증하고 있다.

전 지구적 위기상황에서 문명사적 대전환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감당해야만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의 하나는 급하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 길을 가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잘 모르니, 함께 길을 찾고, 함께 준비하고, 손잡고 갈 사람들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를 위해 인문학적 결사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의 여러 곳에 다양한 인문학 공부모임이 있다고 한다. 지역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무등공부방’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광주의 인문학학당 ‘무등공부방’에는 거꾸로 된 동아시아 지도가 걸려 있다. 보통의 지도에서는 남도가 반도의 끝에 웅색하게 위치해 있지만, 이

---

2) 피에르 라비, 『자발적 소박함』, 예담, 2013. 참조

거꾸로 된 동아시아 지도에서 남도는 바다를 통해 동아시아로 열려 있고 육지로 대륙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중심'이다. 2010년에 시작하여 매주 이어온 강좌가 200회를 넘어섰고, 탐방과 교류행사 50여 회, 지역과 함께하는 행사 30여 회, 국제교류 10여 회 등이 진행되었다. 산하에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분야별 연구소와 사업들이 해를 더할수록 늘어가고 있다. 기본에 충실한 학습, 지역에 대한 철저한 연구, 열심히 살아가는 국내외 지역을 배우고 그들과 교류하고 협력함으로써 여러 분야를 통섭하고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여 학습이 담론이 되고 담론이 정책으로 발전하고 실천 과제를 수행하는 집단지성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무등공부방은 자신들의 작은 시작이 계기가 되어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어울려 남도의 미래를 개척하여 르네상스를 구가함으로써 지역의 자존을 스스로 드높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나주에는 '나주공부모임'이 2012년에 시작해 2년여 동안 격주로 강좌를 열고 있으며, 무등공부방 등과 교류하고 연례 행사도 개최하면서 의미 있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 작은 농촌지역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면서 지역의 과거와 현실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나주공부모임'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지만, 잔잔한 파장을 일으켜 다른 공부모임을 촉발하기도 하고 주목을 받기도 한다.

전국 각지에서의 노력과 대오가 모두 똑같을 수 없고 똑같아서도 안 된다. 지역별로 그 지역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서두르되 서두르지 않고 나아가면 될 것이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큰 흐름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이 산줄기 저 골짜기 크고 작은 물줄기들이 모이고 섞여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에서 만나 하나 되듯이...

## 지역이 희망이다

어느 한 시절 편안한 적 있었던가? 자연이 늘 평화롭기만 하던가? 비바람 불고 눈보라 치는 속에서 새싹이 솟아나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고 번창 하지 않던가?

어느 산야에 피어난 풀꽃 한 송이를 보고 생명의 축제에 초대받아 감동하거나, 세파에 찌들어 자기 안의 욕망과 분노와 근심걱정에 사로잡히고 답답한 일상으로 허우적대거나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 똥통에 머리를 처박고 허우적대면서 살아가든, 늘 고마워하며 이웃들과 함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든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 초록빛 지구별에 초대받은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까?

크고 거창한 생각과 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위당 선생께서 나라 한 알 속에 우주가 있다고 하셨지 않은가? 내가 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이웃들과 함께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제대로 살아보자는 것이 지역운동의 출발이자 끝이 아니겠는가? 지역의 못 생명이 조화롭게 살아가고, 지역이 '유무상자<sup>有無相資</sup>'<sup>3)</sup>의 정신으로 자립과 협동의 공동체가 되고, 지역이 스스로 중심이 되어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미래를 향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자.

지역은 우리 각자의 삶의 구체적인 터전이기에 우리에게 지역운동은 직접적이다. 지역은 내 삶의 장이자 영역이다. 그래서 내가 변하고 이웃이 함께하는 가운데 지역에 희망을 수놓을 수 있다.

내가 희망이고 지역이 희망이다.●

---

3) 동학의 사상. 지식이든 정보가든 돈이든 시간이든 육신의 힘이든 남는 것은 부족한 이들과 서로 나누고 돕자는 의미로, 구한말 동학 포교의 큰 동력이 되었으며, 5.18 광주 '대동세상'과도 유사한 것으로 보임.



## 한국형 생태주의 운동의 태동과 진화

### 동학혁명과 박정희 체제

2014년은 동학혁명이 일어난 지 120년, 해월의 삶과 사상을 흠모했던 무위당 장일순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그 사이에 우리는 일제 강점,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4.19혁명, 5.16쿠데타, 광주항쟁, 1987년 6월항쟁과 같은 거대한 사건들을 겪었고, 그 사건들의 영향을 받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 삶을 규정짓는 공업 자본주의, 그리고 그것의 한 형태인 박정희 체제는 동학을 압살한 일본 제국주의와 다른 듯 보이지만 같은 뿌리를 가졌다. 약육강식, 국가 폭력, 공동체 해체는 이 두 체제의 공통점들이다. 동학도들은 봉건 억압과 제국주의에 저항하며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꿨고, 해월 최시형을 존경했던 장일순은 이승만과 박정희 체제에 맞서 생명을 살리는 세상을 꿈꿨다. 해월과 장일순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를 억압하는 체제가 무엇이고 이를 넘어서서 어떻게 사람과 자연을 살릴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

\*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1962년 울산 공단 기공식에서 박정희 육군대장은 “공업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뿜어나가는 그날엔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눈앞에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연설했다. 그 연설문의 일부는 지금도 울산의 공업탑에 새겨져 있다.<sup>1)</sup> 그 체제는 한편으로 경제성장과 풍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불평등, 억압 그리고 환경파괴를 우리에게 가져다주었다. “4천 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인 부귀”를 이루는 데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한편 그것은 반대자들과 못 생명들의 죽음 위에 세워진 탑이다.

한국의 반공해운동, 환경운동과 생명운동은 이러한 죽음의 구조와 문화 속에서 탄생했다. 환경운동의 선구자 최열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1975년 감옥에 갇혀 공해에 대한 책을 보면서 반공해운동을 시작했다.<sup>2)</sup> 생명사상의 이론가 김지하는 감옥 창틀에서 자라나는 풀을 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장일순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보며 1977년경,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맑스주의를 넘어서서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꼈다.<sup>3)</sup> 그는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당연히 종식되어야 하지만, 자연을 약탈하는 산업문명을 그대로 두고서는 공해 문제, 핵 문제 등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sup>4)</sup> 박정희 체제는 개발과 반공, 독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자연을 착취하며 한반도 남쪽을 지배했다. 이 죽음의 억압 속에서 유기적 지식인들은 사람과 자연을 살리기 위해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

---

1)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한국의 공해지도』, 일월서각, 1986, 52쪽.

2) 최열,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환경운동과 더불어 33년』, 생각의 나무, 2009, 21-24쪽.

3) 장일순,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1997, 123쪽.

4) 위의 책, 103쪽.

## 1980년대의 환경·생명운동

1979년 5월에 감옥에서 나온 최열은 ‘공해문제도 중요하지만, 민주화하고 난 다음에 공해문제를 해결해야지 순서가 맞다’는 동료들의 말에 따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1979년 YWCA 위장결혼 사건에 참여해 다시 옥고를 치렀다. 감옥에서 나온 그는 1982년 공해문제연구소를 만드는 데 참여했고, 1985년 온산병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광주항쟁이 끝나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 숨도 쉬기 힘들 만큼 폭압적 상황에서 원주에서는 하나의 중요한 문건이 만들어졌다.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이 문서는 1981년 가을에 김지하에 의해 초안이 만들어졌고, 원주의 활동가들과 장일순 등이 윤독하고 수정, 가필하여 1982년 상반기에 완성되었다.<sup>5)</sup> 이 글은 김지하의 『남녘땅 뱃노래』에 “삶의 새로운 이해와 협동적 삶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수정하여 실렸다. 이렇게 정리된 생명사상은 드디어 1989년에 「한살림 선언」으로 완성되었다.

1980년대 왕년의 민주화운동 투사들이 환경, 공해, 생명 문제에 관심을 갖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며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박정희 개발독재에 의한 공업화와 이로 인한 환경과 삶의 파괴가 지식인들에게 삶과 운동의 의미를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반성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지식인들은 ‘죽임’의 문명, ‘죽임’의 정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운동과 사상을 고민하고 토론했고 이를 글로 남겼다. 재미있는 것은 1989년 한살림모임에 장일순을 비롯한 김지하, 박재일, 최혜성 등 원주의 운동가들뿐만 아니라 최열 당시 공해추방운동연합 공동의장도 회

---

5) 김용우, “생명사상 및 운동의 초기 형성과 전개: ‘원주보고서’를 중심으로”, 『산업화 이후의 생명운동 연구워크숍 자료집』, 모심과살림연구소, 2011.

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sup>6)</sup> 김지하는 공해추방운동연합의 지도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1970년대 암울했지만 열정이 넘치던 시대를 살아온 유기적 지식인들은 대안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한국의 독특한 사상과 운동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 사상과 운동의 분화

앞에서 보았듯이 생명운동의 싹이 1980년대에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젊은 학생들과 투사들 가운데에는 민족해방이나 계급혁명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이들의 유토피아도 사라져 버렸다. 이들은 빠르게 혹은 천천히 현실주의자가 되었다. 민중이 더 이상 스스로 민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이들은 '시민'이라는 정치적 주체를 찾아 새로운 환경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회원을 모집하고 시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며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시민 환경운동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시민환경운동단체들은 동강댐 반대운동, 새만금 사업 반대운동 등을 통해 자연을 바라보는 새로운 가치관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다른 한편 생명운동은 한편으로 좀 더 근본적인 문명전환운동과 생협을 중심으로 한 협동운동으로 발전했다. 「한살림선언」이라는 거대한 전환의 담론을 만들어낸 한살림모임은 1990년대 중반에 사라졌지만 『녹색평론』이 대안적인 생태 담론을 지속적으로 생산했고, 2002년에는 한살림모임의 정신을 이어받은 모심과살림연구소가 만들어졌다. 생명사상은 한

---

6) 김소남, “1960-80년대 원주지역의 민간주도 협동조합운동 연구: 부락개발, 신탁, 생명운동”,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452쪽.

살림이라는 생협운동을 통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40만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살림'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한살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신뢰의 사회적경제 실험을 하고 있다. 생명 담론은 종교인들의 삼보일배, 생명평화결사 등 여러 운동을 통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켜 왔다.

앞에서 본 시민 환경운동이 환경을 파괴하는 국가 혹은 기업에 대항해 싸우고 부딪히면서 대항적인 녹색 헤게모니, 녹색 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 생명과 평화를 외치는 이들은 마을과 도시에서 서로 손을 잡고 더불어 숲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왔다. 두 운동은 모두 사람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늘도 애쓰고 있지만 그 방향과 방법은 사뭇 다르다.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상황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어디에도 숨을 곳, 도망칠 곳이 없는 위험한 지구에서 우리끼리 유기농산물 먹으면서 잘 살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지구적 위협의 시대에 생협 조합원들이 이제 탈핵을 외치며 아이들 손을 잡고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 녹색당이 창당되어 새로운 녹색정치를 실험하고 있다. 풀뿌리에서 농사를 짓고, 『녹색평론』을 함께 나누던 독자들이 앞다투어 녹색당 당원으로 가입하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 생태운동의 그림자

지난 20여 년간 시민 환경운동은 국가와 한편으로 싸우고 다른 한편으로 협력하며 정책 전환을 통해 지탱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 왔다. 그런데 계속되는 싸움과 협상 속에서 점점 힘은 빠지고 전환의 희망은 희미해지고 있다. 국가와 싸워서 국가를 변화시켜 빠르게 사회를 녹색으로 바꾸려고 했으나 정책의 전환, 구조의 변화는 더디거나 불가능했다. 국가에 맞서 덩치를 키우고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으나 그에 맞는 내공을 쌓는 것도 쉽지 않았다. 열정으로 가득 찼던 연대의 추억도 아련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 문명전환을 외치던 한살림모임이 사라진 자리에 급속히 성장한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자리 잡았다. 두레생협연합, 여성민우회생협, 아이쿱생협 등 새로운 생협들도 나름의 색깔을 갖고 성장해 왔다. 생협들은 빠른 성장 속에서 효율화, 시장화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한살림은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혹은 그 너머에서 새로운 사회적 경제, 생명의 경제를 창조하여 튼튼하고 푸른 숲을 만들어서 많은 생명이 깃들이게 하겠다는 멋진 이상을 마음에 품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생존을 위한 경쟁과 효율성을 명령하고 있다. 모든 세상이 시장의 지배 아래 휩쓸려 들 때 그 소용돌이를 벗어나 생명과 공동체/사회를 다시 불러오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한살림선언」이라는 담론은 있으나 그것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계체제의 시장화와 이로 인한 생태사회 위기가 심화될 때 사회적 경제, 생명 경제의 울타리를 친다고 해도 그 위기의 파도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환경, 생명운동을 넘어선 녹색정치를 꿈꾸고 출범한 녹색당은 낮은 지지율,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으로 고통 받고 있다. 현실 정치가 시장, 독재, 권위주의로 치달을수록 반독재 헤게모니의 목소리는 커지고 그 속에서 소수, 정체성, 생명의 정치는 낡은 진영들의 압력에 고통 받는다.

시민환경운동, 생명운동, 녹색당 운동이 어려움 속에서 삶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동안,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정객들은 타자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정치적 자원으로 삼아 자신들의 개발과 전쟁 중심의 지배체제를 지키고 확대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생태 위기와 경제 위기가 심해질수록 파시스트들의 폭력정치는 더욱 세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교환을 넘어 (순수)증여로

삶과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옛것을 돌아보며 새로운 전망으로 앞날을 헤쳐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의 세계체제가 어디에서든 시장이 사회와 자연을 지배하는 체제임을 모르는 이들은 이제 별로 없다. 세월호와 후쿠시마는 우리에게 이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사람의 생명과 자연의 생존은 값싼 화폐로 대체된다. 개발과 독재의 융합으로서 박정희 체제는 후쿠시마 혹은 고리1호기와 세월호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지금 서 있다.

우리는 수백 년 혹은 수십 년간 자본주의 사회관계에 빠져 들어서 화폐를 매개로 상품을 교환하는 시장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다. 시장의 특징은 이윤을 위해 모든 생산과 소비,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조직된다는 점이다. 그 자체로 소중한 자연과 사람이 화폐를 매개로 부동산과 노동력이라는 상품으로 거래된다. 플라니는 이를 ‘악마의 땃돌’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증여와 호혜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시장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부모 자식, 친구, 연인들 사이에서 우리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나 존경이라는 선물을 주고받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랑과 존경의 증여와 호혜 관계가 자연(혹은 신)으로부터의 순수증여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sup>7)</sup> 태양과 바람과 물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가? 대가 없는 자연의 순수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선물을 돌리고 돌릴 때, 신뢰와 우애의 공동체를 가꾸어 나갈 수 있다.

---

7) 나카자와 신이치,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물신숭배의 허구와 대안』, 동아시아, 2004.

〈표 1〉 교환양식의 무대, 매체, 사례

교환양식	순수증여	증여(호혜)	재분배(약탈)	등가교환
무대	신, 자연	공동체, 사회	국가	시장
매체	자비, 우주적 사랑	우애, 신뢰	권력	화폐
사례	햇빛, 바람, 비	가족, 생활공동체 사회적경제	복지국가, 약탈국가	신자유주의, 발전주의

〈표 1〉은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칼 폴라니(Karl Polanyi,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나카자와 신이치(中沢新一)의 개념을 재구성하여 만든 것이다. 인류는 그 종의 역사 대부분을 자연에 완벽하게 의존하며 살아왔다. 자연이 주는 햇빛, 바람, 비에 의존하여 수렵, 채취의 삶을 살아왔다. 경외의 대상으로서 자연은 신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 이것을 나카자와 신이치는 순수증여라고 이름 붙였다.

“풀 하나, 돌 하나, 예를 들어서 나락 하나도 땅과 하늘이 없으면, 물과 빛이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미물들이 없으면, 이 우주가 없으면 나락 하나가 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장일순)<sup>8)</sup>

이 순수증여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공동체 혹은 사회를 이루어 가족, 친족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인을 환대하며 물건과 사랑을 교환하고 증여하며 호혜의 관계망을 만들었다. 오늘날의 계획적인 생활공동체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사회적경제가 이러한 증여와 호혜의 교환양식을 바탕으로 하거나 그것을 지향하는 사례이다.

그런데 사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람들 사이의 위계가 생기고 이는 거대

8) 장일순, 앞의 책, 94쪽.

권력과 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국가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 다른 국가의 침략 위협에 대한 대비를 자신의 정당성 근거로 삼아, 세금과 균역을 약탈하고 이를 다시 재분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현대 국가는 권력을 매개로 복지국가 혹은 약탈국가로 기능한다.

순수증여, 증여, 재분배의 교환양식 위에 드디어 시장이라는 ‘악마의 멧돌’이 등장했다. 시장은 화폐를 매개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결정짓는 최종심급의 대법관이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그 마지막 형태이다. 장일순은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돈을 모시는 경제지, 생명을 모시는 경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sup>9)</sup>

칼 폴라니<sup>10)</sup>는 자기규제적 시장이 자연과 사회에서 나왔지만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현대의 특성을 비판했다. 가라타니 고진<sup>11)</sup>은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면서 보편적인 평등과 호혜를 지향하는 보편종교의 교환양식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까자와 신이치는 순수증여를 통해서만 가치가 생산되기 때문에 이를 선물의 증여로 순환시킬 때만 새로운 우애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장일순은 이러한 선순환고리를 끊고 생명을 죽이는 문명을 전환하여,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폴라니, 가라타니, 나까자와가 사회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했다면 장일순은 ‘우주적 생명’의 관점에서 인간, 사회, 자연의 하나됨, 한살림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래서 그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하고는 했다.

환경운동과 생명운동은 이러한 순수증여와 증여, 재분배와 시장교환의 선순환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민환경운동은 국가가 재분배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에 대한 약탈에 몰두할 때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

---

9) 위의 책, 52쪽.

10) 칼 폴라니, 홍기빈 옮김, 『거대한 전환』, 도서출판 길, 2009.

11) 가라타니 고진, 『세계사의 구조』, 도서출판 b, 2012.

다. 또한 시장이 자연과 사람을 부동산과 노동력이라는 상품으로 취급할 때 이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애써왔다. 그러나 국가와 시장의 영향력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강화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힘은 부치고, 국가와 자본의 담론에 휩쓸리기도 했다. 생명운동은 국가에 대항해서 싸우는 대신 증여와 호혜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힘으로 시장의 횡포를 막고 자연과 사회를 모두 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들은 국가 폭력과 싸우다가 국가와 닮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순수증여의 자연과 증여(호혜)의 공동체에서 대안을 찾았다. 녹색당은 한편으로 증여와 호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그 공동체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국가와 시장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며 녹색정치를 실행하고 있다.

## 평화, 풀뿌리 생태민주의 녹색정치

민주화운동에 삶을 걸었던 최열, 김지하, 장일순, 박재일 등 투사들이 방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같이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삶을 환경과 생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구할 수 없다는 것,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 독재체제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의 존엄을 화폐로 환원하는 시장을 다시 사회 속으로 불러들이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는 점을 이들은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박재일의 한살림은 40여만 명의 조합원이 먹을거리를 나누는 공동체로 성장했고, 최열이 터를 닦은 환경운동연합은 3만여 회원의 환경운동조직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김지하의 생명사상은 자민족중심주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김지하의 퇴행은 환경과 생명운동이 언제든지 심각한 독단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영광과 치욕을 함께 되돌아보게 되는 오늘, 김지하

와 박재일의 스승 장일순의 삶과 사상은 한살림의 정신적 주춧돌이 되어 비바람을 막아주고 있다.

앞으로의 세계는 구조 변화의 광풍이 우리를 흔들 것 같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쇠퇴와 변형, 미국, 중국, 일본 등 거대 국가들의 군비 증강, 한반도의 위기 심화, 기후변화의 충격, 석유 고갈의 위기, 핵 위협의 심화 등이 우리의 미래에 어두운 구름을 몰고 온다.

구조가 요동치던 시대에 살았던 맑스와 엥겔스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자기 계급이익을 넘어서 보편적인 계급, 계급 아닌 계급으로서 계급지배를 끝내는 미래를 상상했다. 그들은 계급지배가 사라진 자리에 자유로운 개인들의 어소시에이션의 연합이 등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러한 미래는 오지 않았다. 「한살림선언」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업문명을 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문명을 꿈꿨다. 그런데 그 문명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씨앗을 본다. 대안학교를 나와 새로운 청년공동체를 만들어 좌충우돌하며 생태적 자립의 모델을 실험하는 젊은이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가와 시장을 넘어 사회적경제를 실험하는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자라나고 있다. 다른 정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 의회 의원들이 성장하고 있다. 녹색당에 모인 젊은이들이 녹색정치를 실천하고 있다. 공감의 범위를 세계로 넓히는 세계시민들이 자라고 있다. 인간 이외의 생물과 자연을 ‘그’가 아니라 ‘너’, 그리고 ‘우리’로 인식하는 생태 시민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들을 나는 생태민주적 세계시민이라고 부른다. 폭력을 독점한 채 상대국의 폭력을 전제로 권위주의를 유지하는 국가 간 상호의존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한다. 평화, 풀뿌리, 생태민주의 녹색정치를 삶과 정치의 모든 장소에서 실천하는 일이 새로운 문명을 우리 안에서 만드는 일이다.

이제 우리는 서로 손잡고 숲을 만들어 가면서 숲을 해치는 사람들, 그리

고 그 체제와 맞서 싸워야 한다. 순수한 선물을 공짜로 주는 자연을 해쳐서 사랑과 경제와 도덕의 선순환고리를 깨는 사람들과 싸워야 한다. 장일순은 ‘운동에는 다 각각이지만 반생명세력에 대항해서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살림운동의 시각이 정치에서부터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연대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sup>12)</sup>

“용서한다는 것은 같이 공생하려고 할 때의 얘기입니다. 그들이 공생 안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폭력, 비협조해야죠.”<sup>13)</sup>

이 싸움이 승리할 때 국가는 이제 약탈자, 폭력배가 아니라 공동체의 관리자로서 약한 이들을 돌보며, 선물을 나누어주는 재분배의 담지자, 선물이 잘 돌아가도록 살피며 시장이 공평하게 기능하도록 감시하는 관리자가 된다. 이렇게 될 때 공동체, 사회, 마을의 대표들이 만든 생태자치 연방이 지구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위협의 지구화 시대에 숲을 만들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이웃들과 힘을 합쳐 더 큰 숲을 만들어 가고 있다.●

---

12) 장일순, 앞의 책, 80쪽.

13) 위의 책, 132쪽.



## 무위당과 영성적 사회운동

### 무위당이 서울로 간 까닭은?

1987년 12월 4일 무위당 장일순은 서울 제기동의 허름한 쌀가게를 찾았다. 서울에서 도농직거래운동을 본격화하는 박재일을 비롯한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돌 고르는 기계 옆에 쌓인 쌀 몇 포대와 잡곡류, 어설픈게 진열돼 있는 계란과 참기름을 보면 여느 쌀가게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무위당에게 제기동의 쌀가게는 의미심장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 전인 1985년 6월 원주에서 소비자협동조합을 열고 원주 인근 농촌의 생산자와 원주 시내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생산-소비 직거래운동을 시작한 바 있었다. 원주의 협동운동 그룹이 오랫동안 농촌소비조합을 운영해 왔지만,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는 협동조직을 만든 것은 새로운 시도였다. 그러나 원주는 아무래도 소비량이 적었다.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돌파구가 필요했다. 직거래의 획기적 확대가 그것이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라면 무위당의 서울 나들이는 의

---

\*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례적인 격려 방문에 그쳤을 것이다. ‘양적 확대’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적어도 무위당과 원주 사람들에게는 그러했다.

무위당과 박재일에게 한살림농산은 나락 한 알의 개벽이었다. 충청북도 음성 성미마을에서 온 유기농 쌀과 강원도 횡성 공근마을에서 온 유정란을 통해 소비자들의 밥상을 살리고 농민과 땅을 살리는 도농 상생의 생명공동체운동을 실천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였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이해관계가 정반대여서 서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통념을 깨고, 서로를 책임지는 이른바 ‘생산-소비 협동’ 모델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킬 출발점이었다. 생명운동으로의 전환을 천명한 1982년 원주보고서 이후 5년여 만에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회운동이 모습을 드러낸 역사적인 날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생산-소비 하나’의 생명공동체운동이 새 이름을 얻었다. ‘한살림’이 그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살림이고 도시와 농촌이 한살림이다. 기가 막힌 이름이었다. 쌀가게 주인(?) 박재일에게나 이를 축하하기 위해 온 무위당에게는 ‘한살림’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이미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실제 ‘한살림’이란 고유명사는 약 3년 뒤 1989년 9월 한살림선언을 통해 문명전환의 개벽적 언어와 철학이 되었다.

## 계산 없는 협동

무위당은 일찍이 1966년, 박재일이 원주에 왔을 때부터 협동운동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했다고 말한 바 있다. “계급운동이 아니라 협동운동 속에야말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훗날 원주를 찾은 일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회고한다.

그러나 한살림의 생산-소비 협동이 시사하듯 무위당의 협동은 범상치 않았다. 협동은 협동이되 ‘계산된 협동’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기존 협동조

합운동의 한계를 넘어 차원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위당의 표현을 빌리자면, 협동조합은 본래 산업혁명기에 유럽에서 착취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지만 오늘에 와서는 대기업의 하청업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생산조합이든 신용조합이든 소비조합이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협동을 하면서도 이해타산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 ‘계산 되지 않은 협동’이다.

그렇다면 ‘계산되지 않은 협동’이란 무엇일까? 무위당은 그 상징적인 예로 신약성서에 나오는 포도밭 이야기를 소개한다.

“하루 포도밭에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아침부터 온 사람에게도, 저녁에 와서 간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이므로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상식적으로는 아침부터 10배 일을 하였다면 그만큼 더 돈을 주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자연의 나라, 자유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저녁대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한 협동으로 좋지 않겠습니까.”<sup>1)</sup>

무위당의 관점에서 기존의 협동조합은 ‘계산된 협동’이었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였다가 이익이 사라지면 협동을 외면한다. 더욱이 협동조합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른 협동조합과는 자본주의적 경쟁관계와 다를 바가 없다. 생산자조합과 소비자조합과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70년대 원주캠프는 강원도 일원 광산지역 및 농촌지역에서의 수많은 신용협동조합과 소비조합을 만들어 광부들과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으나 종국에는 이해타산 때문에 안타깝게 끝난 경우가 적지 않았다.

---

1) 장일순,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1997, 148쪽.

무위당의 눈에는 도농직거래운동도 마찬가지였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을 꾀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살림농산이 만들어진 1980년대 후반에도 이미 적지 않은 직거래조직이 있었다. 그러나 거의 전부가 유통 과정 축소와 그를 통한 경제적 이익에만 주목했다. 한살림 20년 역사를 담은 『한살림 세상을 껴안다』에서 소개하고 있는 ‘좋은쌀집’도 그 중 하나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것은 한살림뿐이었다. ‘계산 없는 협동’ 덕분이었을까? 무위당의 후배이자 평생 동지인 박재일은 한살림농산의 문을 연 이듬해 새해 아침에 <한살림을 시작하면서>라는 편지를 통해 호소했다.

“땅과 사람, 물건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고 못 믿는 사이가 되는 삶이 살림의 삶일까요. 죽임의 삶일까요? 또한 농산물 값이 내려가면 농민은 울고 소비자는 좋아하고, 농산물 값이 올라가면 소비자는 울고 농민은 좋아합니다. 이처럼 다른 이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옳은 삶일까요?”

무위당과 박재일의 협동은 뭔가 달랐다. 나와 우리의 이익을 위한 협동에 머물지 않았다. ‘다른 이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넘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의 눈물을 닦아주는 ‘계산 없는 협동’을 열망했다. 한살림의 ‘생산-소비 협동’은 생명에 대한 연민,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된다. ‘계산 없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계산 없는 협동’의 출발점은 거룩한 마음의 협동운동이었던 것이다.

무위당은 “왜 한살림인가?”라고 묻고 스스로 답한다. “생명은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야. 하나지. 한살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가 되자는 운동이란 말이지.”

그렇다. ‘계산 없는 협동’의 바탕에는 ‘생명은 하나’라는 깨달음이 깔려

있다.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이라는 자각이 그것이다. 너와 내가 형제이고 자매고 부모이면서도 동시에 자녀라는 것이다.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나무는 산소를 공급하여 나를 살리고, 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식물의 대사를 돕는다. 나무와 나는 둘이 아닌 것이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시대의 불행은 땅과 사람, 물건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갈라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상부상조와 같은 협동의 원리 속에도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자각, ‘너와 나는 하나’라는 깨달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생산과 소비도 한 살림이고, 자연과 인간과 한 살림이고, 온 생명이 한 살림인 것이다.

무위당이 서울로 간 까닭은 한살림농산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날 ‘계산 없는 협동운동’, 혹은 거룩한 협동운동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숨겨진 하나됨’이 생산-소비 협동으로 실현되는 영성적 사회운동의 첫 발걸음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 생명사상과 영성적 사회운동

생명사상이란 쉽게 말해 이 세계의 모든 존재는 살아있다는 생각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그것은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이다. 그것은 ‘생명은 하나’라는 말로 압축된다. 생명세계는 근원적으로 하나이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무위당은 그 ‘숨겨진 하나됨’을 동학의 ‘시천주侍天主’를 빌려 ‘모심侍’이라고 말한다.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는 시천주로 시작되는 21자 주문의 머리글자인 모심侍을 이렇게 설명한다. “안에 신령神靈이 있고 밖에 기화氣化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요(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

2000년 한살림의 여성 활동가들이 「한살림선언」 등을 참고해 정리한 ‘한살림운동의 지향’ 제1항엔 이렇게 쓰여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모셔진 거룩한 생명을 느끼고 그것을 실현합니다.” 동학의 내유신령 외유기화의 구조와 비교된다. 이 한 문장 안에 영성적 사회운동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듯하다.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에 대한 자각과 그것의 사회적 실현이 곧 한살림운동이요, 생명운동인 것이다.

## 내유신령: 숨겨진 하나됨

내유신령<sup>內有神靈</sup>, 즉 우리 안에 모셔진 거룩한 생명이란 기독교식으로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이며, 불교식으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불성<sup>佛性</sup>이다. 또한 과학적 표현을 빌려 말하면, 내 안에 응축된 우주 진화의 역사이다. 요컨대 모든 존재의 뿌리는 우주적이며 또한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무위당의 ‘모심<sup>母心</sup>의 생명사상’도 결국 ‘생명은 하나’라는 숨겨진 하나됨에 대한 통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운 최제우의 “내 마음이 네 마음”, 즉 오심즉여심<sup>吾心卽汝心</sup>의 신비체험도, 무위당의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이라는 깨달음도, 한살림 협동운동의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라는 명제도 생명사상의 관점에서는 숨겨진 하나됨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그것은 삶/생명의 우주성에 대한 통찰이기도 하다. 한살림선언에서는 ‘생명에 대한 우주적 자각’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한마디로 그것은 137억 년 전 빅뱅 이후 물질적·정신적·사회적 진화의 역사가 내 안에 응축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도덕이나 철학이 아닌 과학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나의 삶은 최소한 ‘태양계적’이긴 하다. 태양이 있어야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식물이 존재해야 산소를 공급받고 유기물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삶/생명은 우주적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다면 존

재 하나하나가 신령할 수밖에 없다. 감자 한 알도 달리 보인다. 단지 농민의 땀만이 아니다. 칼로리와 가격 아래 숨어 있는 천지만물의 조화와 우주의 숨결을 느낀다.

우리의 삶과 실천 역시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도 사람과 똑같이, 우주생명을 모시는 존재이며 나와 둘이 아니다. 무위당이 그러했듯이 술 한 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들풀이 예사롭지 않고 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 외유기화: 새로운 공동체

나라 한 알과 티끌 안에 모셔져 있던 우주가 아름다운 생명공동체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외유기화<sup>外有氣化</sup>다. 또한 숨겨진 하나됨이 밖으로 드러날 때, 사회적으로 그것은 형제애/자매애의 공동체가 된다.

고유명사 한살림이 아닌, 보통명사 한살림공동체가 무위당에게는 그 하나됨의 실현태였을 것이다. 도농공동체와 생산-소비 협동이 '생명의 하나'의 실현이며, 아파트 안에서 물품을 나누는 소비자공동체와 '관계가 있는 농업'으로 땅을 살리는 생산자공동체가 외유기화였을 것이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면, 너의 눈물은 곧 나의 슬픔이 된다. '계산된 협동'이 '계산 없는 협동'으로 전환된다. 경제적인 이해관계는 충돌된다 하더라도 생명은 하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생산자와 소비는 이제 서로를 배려하는 친구가 되고 자매가 된다. 둘 사이 상품을 팔고사는 관계를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로 변화한다.

답례마저도 차원이 달라진다. 무위당은 강조한다. "답례는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뒤로 하는 거야." 옆으로 답례, 뒤로 답례가 이루어지자 받은 만큼만 주고받던 양방향의 상호관계가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고 또한 더욱 깊어진다.

특별히 하나됨을 체험한 공동체에서는 생명 나라의 법이 이 땅에서 실현

된다. 동학의 접<sup>接</sup>이 그러했고 로마의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여자와 백정과 아이들과 병든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따로 없고, 먼저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의 차별이 없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자신의 것을 나눈다.

이것이 진짜 새로움이다. 신약성서의 중생의 체험처럼, 새로운 공동체로의 거듭남이다. 기존의 공동체가 이해관계로 엮인 구속의 공동체였다면, 새로운 공동체는 숨겨진 하나됨의 사회적 실현으로써 이 땅 위에 이루어진 생명나라이다. 이를테면 거룩한 공동체이다. 사전의 의미 그대로 뜻이 높고 위대한 공동체이다.

## 영성적 사회운동

이렇듯 계산과 계약이 아닌 숨겨진 하나됨에 기초한 새로운 공동체 만들기가 곧 영성적 사회운동이다. 불성의 실현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현<sup>顯</sup>현<sup>現</sup>이다. 이성적 사회운동이 아닌 영성적 사회운동, 배제의 사회운동이 아닌 거룩한 사회운동이다.

기존의 사회운동이 이성적 주체를 전제로 사회적 공공성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영성적 사회운동은 영성적 주체성의 회복을 바탕으로 생명 공공성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생명공공성이란 숨겨진 하나됨에 기초한 공공성을 말한다. 사회적 영성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시인 김지하는 ‘천지공심<sup>天地公心</sup>’이라고 말했고, 일본 공공철학연구소 김태창 소장은 ‘영성적 공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인간적인 것과 생태적인 것, 나아가 우주적인 것까지를 아우르고 또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됨, 그것이 영성이다. 초끈이론의 그것처럼….

이때 영성적 사회운동은 종교적 사회운동, 즉 불교와 가톨릭 및 개신교의 교리와 교단조직에 기반한 사회운동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마치 학교가 지성을 전유할 수 없듯이 종교가 영성을 독점할 수는 없다. 더욱이 문명

사적 전환기에 즈음하여 우리는 비종교적·탈종교적 영성공동체와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 프라우트 이론에 입각해 새로운 공동체와 영성적 사회운동가 모델을 제시하는 수행공동체 아난다마르가에서 오히려 큰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생명평화운동, 생명살림운동, 생명공동체운동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생명운동’이야말로 영성적 사회운동이다. 거룩한 사회운동이다. 생명운동은 무엇보다 아프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활동이지만, 그 공감의 범위가 깊고 넓다는 점에서, 인간적인 것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영성적 사회운동이다.

영성적 사회운동으로써 생명운동은 “그대가 나”라는 깨달음, 혹은 “생명은 하나”라는 깊은 마음의 통찰에 기초한다. 생명의 눈으로 보면, 공동체의 기초는 독립된 개인 사이의 ‘사회계약’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로 연결된 ‘생명의 마음’이다. 합리적 이성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으로 표현된 ‘숨겨진 하나됨’의 영성이다. 그것을 무위당은 ‘모심(侍)’이라고 말한다. 나락 한 알 속에 있고, 밥 한 그릇 안에 숨어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세월호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 안에, 쓰러진 벼단을 일으켜 세우는 농부의 마음 안에, 생산자의 형편을 헤아리는 소비자의 마음 안에 있다.

## 전환, 무위개벽의 꿈

거룩한 사회운동이라고 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엄밀하고 정확하게 지금 여기의 포도원을 만들어간다. 무위당에겐 그 중 하나가 제기동의 쌀가게였다. 후천개벽, 우주적 합일로 뜻이 높고 위대하긴 하지만, 또한 그 우주가 좁쌀 하나, 티끌 하나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주를 덮는 무위당의 무수장삼(無袖長衫)의 꿈이었다. 성글고도 촘촘한 무위당식 사회운동 전략이었다. 개벽적 전환의 기획이었다.

## 엑서더스

‘엑서더스’가 첫 출발이다. 1992년 어느 강연에서 하신 말씀이다. 세월호의 참담함 속에서 『나라 한 알 속의 우주』를 다시 읽다 눈에 화 들어온다. 탈출, 그렇다. 거룩한 사회운동, 즉 생명운동은 대탈출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

“반생명적인 일체의 조건을 갖다가 다시 보고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탈출해야 돼. 엑서더스. 그것은 주먹을 쥐고 상대를 때려눕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변화시키는 운동으로, 비협력으로 탈출해야 돼. 비폭력으로 탈출해야 돼.”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내려야 할 때이다. “이대로는 정녕 아니야”,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라는 느낌이 들면 결단을 해야 한다. 결정적인 시기에는 ‘생명 감각’에 의지해야 한다. 전환의 계기가 ‘각비(覺非)’, 즉 ‘아니다’라는 자각이라면 그 실천적 출발점은 엑서더스다.

농약으로부터의 엑서더스

핵으로부터의 엑서더스

서울로부터의 엑서더스

고용노동으로부터의 엑서더스

요양병원으로부터의 엑서더스

학원으로부터의 엑서더스

자동차로부터의 엑서더스

자본 숭배와 경쟁 시스템과 물질주의적 생활양식으로부터의 엑서더스

이미 탈출은 시작되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탈(脫)’ 할 수밖에 없다. 탈도

시, 탈학교, 탈노동, 탈성장, 탈종교, 탈정당... '반생명적인 것'으로부터 지금 당장 탈출해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망설일 필요가 없다. 탈출하는 순간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지금은 떠나야 할 시간이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할 때다. 출애굽과 함께 우리 안에는 이미 가나안이 오고 있는 것이다.

귀농이 그렇고, 힐링 신드롬과 협동조합 열풍이 그렇다. 결단하여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향하는 순간, 귀농공동체가 눈에 들어온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고단하여 위로를 받고자 하는 순간, 이곳저곳에서 마음공부모임이 만들어진다. 자본 중심의 경제를 포기하는 순간 사람 중심의 경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탈학교 대안교육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비정당적 정치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비종교적 영성공동체가 만들어진다. 탈(고용)노동생활협동공동체가 만들어진다.

## 깨달음과 새로운 공동체

1977년 즈음부터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무위당은 고백한다. 이런 식으로는 “아니다”라는 성찰이다. 기존의 삶의 방식, 기존의 사회운동 방식으로는 ‘아니’라는 자각, 이른바 ‘각비覺非’가 그것이다. 그리고 다시 근본을 묻기 시작한다.

“난 사실은 77년서부터 결정적으로 바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네. 땅이 죽어 가고 생산을 하는 농사꾼들이 농약 중독에 의해서 쓰러져가고, 이렇게 됐을 적에는 근본적인 문제서부터 다시 봐야지. 산업사회에 있어서 이윤을 공평분배 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만 가지고는 풀릴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나는 방향을 바뀌야 되겠구나, 인간만의 공생이 아니라 자연과도 공생을 하는 시대가 이제 바로 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방향을 바뀌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지.”

잠시 기존의 활동을 멈추고 성찰한다. 되돌아본다. 아마도 이때 젊은 시절 접했던 동학을 다시 보지 않았을까 짐작해본다. 귀환, 돌아감이다. 근본으로 되돌아감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듯이 엑서더스는 사실 돌아감이다. 제 삶의 터전으로, 생명의 근본자리로의 귀환이다.

그리고 얻은 깨달음,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그리고 “생명은 하나”. 나만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만의 생명이 아니라, 인간만의 생명이 아니라 모두가 한 생명이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하나로 연결된 생명공동체이다. 인간과 자연은 둘이 아니다. 하나이다. 삶의 영역이 우주로 확장된다. 나에게서 이웃으로, 다시 자연으로, 그리고 우주, 혹은 깊은 내면으로 확장 심화된다. 이것이 생명의 본래 모습이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일본과 대만 등에 활동가들을 보내고 새로운 공동체 만들기의 사례를 연구한다. 영감을 얻고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무위당과 원주의 활동가들은 지금 여기의 유토피아를 만들어간다. 그리하여 1985년 원주소협이 문을 열고, 1986년 한살림농산이 활동을 시작한다. 기존의 공동체와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사회운동 방식도 자연스럽게 변화했다. 협동조합은 이제 이윤을 위한 결사체가 아니다. 생명의 눈으로 본 협동운동은 너와 나 안에 숨겨진 하나됨의 실현이다. 상대를 타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너를 변화시킨다. “사심 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나면”, 지금 여기 하느님나라가 된다.

못 생명의 아픔과 함께하는 ‘치유의 사회운동’, 구조를 타하기 전에 삶을 바꾸는 ‘대안적 사회운동’, 부엌과 농촌에서 문명을 바꾸는 ‘전환의 사회운동’, 우주로 확장된 삶의 영역 속에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알아차리는 ‘깨달음과 영성의 사회운동’이 시작된다. 거룩한 사회운동이 시작된다. 새로운 협동운동이 시작된다. 우리를 위한 협동운동, 이윤을 나누는 협동운동에서 계산 없는 협동운동, 서로를 살리는 협동운동이 시작된다.

## 무위의 꿈

무위당의 삶보다 조금 더 극적이긴 하지만, 수운 최제우의 삶도 비슷한 궤적을 그렸다. 피난(避難)과 장생(長生)의 땅을 찾아 헤맸지만 어디서도 궁궁촌을 찾지 못했다. 과거시험도 아니고 장사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서학도 아니고 비결서도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귀(歸), 과거의 사사로운 욕망을 훌훌 털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문득 ‘하나됨 체험’을 하게 된다. 깨달음이다. 그리고 접(接)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 전환의 프로세스라고나 할까. 이를테면 이런 과정이다.

- 1)각비(覺非): “더 이상 이렇게는 아니다”라는 생명감각
- 2)엑서더스(歸): 기존 질서로부터의 탈출, 혹은 제자리로 돌아감
- 3)각성: ‘생명은 하나’라는 깨달음
- 4)새로운 공동체: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내용과 형태의 생활/문화 공동체
- 5)사회개혁: 새로운 삶과 공동체의 사회적 확장, 그리고…

물론 각비와 돌아옴과 깨달음과 새로운 공동체 만들기는 단계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단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때가 되었다는 것,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다. 무위당과 선배님들이 깨달음과 새로운 공동체로 뿌려놓은 씨앗들이 싹이 트고 자라서 작은 숲이 된다.

그렇다. 이제 사회개혁이다. 때가 되었다. 그때가 지금이다. 이심전심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열망이 표출되고 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미세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경향각지에서, 지구 곳곳에서 새로운 움직임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깊은 산속 이러저러한 웅

달샘에서 발원한 새로운 흐름이 내가 되고 강이 되어 바다로 향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있다.

무위당의 무위(無爲)를 다시 생각해본다. 무위당은 동학을 빌려 무위이화(無爲而化)의 길을 이야기한다. 무위이화를 글자 그대로 읽으면, ‘힘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말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덕분에 저절로’이다. 이심전심으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고 천지 기운이 활동하여 어떤 일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꿈은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는 것이다.

## 거룩한 것에서 문화적인 것으로

원주보고서를 통해 생명운동이란 말이 세상이 처음 나온 지 정확히 32년, 그리고 생명운동가 무위당이 생명나라로 돌아간 지 20년, 무위당의 거룩한 사회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무위개벽의 꿈은 방방곡곡에서 삶의 전환, 사회적 전환의 사발통문의 꿈으로 연결되고 새로운 공동체 만들기로 확산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생명운동으로 뒤따르고 있다. 수많은 이들이 협동운동을 배우기 위해 원주를 찾고 소박하기 이를 데 없는 무위당기념관(?)에 들른다. 생명사상에 기초한 영성적 사회운동은 문명사적 전환기 한국 사회운동 새길 찾기에 큰 영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어느덧 30년이다. 거룩한 사회운동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요컨대 영성적 기초는 더욱 깊게 하면서도 그 드러난 모습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군사독재 시절의 영성이 무겁고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면, 물질적 풍요 속 오늘의 거룩함은 좀 더 경쾌해질 수 있지 않을까. 영화 <시스터 액트>의 춤추는 수녀님들처럼 말이다.

이렇게면 거룩한 것에서 문화적인 것으로의 변화라고 할까. 생명운동은

이제 문화로 꽃피워야 한다. 숨겨진 하나됨과 우주생명 리듬은 예술로 표현되어야 한다. 원불교 교전에 “풍류로써 세상을 건지리라.”라는 말이 있다. 신라시대 세상을 구한 피리 만파식적이 유명하다. 전일성의 과학자 에리히 안츠는 『자기조직하는 우주』라는 책에서 ‘탁월한 예술은 우주의 깊은 마음과 닿아 있다’라고 쓰고 있다. ‘거룩한 것에서 문화적인 것으로’라는 말은 결국 문화적으로 표현된 신성이다. 문화는 신성함으로 우주의 마음에 다가가고, 신성함은 무늬를 통해 드러난다.

다음으로 거룩한 사회운동은 여성과 만나야 한다. 생명운동은 시작 때부터 살림하는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였으나 여전히 답론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듯하다.

미국과 한국에서 치열하게 에코페미니즘을 공부하고 또 활동해온 정현경 교수는 1991년 무위당을 찾았을 때 “문명의 전환”이라는 말로 시대를 평가하는” 무위당에게서 뭔가 얘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무위당의 답 가운데 하나는 부드러움이었다.

“여태까지 걸려 있던 것이 얼마나 영악스럽게 단단한지 몰라요. 이건 부드러운 게 아니어서는 못 풀어. 강한 것 가지고는 백번 쳐봐야 당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성의 핵은 부드러운 거라고요. 지금 페미니즘의 개념을 정확히 잡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부드러운 게 아니고서 페미니즘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상실한 거지. 모든 생명은 연하잖아. 그러니까 살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딱딱한 대지를 뚫고 나오는 거지.”

무위당과 현경의 만남이 시사하듯, 무위당은 한살림의 여성들에게 도통(?)을 전수했는지도 모른다. 현경은 2000년대 초 무위당과 김지하를 통해 ‘살림의 사상’을 접하고 ‘살림이스트 선언’을 하였다. 현경이 말하는 살림이스트는 말 그대로 살리는 사람이다(살림꾼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영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뭔가 가벼우면서도 그럴 듯해 보인다.). 여신이면서 동시에 생활지킴이인 깊은 마음의 살림이니스트. 그런 점에서 현경의 살림이스트 선언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어쩌면 생명운동의 변신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살림이스트는 모든 것(특히 죽어가는 것)을 살아나게 함. 살림은 한국 여성이 매일 하는 가정일을 일컬음. 예를 들면 나무하기, 물 길기, 음식하기, 빨래하기, 배 짜기, 아이 키우기, 병간호, 노인 돌보기, 꽃나무 가꾸기, 우물 지키기, 소·닭·개 키우기, 그리고 영靈들 돌보기 등. … (또한 살림이스트는) 마술사, 혁명가, 여신처럼 모든 것을 만짐. 그녀가 만지면 모든 것이 웃고, 자라고, 태어나면서 생생하고, 색깔 있고, 살아나게 됨. 그녀는 채식주의의 음식을 즐겨 만듦.(그러나 아주 가끔, 그녀가 화가 매우 많이 나면 못된 놈들을 큰 솥에 넣고 끓이기도 함.) 그녀는 운동의 전략이나 근본적인 사회 변혁의 비전을 요리해내는 것도 즐김. … (이하 생략)”<sup>2)</sup> ●

---

2) 현경, '살림이스트 선언', 『미래에서 온 편지』, 열림원, 2001.

# “지금 여기, 치유와 전환의 생명운동을 위하여”

- 무위당 20주기 기념 생명운동 대화마당



무위당 장일순 선생 20주기를 맞아 지난 5월 21일 원주 가톨릭센터에서 무위당 사람들과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준비한 생명·협동 대화마당이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 다양한 영역에서 생명운동과 협동운동을 펼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 귀한 생각을 나눠주셨습니다. 생명운동 대화마당에서 나온 이야기의 일부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전체 내용은 모심과살림연구소 누리집과 대화마당 자료집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 “지금 여기 무위당이라면 무슨 말을 건넬을까”

“너무나 많은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많이 아파하고 서로 힘을 북돋워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참 귀하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 무위당 선생께서 “눈물겨운 아픔을 선생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다.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지금,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힘을 북돋았으면 좋겠다. 요즘 저는 부모세대가 비교적 주류에서 조금 빗겨난 속에서 자라난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들은 돈이나 경쟁에서 조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들에게 부모나 선배 세대들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지금의 주류적 가치를 벗어난 사람들의 삶이 참 중요하겠구나 생각하게 된다. 각자 내 삶에서 어떤 분을 모실까? 어떤 분을 살릴까? 라는 물음을 가지면 좋겠다.” 윤박경(대화문화아카데미)

“비난하는 만큼 자책하게 되는 이 현실의 지점이 어찌면 새로운 문명을 향한 전환의 시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2002년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갔던 붉은 물결이 스스로도 낫설었던 우리 안의 신명이 바깥으로 드러난 밝은 기운의 표출이었다면, 올 2014년에 아직도 번져가고 있는 노란 물결은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깊은 자기 성찰의 기운으로 이어지기를 비는 마음이다. 무위당 선생의 말씀처럼 주장하기보다 고백하는 말과 글이 서로의 가슴에 공명을 일으키며 번져가서 마침내 새 시대로 넘어가는 의식의 임계질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를 살리는 기운과 정보와 기도를 연결시키는 일을 위해 헌신하려 한다.” 전진택(생명평화연구소)

## “지금 여기 생명운동,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식 때,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아야 하는 보호자라는 표현을 쓰셨다. 교황께서 하신 이야기는 무위당 선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소비주의에 의한 것, 사회적 약자를 빈곤화시키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금 문명의 핵심을 산업주의로 보고, 생태주의로 가자는 것이다. 산

업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생태적 문화와 정치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나부터 우뚝대지 말고, 기는 겸손함을 가지고, 운동의 부드러움을 생각하면서, 풀 한 포기 소중함을 성찰하는 데서 생명운동이 시작될 것 같다.”

맹주형(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지금까지 생명운동은 우리 사회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많은 답을 던져주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말과 가치관들을 지금 2014년 한국 사회의 현실에 적용할 때, 과연 무엇을 고민하고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자꾸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잘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교육, 정치, 경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늘어갈 때 그 아름다운 생명의 말이 구체적인 현실로 되지 않을까? 모든 지역과 마을 모임에서 자본주의 경제와 정치와 현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생명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돈으로 줄 세우고, 돈을 소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 시대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함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가능할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가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변화는 진짜 주인이 주인인 마을이 만들어지고 힘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럴 때 시와 군과 구를 바꿀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에너지와 먹을거리를 지급하는 지역순환사회를 만들어간다면 국가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요구할 것은 정확하게 요구하되,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 나가면 어떨까. 단순하고 소박하게, 품위 있게 사는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양재성(예수살리기)

## 파국을 넘어 전환의 새로운 길로 - 국가개조론에 부쳐

### 세월호 참사가 우리 시대에 던지는 질문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전체를 커다란 충격에 빠트렸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300명 넘는 생명들이 무참히 목숨을 잃는 과정을 온 국민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무나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참사의 충격 정도는 예전의 것과 차원이 다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의 발생 및 구조 과정 전반에서 정부의 대책과 언론 보도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본 상식마저 허물어버리는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무능력과 무책임의 끝을 보여준 정부는 물론이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사고 수습'보다 '여론 수습'에 더 몰두하고 있으니,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절망감을 넘어 분노로 가득하다. 과연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이런 사회에서 다가올 미래를 낙관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심각한 물

---

\*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장

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5월 말 기준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이 200만 명을 넘었다. 또래 친구들을 잃은 학생들부터 소위 ‘앵그리 맘<sup>angry mom</sup>’까지 수많은 시민들이 가슴에 추모의 노란 리본을 달고 거리로 나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과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데는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아이를 살려내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오히려 이들을 통제하고 그 뜻을 왜곡시키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기본 책무여야 할 국가가 보여준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시민들에게 충격과 함께 ‘과연 우리에게 국가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하였다. 게다가 시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해결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은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이념 공방을 벌이기에 바빴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은 어린 생명들이 무참히 희생된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들에 대해 ‘대통령 지키기’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시대적 열망에 대한 물음도 바뀌고 있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부자<sup>富者</sup>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 가능하게 비춰진 소망이었다. 2001년 말 한 카드회사의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문구는 IMF 경제위기로 ‘평생직장’의 신화가 무너지면서 생존의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모두 부자’는 현실과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신자유주의가 확대되면서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가계 부채는 빠르게 늘어났다. 정상적인 노동을 통한 소득 창출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부동산과 주식, 복권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자기자본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헛된

꿈일 뿐이었다. 이런 가운데 2008년부터 불어 닥친 세계경제 위기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어놓았다. 고용 불안과 소득 양극화는 계층과 세대를 넘어 삶의 깊은 불안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가계는 물론이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난 부채는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까지 저당 잡혀버리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

이런 가운데 작년 말부터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사회 전 영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국가 기관의 선거개입,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던 사람들에게 대한 대량 직위해제,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한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등의 일련의 사태는 정치와 거리를 둔 채 ‘개인의 안녕’에 매달려 온 사람들에게 자기 성찰의 목직한 물음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리고선 몇 달 지나지 않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절박한 생존 위기 상황에서 ‘안녕’에 대한 질문은 오히려 소박해 보였다. 이번 참사는 순식간에 수많은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끔찍한 일들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프게 확인시켜 주었다. 게다가 우리가 믿고 의지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생명 위기 상황에 대해 사전적 대응과 사후적 조치 모든 면에서 참으로 무감각, 무능력, 무책임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충격을 넘어 패닉 상태로 빠지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놓고 수많은 분석과 진단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생명’보다 ‘돈’을 앞세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탈바꿈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돈 중심으로 모든 가치가 전도顛倒된 사회를 생명이 우선하는 사회로 전환轉換시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 신神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즉 배금주의拜金主義 시대의 모순을 세월호 참사가 극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조선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수명이 다되어가는 낡은 선박을 수입해 불법 증축하고, 규정을 어겨 화물을 과적하

고, 직원 안전교육보다 광고와 선전에 약 500배 많은 돈을 지출하고, 선박안전 점검 기관들과 유착하고,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선장을 비롯해 직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워 온 선박회사는 승객 안전보다 돈벌이가 우선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사고 이후에도 신속한 구조와 수습 역할을 해야 할 당사자와 관련 기관들이 돈 문제에 붙들려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 구조보다 보상에 걸림돌이 될 화물 과적 사실을 숨기는 데 절체절명의 시간을 허비한 채 먼저 탈출해 버렸고, 사고 직후 선박 구조를 위한 해상크레인 투입도 사용료 부담 문제로 늦춰지고, 민간 인양업체가 사고 수습에 독점권을 행사하면서 비롯된 각종 잡음의 배경에도 결국 돈 문제가 얽혀 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사고의 책임자들은 희생자들의 목숨도 돈으로 계산해 차별하고 있다. 사고를 낸 선박회사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희생된 20대 젊은이들이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일반 승객도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비 지급조차 거부했다니 돈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 낸 현실이 무섭고 서글프기만 하다.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온 '경제성장 제일주의', '물질주의', '결과중심주의', '속도주의'의 낡은 관성을 깨트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 혹자는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이 우리 사회의 시대 구분에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반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통찰, 그리고 특별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 파국을 넘어서기 위한 거대한 전환은 그 필요성과 무관하게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는 낡은 관성들도 오랜 시간에 걸쳐 이념과 제도로 고착화 되고 거기에 영향력을 가진 집단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면 그것 자체가 권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를 통해 '돈'보다 '생명'이 우선해야 한다는 자각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우리 현실은 결코 낙관치 않다. 세계적 경제 위기와

생태 위기 속에서 기존의 경제성장 모델 자체가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있지만 기존의 지배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택을 하는 데는 주저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지금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적 추모 분위기가 지속되자 ‘소비심리 위축’을 경고하면서 신속한 경제 살리기를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려내야 할 경제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해답은 매우 빈곤하다.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정부부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그렇게 외치고 투자를 늘려 왔지만 막상 결과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 기간 중 우리나라 10대 재벌은 국가 전체 성장률의 몇 배가 넘는 연간 10%대의 매출액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이들이 만들어낸 고용은 2.5% 수준이었다. 작년에 매출액 1조 원이 넘는 159개의 대형 상장사(금융회사 제외) 가운데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더 큰 곳이 36곳으로 22.6%에 달한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사회 이슈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OECD국가에서 1위 수준이다. 작년만 해도 가족 생계를 위해 일하던 사람들이 매일 5.2명씩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장기 저성장 시대를 맞아 저임금, 저금리에 기반한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지만 FTA, TPP 등 개방경제를 향한 정책 기조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그 영향력과 지속성 측면에서 세월호 참사보다 더 큰 생명 위기 상황도 우리 눈앞에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 4월에 사상 처음으로 한 달 평균 400ppm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별로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지 못했다. 현재 폐쇄 중인 세계 원전의 평균 수명이 23년인데 설계수명 30년을 넘은 36년 된 위험천만한 노후 원전을 2017년까지 재가동하려는 것이 지금의 우리 사회 모습이다. 1978년 원전 가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각종 사고와 고장의

로 19일에 한 번꼴로 가동이 중단됐다는 소식에도 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바쁜 걸음을 멈추고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예견된 재난' 상황들을 눈앞에 두고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국으로 치닫는 '욕망'의 기관차에서 선뜻 내리지 못한 채 주저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 전환의 실마리는 관료 조직의 혁신으로부터

반복, 확대 재생산되는 위험 요인들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일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무사히'라는 심정으로 마냥 버티고 살아갈 수만은 없다. 이제라도 이윤 추구와 돈 중심의 사회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총체적 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기심에 대한 무한 추구를 전제로 한 지금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 공동체의 운명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올바르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에도 성수대교 붕괴, 서해페리호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씨랜드 화재, 대구지하철 참사 등 수많은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난 예방과 관리, 수습 체계 강화를 정부가 약속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돈을 앞세운 일상화된 낡은 관행들이 쌓여서 비극적인 재난으로 드러난 것이다. 적어도 사고 발생까지의 과정을 보면 관련 당사자들은 예전처럼 관행대로 판단하고 움직였는데 결과는 엄청난 참사로 돌아왔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관련자들 개인의 탓으로만 돌려버리면 구조 및 시스템 자체와 연결되어 있는 위험의 본질은 놓

칠 수 있다. 사고 가능성이 높은 '낡은 배'는 그냥 두고 운행하는 사람만 바꾸는 꼴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삶에 대한 태도 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구조화 된 시스템 자체를 바꿔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제도적 타살'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시스템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가지는 부실과 결함까지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재난전문가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문가 배치와 콘트롤타워 강화로 지금과 같은 위험사회가 만들어내는 재난 상황을 사전 예방하기는 어려우며 사후 수습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나면 관성처럼 관련 분야 행정조직은 더욱 커져서 테크노크라트들의 일자리만 늘어나고 시장에서는 새로운 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나오는 지금의 사회 구조와 시스템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시스템 개혁을 통한 전환의 실마리로 우리 사회 관료 조직의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영향력 집단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관료 조직을 문제 삼는 것은 이들이 공적 자원을 다루는 특권을 활용해서 사회 전반에서 이익 집단 카르텔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들 관료 조직은 지역, 학교, 고시 등의 연줄망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 시스템은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정치인은 선거에서의 투표를 통해, 기업인은 시장에서 구매행위를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법과 제도의 보호막 속에서 전문성과 비밀주의를 내세운 관료 조직에 다가가기에는 현실의 문턱이 너무도 높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을 짚어보기 위해서는 시대에 따라 변해 온 관료 집단의 성격과 역할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대 사회에서 관료의 본래 역할은 시장의 독점적 사익추구 행위를 견제

하면서 시장 질서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관료들이 하는 공적 사무(公務)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객관적 평가를 통해 능력 위주로 관료를 선발, 임용하고 직업공무원제도를 통해 신분을 보장해 왔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라 탈규제와 민영화를 앞세운 기업가적 정부가 등장하고, 개방형임용제 등 관료사회의 변화를 위한 조치들이 생겨났다. 즉 시대 변화로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공공성 실현에도 더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런데 관료 사회는 이런 상황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희석시켜 왔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 지난 세기 개발국가를 통한 근대화 과정에서 관료 집단은 국가 형성과 사회 건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이들은 민주화 과정을 통해 정치권력의 구심력이 약해지면서 상대적 자율성이 높아지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이익 집단으로 빠르게 변모했다. 즉 관료 집단이 정경유착의 실행자 위치에서 민관유착의 주체로 등장한 것이다.

강력한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 역할을 하면서 관료 조직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해진 데다,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전근대적 연줄이 능력에 우선해 작동하는 것을 자주 확인시켜 준 것이 우리의 관료 사회 모습이기도 했다. 특히 정치적 연줄에 따른 '낙하산'은 오랜 관행이 되어 관료들의 줄 세우기를 부추겨 왔고, 그 결과 공명심과 합리성보다 출세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소위 '잘나가는' 기형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사업'처럼 경제와 사회, 환경 등 모든 면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국책형 개발 사업들이 정치 논리로 제안되고 무리하게 집행되어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에는 책임지지 않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왜곡 현상의 이면에는 대선을 비롯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논공행상하듯 정치권 인사를 공공기

관에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관행들이 미친 영향도 크다. 결국 자본과 권력이 관료를 도구화 하면서 생기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관료들은 전관 예우 등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골적으로 나서 왔다.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 사회의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관료 조직이 시대적 소임을 제대로 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조직에서 일했던 이들이 탐욕과 부패의 상징이 되고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문제 집단으로 지목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지금의 관료 조직이 문제 해결에 있어 무능력, 무책임은 물론 문제 원인의 주요 당사자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은 없고 '탐욕'만 남은 이익집단이 되어버린 관료 사회를 지켜보면서 탈법적 범죄조직인 '마피아'에 빗대 '관피아(관료+마피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퇴임한 공직자가 관련 기관이나 기업 등에 재취업해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소위 '관피아'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린 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제관련 부처(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나 협회, 금융기관에서 퇴직한 관료가 관련 업계로 자리를 옮겨 활동하는 '모피아'와 '금피아'<sup>1)</sup>,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관료가 에너지 등 산하기관에 취업해 영향력 행사하는 '산피아'<sup>2)</sup>,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퇴직자가 해운조합 등에 취업해 해운 관련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해피아'<sup>3)</sup>, 한수원 퇴직 임원이 원전 관련 부품업체에 들어가서 시험성적 위조 등의 비리를 저지른 '원피아'<sup>4)</sup>, 철도

---

1) 실제로 4월 말 기준 총 74명(모피아 출신 39명, 금피아 출신 35명)이 금융지주·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총 37개 금융사와 10개 유관 기관 및 협회에 임원급으로 있음이 확인되었다.

2)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실물경제를 관장하는 곳으로 전 부처 중 산하 기관이 가장 많은데 이곳에 산업부 관료 출신들이 관례처럼 기관장을 맡아 왔다. 이들은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등을 역임한 후 민간 업계로 자리를 옮겨 공무원 퇴직 후 최소 6~7년간 일자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선박의 안전을 담당하는 한국선급과 해운조합은 물론 해수부 산하기관 14곳 중 11곳에 해수부 출신 관료들이 기관장을 맡고 있다.

4) 지난해 5월 정부가 가동을 멈춘 원전 3기와 건설 중인 원전 5기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010건의 시험성

공사, 철도시설공단 출신이 민간기업 공사의 발주와 납품, 성능점검 관련 비리에 관여하는 ‘철피아’, 군 장성과 방위사업청 임원이 퇴직 후 방위사업체에서 계약 선정 과정에 영향력 행사하는 ‘군피아’,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퇴직자가 관련 협회 등에 재취업해 편의를 제공하는 ‘소피아’, 국세청, 관세청 등의 퇴직 공무원이 기업과 로펌 등에 자리를 옮겨 세무 관련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세피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먹거리와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관련 업계에 재취업하는 ‘식품피아’<sup>5)</sup>, 국토교통부 등 개발정책을 관장하고 각종 인허가 관련 일을 하던 관료들이 주택, 건설, 토지개발 등 관련 업계로 자리를 옮겨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피아’, 교육부 출신 관료가 대학 등에 자리를 잡는 ‘교피아’<sup>6)</sup>, 38조 원 규모의 정부 물품 구매를 담당하는 조달청 관료들이 퇴직 후 정부 납품을 중개하는 곳에 재취업해 물품 공급업자로 변신하는 ‘조피아’<sup>7)</sup>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 외에도 법조계와 검찰 출신이 자리를 차지한 ‘법피아’<sup>8)</sup>, ‘검피아’ 등 관료와 마피아를 합성한 신조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위 ‘관료 공화국’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관피아’들은 국민 생명과 안전, 살림살이에 직결되는 각종 영역에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비리의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 유능한 인재들을 관료로 뽑아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은 전문성을 살려 공평무사하게 맡은 역할을 해내리라는 기대 때문인데,

---

적 조작 등이 있었으며, 현재 가동 중인 20기 원전에서도 277건의 서류 조작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2월 말 현재 원전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은 200명에 이르며, 이 중 상당수가 전·현직 한수원 직원으로 드러났다.

- 5) 지난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퇴직자 10명 중 9명이 식품·의약품 관련 검사기관 또는 협회 등 이익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 6) ‘최근 4년(2010년 1월~2014년 1월)간 교육부 4급 이상 퇴직 고위관료 40명 중 28명이 대학 총장, 교수, 대학 부속시설 등으로 재취업했으며, 나머지 12명도 대부분 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한국연구재단 등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 7) 최근 5년간 조달청 퇴직 4급 이상 고위관료 91명의 31%인 28명이 관련 분야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8) 대법원에서 퇴직 후 재취업한 로펌에서 전관예우로 월 3억 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총리 후보에서 사퇴한 안대희 씨의 경우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큰 불행이다. 관료의 이익집단화는 사회적 자원의 흐름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견제받지 않는 권력 집단으로서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관료 집단은 한편에서는 인허가권 등을 앞세운 제도적 권력을 휘두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성을 방패막이로 삼는데, 이들을 4, 5년의 선출직 정치인들이 통제,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관료 사회의 이익집단화는 특히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자신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책임 전가와 은폐, 복지부동 등으로 변화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어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유용했던 관료적 합리성은 지금처럼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높은 상황에서 목표와 경로 자체를 새롭게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명령, 통제, 관리 중심으로 작동해 온 관료 조직은 사회적 소통과 공감, 치유 능력이 근본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술 관료적 합리성에 따른 사회 시스템 자체가 위험사회의 등장과 결코 무관치 않은 상황에서 관료 사회, 관료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sup>9)</sup>

## ‘국가개조론’을 둘러싼 논란과 전환의 과제들

세월호와 같은 끔찍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낡은 관행들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관행의 고착화는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sup>10)</sup>을 통해 그 영향력을 키워서 시대적 변화와 요

---

9) 이 점에서 사회학자 노명우는 위험을 생산하는 근대적 과학보다 위험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는 관료제가 더 무섭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노명우, 『세상물정의 사회학』, 사계절, 2013, 98쪽.).

10) 일정한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의존해 가면 도중에 그 경로가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알아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성을 말하는 것으로, 스탠퍼드대 폴 데이비드와 브라이언 아서 교수가 주창한 개념이다.

구를 가로막게 되고, 결국에는 그 피해가 스스로를 구제할 자원과 역량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치러진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관피아’ 척결을 내세워 ‘국가개조’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sup>11)</sup> 박근혜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적폐<sup>積弊</sup><sup>12)</sup>들을 바로잡아 안전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을 강조하였고, 이후 국가개조라는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내각의 구성을 바꾸고, 여당은 국회에 소위 ‘범국민적 국가개조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가개조를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가개조에 담긴 의미와 배경, 개조의 범주와 내용, 추진 방식과 과정 등에서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국가개조’라는 다소 생소한 말이 담고 있는 의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조<sup>改造</sup>의 사전적 의미는 ‘사고방식이나 시설, 조직 등을 고쳐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개조란 나라 전체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위험 사회에서 국가 시스템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드러난 만큼 국가개조는 피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개조의 의미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의 충분한 공감과 합의, 자발적 참여의 과정이 없는 국가개조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시 말해 국가개조라는 거대 프로젝트가 통치자의 위기관리나 통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

---

11)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전국 18개 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소위 관피아 척결에 나설 예정이다.

12) 사전적으로 ‘오랫동안 쌓여서 뿌리 깊은 폐단’을 뜻한다.

니라 그 후유증과 부작용 또한 상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20세기 초반에 국가개조 운동을 펼쳤던 독일과 일본의 우익이 결국 파시즘을 만들어 세계대전을 일으킨 바 있었고, 우리의 경우에도 박정희 정권 시절 인간개조와 국민개혁을 앞세운 국가재건 혁명이 결국 독재체제 강화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김영삼 정부의 ‘신한국 건설’이나 김대중 정부의 ‘제2의 건국’처럼 정권 차원에서 하향식으로 추진된 거대 프로젝트들이 결국 사회경제적 자원만 낭비한 채 별 성과 없이 끝났던 경험도 가지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정부가 내놓는 국가개조론이 세월호 참사라는 재난적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대책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입을 통해 갑자기 나온 것처럼 보이니 그 배경과 의도를 놓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개조론이 시대적 변화의 필요성을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치 논리와 방식 자체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관련해서 현 정부는 국가개조의 필요성으로 “그동안 쌓여온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상과 비정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판단의 획일적 잣대를 하향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억압과 배제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자칫 ‘비정상의 정상화’ 논리를 자기 방어와 상대에 대한 비판의 수단으로 적용하게 되면 민주주의 자체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근대적 정상성 자체의 균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제대로 읽어낼 수 없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 한편에서는 규제를 강화해 국가의 개입 영역을 확장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국가의 역할을 시장 자원의 영역으로 넘기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국민행복’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소위

‘4대약’<sup>13)</sup> 체결을 강조했는데, 주로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에 의존해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오다 보니 결과적으로 사회적 통제 기능이 강화된 ‘치안사회(police society)’의 모습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들어서는 규제를 ‘암 덩어리’로 보고 이것을 완화하고 철폐하는 것을 정부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로 하여금 기존의 전체 규제에서 10-20%를 완화하라는 규제완화 총량까지 제시함으로써 규제완화 조치를 경쟁적으로 내놓도록 하였다. 문제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서 보듯이 국가 권력기관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영역까지 규제완화라는 논리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시장 자율의 영역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점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는 안전 관리의 역할과 책임을 외부화, 민간화, 시장화 시킨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패러다임의 전환 차원에서 국가개조는 어떻게 인식되고 다루어져야 하는가?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정부조직의 개조(remake)나 재생(renewal)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을 원점에서 새롭게 구성하고 작동시키고자 하는(reset 또는 reboot) 자세와 노력이다.

따라서 ‘낡은 것’으로 지목된 것들을 일거에 철폐, 해소시키려는 ‘청산주의’적 태도는 자칫하면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방향 감각까지 상실케 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이런 식의 접근은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대상화, 외부화 시킴으로써 자신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소홀히 하도록 만들며, 개조를 둘러싼 이념 공방과 갈등을 촉발시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절박한 전환의 기회마저 놓쳐버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개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운영의 책임 주체들부

---

13) 박근혜 정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체결되어야 할 4대약으로 정했다.

터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이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신을 개혁, 개조해 낸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국가 운영의 책임 주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한을 활용해서 국가개조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조직의 개혁을 통한 국가개조의 차원을 넘어서 시민사회 민간 영역들이 함께 하는 ‘새로운 나라 만들기’가 필요하다. 소위 ‘거버넌스<sup>governance</sup>’ 시대를 맞아서 정부는 물론 사회 각 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새로운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로 참여해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나누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영역들을 아래로부터 다양하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국가개조를 넘어 ‘새로운 나라’ 만들기

위기 상황에 대한 강조는 현실에 대한 무감각을 일깨우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으로는 창조적인 대안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국가개조를 넘어 새로운 나라 만들기에 대한 ‘비전’과 ‘전망’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는 국가개조론은 낡은 것에 대한 청산의 차원에 머물러 있어 ‘새로움’에 대한 사회적 열망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생명 위기 시대를 넘어서 어떤 사회로 함께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이러한 접근이 갖는 중요성은 우리의 지난 역사적 경험을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사실 지난 세기부터 우리 사회가 걸어온 근대화 과정은 자율적이고 자생적이기보다는 타율적이고 이식된 측면이 컸다. 따라서 그동안 의존해 온 국가 주도의 선진국 따라잡기식 외부 의존형 성장모델은 우리의 토양과 문화에 맞는 합의된 발전 모델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

들어냈다. 상황이 이리하다 보니 세계적 경제 위기와 생태 위기 속에서 사회 전체의 발전 방향에 대한 좌표는 상실한 채 이익갈등과 가치갈등으로 피로감만 커져가고 있다. 마치 어두운 밤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맞고 있지만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는 선박과 같은 모습이다.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새로운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 단절성, 폐쇄성, 획일성의 논리가 생명 위기 현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생명살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탄력성, 관계성, 순환성, 다양성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갑작스런 변화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경제, 사회, 문화, 생태적 완충 지대(buffer zone)를 곳곳에 만들어 내고, 여기서 창조적 역동성이 넘치는 대안적 모델들이 나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복탄력성(resilience)’<sup>14)</sup>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복탄력성은 근래에 들어 개인과 조직, 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새삼 주목받고 있는데, 위기적 상황이 만들어낸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신속하게 정상 상태로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들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회복탄력성을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내는 긍정의 힘’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회복탄력성은 단순히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창조적 도약’의 의미도 담고 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회는 위기 상황이 만들어낸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여기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 보다 높은

---

14) 회복탄력성은 1970년대 생태학 분야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외부의 충격과 교란을 흡수하고 생태계 질서를 회복하고 지속하는 힘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이후 이 개념은 교육학, 심리학, 물리학, 의학, 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차원으로 도약하고 이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런 능력은 당면한 시련과 도전을 자기 혁신과 발전의 계기로 삼는 지속적인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질 것이다. 사회적으로 보면 스스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자기 이해와 자기 조절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며, 상호 관계성과 상호 의존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경계를 넘어선 소통과 공감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지금 우리 사회에 새롭게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과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지역 자립과 순환의 다양한 실천 모델들을 통해서 협동과 연대의 그물망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회복탄력성에 기반한 새로운 나라 만들기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 할 것이다.●

## 흔들리는 유기농업의 정체성 - 그 원인과 대책

“농약은 과학이다”라는 문구에 이어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친환경적”이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한켠에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과 유기농산물 판매장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전성이 의심되는 이른바 ‘짜퉁’의 등장으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문제까지 나오고 있고, 농약이나 비료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면서 농산물을 재배한다는 취지의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적정농업규범) 농산물이 우수농산물로 잘못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저농약)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 모든 부분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 건국대 교수, 경제학

## 왜 친환경 유기농업인가?

유기농업은 ‘산업적 농업(industrial agriculture)’의 대안으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산업적 농업’보다 훨씬 앞서서 존재했던 ‘유기농업’이 다시 ‘산업적 농업’의 대안으로 거론된 이유는 ‘산업적 농업’이 가져온 폐해의 심각성에 기인한다. ‘산업적 농업’이란 한마디로 농자재에서부터 생산, 유통 과정이 자본의 지배하에 종속된 농업이다. 자본이란 기본적으로 ‘관계의 분절’을 통해 자신의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가치를 증식하는 운동체라 할 수 있다. 산업적 농업은 농사의 시작이면서 끝이었던 종자까지도 자신의 영역으로 가져갔고, 물적 순환 과정을 통해 조달되었던 퇴비도 화학업체에서 생산한 비료로 대체되었다. 이른바 녹색혁명의 산물인 다수확 품종을 재배하기 위해 농약회사가 제공하는 살충제와 제초제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되었다. 농사가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종자뿐 아니라 농약, 비료, 기계 등 많은 농자재를 외부 자원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버렸다.

또한 외부 자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품종 소량생산은 소품종 대량생산으로 바뀌어야만 했다. 다품종 소량생산은 지역 내 자급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지만, 대규모 단일경작은 지역의 시장을 지향한 것이 아니었기에 유통자본의 개입이 없이는 판로 확보도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과거에 농민 생산의 연장에서 이루어졌던 농산물 가공도 가공자본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처럼 자본이 “종자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을 장악하게 되면서 농민들조차 먹거리 구매자가 되어 어디에서 어떻게 원료가 만들어지고 가공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경제 금융화가 지구온난화, 에너지 위기와 결합되면서 농업 생산과 관련된 권력의 집중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적 규모로 일어나는 자본의 농업 지배 강화는 생태적 문제를 야기하고, 대규모 단작을 중심으로 하는 공장식 영농으로 인해 농약의 남용을 가져오며,

농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협동체를 위협하고, 작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농촌사회의 불평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의심되는 먹거리가 국내 시장을 석권하고, 잔류 농약이나 식품첨가물로 오염된 먹거리가 대량으로 유통되게 함으로써 먹거리 불안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적 농업'은 환경적으로 균형 잡힌 영농체계를 무너뜨리고,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다량 투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농촌 생태 자체가 황폐화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식탁의 안전도 훼손시킨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자연과 맺어온 공동체적 관계는 근대 이후 점차 해체되었으며, 그 자리를 자본제 상품관계가 대신함으로써 인간은 스스로를 소외시키면서 지속가능성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적 관계는 단절되고 왜곡되어 갔다. 유기농업운동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기의존(self-reliance) 구조를 복원하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적 농업'은 자본집약적 농업, 대규모성, 고도의 기계화, 단작 영농,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화학비료·농약·살충제의 광범한 사용, 집약 축산 등을 특징으로 하는 농업인 데 반해, 대안농업으로서의 유기농업은 지역성과 소규모성, 합성물질 투입재의 사용 회피, 지역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위주로 하는 농업이라 할 수 있다.

〈표 1〉 '산업적 농업'과 대안농업(유기농업)의 패러다임<sup>1)</sup>

산업적 농업 패러다임	유기농업 패러다임
집중(concentration) 국가적·세계적 생산, 가공, 유통 인구의 집중, 농민의 축소 토지, 자원, 자본에 대한 집중관리	분산(decentralization) 더 지역적인 생산, 가공, 유통 인구의 분산 토지, 자원, 자본에 대한 분산적 관리

1) Beus and Dunlap, 1990.

<p><b>의존(Dependence)</b>          대규모 자본집약적 생산과 기술          에너지, 투입재, 신용에 대한 과도한 외부의존          시장에 대한 의존          과학, 특허, 전문가에 대한 강조</p>	<p><b>독립(Independence)</b>          규모가 적은 저투입 자본을 통한 생산          에너지, 투입재, 신용 등의 외부자본 의존 축소          자급적인 지역사회          개인들의 지혜, 숙련, 지혜에 대한 존중</p>
<p><b>경쟁(competition)</b>          협동의 결여          농장, 농촌의 전통에 대한 무시          소규모농촌사회에 대한 경시          노동투입의 최소화          영농은 단지 사업          속도, 양, 이윤에 대한 강조</p>	<p><b>공유(community)</b>          협동의 강화          농장, 농촌의 전통에 대한 보존          소규모 농촌사회는 농업에 기본적 요소          노동투입의 가치 인정          영농은 사업이면서 생활양식          영속, 질, 아름다움에 대한 강조</p>
<p><b>자연에 대한 지배(domination of nature)</b>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분리, 인간의 지배          자연은 사용할 자원으로 구성          자원의 순환에 대한 무시          인간이 만든 체계는 자연에 부담          농화학제품에 의한 생산유지          고도로 가공된 먹거리</p>	<p><b>자연과의 조화(harmony with nature)</b>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          자연은 그 자체로서 값어치를 가짐          순환의 완결성을 강조          자연생태계를 중시          건강한 토양에 의한 생산유지          가공을 최소화한 먹거리</p>
<p><b>전문화(specialization)</b>          협소한 유전적 기초          단작 및 연작 중심          경축의 분리          표준화된 생산체계          고도로 특화된 과학기술</p>	<p><b>다양성(diversity)</b>          넓은 유전적 기초          다품종 및 혼작 중심          경축순환          지역에 기반한 생산체계          융합적 과학기술</p>
<p><b>착취(exploitation)</b>          외부비용의 무시          장기적 결과보다는 단기이윤 중심          재생불가능한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          과학과 기술에 대한 맹신          경제성장을 위한 고도소비          물질중심의 바쁜 생활</p>	<p><b>절제(restraint)</b>          모든 외부비용이 고려          단기적-장기적 결과 모두 중요          재생불가능한 자원에 대한 탈의존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제한적인 신뢰          미래세대를 위해 소비 절제          비물질적인 단순한 생활</p>

유기농업은 물, 흙, 공기 등 무생물의 자연과 동식물, 그리고 인간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성이라 하는 합리적 관리의 생산방식과 과정을 통해 환경과 자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한 품질의 최종생산물을 인간에게 공급하고자 한다. 아울러 유기농업은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

면서 자원의 순환고리를 유지하는 것을 지향하는 농업이므로 유기농업의 (상대적) 환경친화성은 '산업적 농업'과 구별되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업적 농업'은 대체로 대규모 농지에서 대형 농기계와 기술집약적 시설 등 고정자산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농산물을 생산, 가공, 공급하는 포디즘적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중시하는 데 비해 유기농업은 다품목을 생산, 공급하기 때문에 다각화에 기반을 둔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추구한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은 지역 여건에 따라 경종농업과 원예, 축산이 각각 조사료와 천연 유기질 비료 등과 같은 물질을 매개로 하는 연계를 지향하며, 이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물질 공급과 외부로의 부산물 배출을 최소화하여 지역 내 순환을 도모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한국 친환경 유기농업의 성장과 위기

한국의 유기농업운동은 1970년대 중반부터 정농회와 가톨릭농민회 등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다. 최초의 유기농업 생산자단체라 할 수 있는 정농회가 1976년에 설립된 데 이어 1978년에 한국유기농업협회가 설립되었고, 1980년대 초반에는 가톨릭농민회를 중심으로 '농'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서 농업과 농촌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는 움직임이 태동했다.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은 소비자의 요구나 특화된 생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도가 아닌, 농업의 의미를 새롭게 보고 농업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는 농민들의 작은 모임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녹색혁명의 폐해를 몸소 체험하고 자주적으로 유기농업을 실천해온 생산자들은 유기농업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는 교육을 통해 유기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전개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살림과 가톨릭농민회의 생명공동체운동 등을 시

발로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은 유기농업 확산에 큰 힘이 되었다.<sup>2)</sup> 생협을 통한 직거래사업은 정농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자연농업협회 등 유기농업 생산자단체 회원을 비롯해 농민운동에서 시작된 한살림, 여성운동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생협, 노동운동에서 지역운동으로 전환한 활동가들이 주도한 지역생협 등 다양한 운동 주체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1994년 11월에는 유기농업생산자 단체와 소비자단체가 모여 ‘환경보전형농업 생산소비단체협의회’를 구성했으며, 1998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 이후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이 늘어나고 2002년 지자체선거를 기점으로 지자체별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이 본격 도입되면서 친환경농업이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문제는 정부가 친환경 농업육성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기농 투입재인 토양개량제와 작물보호제 등 외부의 대체유기농자재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고착되었다는 사실이다. 인증 자체에 치중하다보니 정부의 <목록공시>에 등록된 고가의 자재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더욱이 정부가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적 농업’에 적용되는 생산력주의와 경쟁력주의에 입각해 양적 지표의 성장에만 몰두했고,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도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집중되었다.<sup>3)</sup> 농업생산의 물적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유기적 시스템’ 구축이라는 과정에 대한 고민보다는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결과만이 중시되는 전혀 유기적이지 못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인증에 중심을 두고, 농자재 지원에 예산이 집중되는 속에서 유기농업이 ‘유기적인 농업’이 아닌 ‘유기질을 활용한 농업’으로 정착되어 버린 것이다.<sup>4)</sup>

---

2) 모심과살림연구소, 2006.

3) 2014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기금의 62%가 친환경농자재지원에 배정되어 있다.

4) Codex에서는 유기농업을 “농장의 모든 구성요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농업생태계 보호, 종의 다양성, 생물 순환과 토양생물활동 증진과 같은 각 요소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역 내에서의 총체적 생산관리 체계”로 정의하고 있으며, IFOAM에서는 생태·건강·배려·공정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던 친환경농산물의 재배 면적은 최근 들어 정체 내지는 감소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전체 재배 면적은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년대비 14%나 감소했다. 특히 저농약 재배 면적은 2008년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 13년간 연평균 28%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최근 3년간은 연평균 36%씩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에는 전년대비 40%나 감소했다. 무농약 재배 면적은 지난 13년 동안 연평균 44%씩 증가했지만, 2012년을 정점으로 이듬해에는 3% 감소했다. 유기 재배 면적도 지난 13년 동안 연평균 39%씩 증가했지만, 2013년에는 전년대비 17% 감소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친환경농산물 재배 면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농약 인증 폐지에 따른 농가의 대응이 무농약이나 유기 재배보다는 GAP나 관행 재배로의 전환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친환경농산물에서 30% 가까이 차지하는 데다 저농약 비율이 79%나 되는 과실류의 경우 무농약 이상의 재배가 어렵기 때문에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전환할 농가는 그다지 많지 않다.<sup>5)</sup>

한편, 최근에는 친환경농산물의 양적 성장과 규모 확대에 따른 새로운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초창기와는 달리 유기농업이 농민들의 자각과 각성보다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과 함께 새로운 소득 모형으로 자리 잡으면서 본래의 운동성도 희박해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유기농업이 기존의 관행농법을 대체한다는 좁은 개념을 넘어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환경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살리는 농업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는 측면이 보다 깊게 고려되어야 할 시점이다. 더욱이 현재 친환경농산물 유통구조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형태

---

5) 저농약 과실류 생산농가 중에서 무농약 또는 유기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농가의 비율은 17%에 그쳤는데, 이는 곡류의 59%, 채소류의 38%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는 점차 줄어들고 백화점이나 전문유기농 매장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상품화의 논리가 너무 깊숙이 침투되고 있다. 과거에는 상당 부분 생협이나 직거래 등을 통해서 유통되었으나 최근 들어 대형유통업체나 일반소매점 등을 통한 유통 비중이 이를 능가하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 신유통연구원의 조사결과(2012년 기준)에 따르면 생협과 직거래의 비중은 34.5%인 데 반해, 대형유통업체 27.7%, 친환경전문점 6.9%, 일반소매점이 5.9%에 달하고 있다. 일반 관행 유통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개입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안농업으로서의 유기농업이 관행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생태와 대안성에서 시작된 친환경 유기농업이 농업 위기에 대한 농가의 생존전략 차원으로만 축소되어 인식되는 현실도 존재하고 있다. 망가진 땅과 사람의 관계를 되살리는 ‘과정을 조직하는’ 운동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수익만을 쫓는 생산자와 먹거리의 안전만을 찾는 소비자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면서 유기농업이 본래 갖고 있는 생태적 의미나 사회운동으로서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sup>6)</sup> 또한 ‘유기농업의 세계화’ 경향과 맞물려서 유기농산물의 수입물량도 급증하고 있다.<sup>7)</sup>

녹색혁명에 기반을 둔 ‘산업적 농업’의 대안으로 모색된 친환경 유기농업이 과연 그 기본 원칙과 가치, 이념에 따라 발전하여 왔는지, 미래농업으로서의 가능성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적 논의가 필요하다.

---

6) 이병철, 2000 및 윤병선, 2010.

7) 한국의 유기농식품(유기농산물 포함)의 전체수입량 2만 5,551톤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9%에 이르고, 전체 수입액(5,986만 달러)의 28.2%를 차지하고 있다. 유기농산물의 경우 사료작물의 수입량이 91.9%에 이르고, 한국이 유기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 친환경 유기농업의 관행화

유기농업에 있어서 ‘관행화’라는 표현은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유기채소 산업에 자본이 침투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벡크(Buck, Daniel) 등이 처음 사용했다. 농업 관련 자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유기농업의 특성을 다시 만들어 내는 방법”에 성공하면서 유기농업운동의 본래 정신인 생태적 혹은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고 위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유기농업의 관행화는 획일적인 유기농산물 기준이 제정되면서 급격히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농업 관련 기업은 획일적 기준에 맞춘 표준화된 생산을 통해 높은 가격의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유기농업도 ‘산업적 농업’과 똑같이 외부 투입재에 의존하게 되었다.

유기농업의 관행화는 ‘산업적 농업’의 특징이 유기농업의 각 부문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구체적인 징표로는 대규모 기업농 혹은 중간상인이 성장하면서 생산과 유통이 이들에게 집중되는 경향, 외부에서 생산된 공장식·에너지집약적 투입재의 대량투입, 직거래와 같은 비시장적 방식에 의한 마케팅(non-market marketing)보다는 대중 지향형 마케팅에 의존하는 경향, 유기농업의 전통적 가치나 이념보다는 자본주의적 이윤지향형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유기농가가 규모화된 농가로 대체(퇴출)되거나, 유기농업의 주체가 가족농에서 기업농으로 대체되고, 생산자-소비자 간의 직접적 관계가 시장을 통한 단절된 관계로 대체되고, 다품목 생산이 단작으로 대체되는 것도 관행화의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즉, 농기업의 지배하에 있는 유기농업은 ‘산업적 농업’에 사용되는 투입재와 종류만 다른 시스템에 불과하게 되었고, ‘유기농’이라는 라벨도 여전히 에너지 집약적이고 대규모 단작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전혀 유기적이지 않으면서 이를 이윤 추구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의 기회주의적 녹색화’가 진행되었다.

‘산업적 농업’과 유기농업은 단순히 영농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

지 않는다. 유기농업은 ‘산업적 농업’을 지탱하는 사회·경제체제와 물질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대응하는 “특별한 사회구조 및 특별한 도덕적·인지적 신념들”을 포함한다.<sup>8)</sup> 그러므로 대안적 농식품체계는 단순히 농산물체계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대안 사회를 추구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유기농업이 대안적 농업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 기술, 자연과 인간, 도시와 농촌, 생산과 소비의 유기적 결합을 매개로 하는 사회 체계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유기농업운동은 지역별 환경요인을 고려해 생산 규모를 조정하고, 자연순환 농법과 저투입 농법을 확산시키면서, 사회경제적·정책적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는 시스템으로 농촌 구조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로의 회복과 농촌 지역의 인간권리 회복까지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유기농업은 사회적 형평과 분배정의에도 부합하는 영농 형태라 할 수 있는데, 중소규모 가족농은 대기업농과 경쟁할 때 어쩔 수 없이 생산비와 마케팅 비용의 효율성에서 열세에 있지만, 한편으로 중소규모 유기농가도 중간수집상, 대형 가공업자, 도소매업자 등의 유통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확보함으로써 부가가치의 외부 누출을 막고 품질과 식품안전성, 가격, 시장안정성의 측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기농 생산농가의 조직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 강화, 그리고 농가가 속한 공동체 사회의 조직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성(locality)의 해체를 막고 반대로 이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엔이 2014년을 ‘세계가족농업의 해’(2014 International Year of Family Farming)’로 정한 것은 친환경 유기농업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

8) 허장, 2007.

현대의 먹거리 문제 해결에 있어 소규모 가족농업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아 인구 문제를 대규모 투자에 기반을 둔 농업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아울러 소규모 가족농업은 스스로가 가진 자원을 집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인식도 함께 있다. 실제로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해외농업개발투자는 농지 수탈의 또 다른 이름이었고, 농지 매입을 수반하는 투자는 지역사회를 송두리째 파괴해 버렸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농업개발은 지역민들의 악화된 식량 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착한 개발이 아니라 수출용 농작물이나 에탄올과 같은 농산연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투자 대상지의 식량 확보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대규모 집약농업은 땅이나, 물, 생물 다양성 등 자연자원을 크게 훼손하였다. 전 세계에서 소규모 명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는 적어도 2억5천만 명이고, 경작 가능한 농지의 10%를 이용해 전 세계 식량생산량의 20%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경영은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고용흡수력이 높고, 여성이나 고령자처럼 취업 기회를 얻기 어려운 계층에게는 중요한 취업처이기도 하다. 나아가 소규모 경영은 농산가공이나 농민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고용창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욱이 '산업적 농업', 기업 주도의 대규모 농업이 토지와 물,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자원약탈형 농업이라면, 소규모 경영에 바탕을 두는 가족농업은 훼손된 농과 食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복원하는 생명의 농업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살림의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유기농업이라 해도 땅과 인간, 농촌과 도시, 농과 식이 함께하는 순환 체계는 대규모 기업농에 의해서는 달성할 수 없다. '산업화된 유기농업'은

더 이상 순환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살림의 농업’이 아니라 ‘죽임의 농업’이다. 더욱이 ‘산업화된 유기농업’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화된 유기농업’으로 나아간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협상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4년 1월부터 한국에서 유기식품 인증 기준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이 동등성 협정을 요구함에 따라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내에서 생산한 유기농산물의 사회적 비용은 ‘관행농산물’의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낮지만 해외에서 수입된 유기농산물의 사회적 비용은 ‘관행농산물’의 사회적 비용이 훨씬 높다. 이는 농자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순환체계에서 소비 부분이 전혀 순환적이지 않은 세계화된 유기농산물이 자유무역의 틀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유기농이라는 인증 라벨보다는 농민의 ‘얼굴’을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인증 기준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가 등 3자 인증이 가져온 유기농업의 정체성 훼손,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순환의 농식품체계의 훼손, 이 과정에서 유기농자재 생산에 대한 거대자본의 진출, 수입산 유기질 제재로 만든 유기농자재시장의 확대 등 일련의 과정들이 ‘산업적 유기농’이 유기농업을 지배하는 상황을 초래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친환경 유기농업의 수호

생산 농민들 또한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유기농업답지 않은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유기농업을 실천하면서 자원의 내부순환이 강화되었는지, 경종과 축산의 결합을 통해 자재의 외부

의존 정도가 감소되었는지, 지역 내 공동체성은 강화되었는지, 소비자와의 직거래가 증가했고 이를 통해 도시민(소비자)과의 교류 활동이 증가했는지 등을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sup>9)</sup>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혹은 일부 달성했다손 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또한 인증 중심의 친환경 유기농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증제도에 있어서도 국가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참여자인증시스템(PGS)이나 자주인증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sup>10)</sup> 생산자 스스로 생산을 자주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자주적인 점검을 생산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참여자인증시스템은 저농약 인증제의 신규 중단 및 전면 폐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지역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그 속에서 농업종사자들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소비자의 식탁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자는 공생과 생명의 유기농업운동이 그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생산농민들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참여자인증시스템이나 자주인증시스템의 도입은 소비자를 단순히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생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유기만을 인증제로 하고 있는 가공식품 표시제도도 개선이 요구된다. 국내 친환경가공식품 중 무농약과 저농약 가공식품이 8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는 오히려 유기가공식품의 수입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동안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을 펼쳐온 정부로서도 현재의 정책기조가 과연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걸맞는 것이었는지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자재 중심, 인증 중심, 결과 중심의 육성 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3년 가을에 발표한 <농업·농

---

9) 윤병선, 2013.

10) 조완형, 2014.

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개별경영체의 육성’이라는 기존의 농정패러다임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역공동체의 육성’이라는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업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기적’인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바탕을 둔 유기농업이어야 하고, 지역공동체 내의 관계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유기적 관계의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농자재 중심 지원 정책에서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순환적인 관계를 복원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른바 지역 단위의 가족농들이 결합한 협동조합을 통해 경축순환을 촉진하는 지원 정책, 가족농들의 공동 작업을 촉진하고 더 많은 농민이 여기에 결합토록 하는 지원 정책,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를 매개로 소비자와의 직간접적인 교류와 접촉을 촉진하는 지원 정책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순환경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가공 부문에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보다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최근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이 급증한 것은 공적 영역에서의 정책적 결정사항이 농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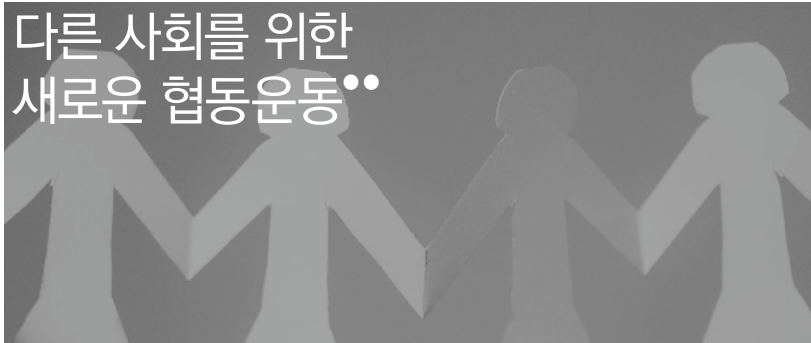
아울러 ‘농약’과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농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 친환경농업 예산이 2010년 5,518억 원에서 2014년 3,619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마당에 GAP농산물을 2017년까지 30%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선정되면서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각종 지원 정책이 GAP육성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농약이나 제초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라 하더라도, 이것이 그동안 진행되어 온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으로부터의 후퇴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친환경 영농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에서 벌어진 인증

부실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 친환경농업을 폄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인증제일주의, 결과제일주의, 효율제일주의가 초래한 해악에 대한 준엄한 반성이다.●

## 참 고 문 헌

---

- 농식품신유통연구원. 2013.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실태 조사』.
- 모심과살림연구소. 2006. 『스무살 한살림 세상을 꺼안다』. 그물코.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 윤병선. 2010. “대안농업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농촌사회』 20(1).
- 윤병선. 2013. “유기농업의 관행화”. 『유기농(운동)의 정체성을 찾아서』. 모심과살림연구소.
- 이병철. 2000. “생태적 가치와 자립적 삶을 위해 토착민으로 살기”. 『환경과 생명』 25.
- 조완형. 2014. “친환경농식품의 소비·유통현황과 확대 전략”.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정체성 확립과 기반확대』. 한국유기농업학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
- 허 장. 2007. “유기농업의 ‘관행농업화’와 위기에 관한 논의”. 『농촌경제』 30(1).
- Buck, D., Getz, C., & Guthman, J.. 1997. “From farm to table: The organic vegetable commodity chain of northern California”. Sociologia Ruralis (37).
- Beus, Curtis E. & Dunlap, R. E.. 1990. “Conventional versus Alternative Agriculture: The Paradigmatic Roots of the Debate”. Rural Sociology 55(4).
-



## 근대적 협동운동의 의미와 과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는 협동의 산물이다. 협동은 지구상 인류의 출현과 그 진화 과정,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인류의 곁을 떠난 적 없이 유전정보에 자신을 새겨왔다. 그런데 이것이 의식적인 ‘운동’이 되고 다시 ‘근대적’이 된 것은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면서였다. 인간의 공동생활집단으로서의 사회가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스스로 자기조정한다는 신화 속에 탄생한 시장경제시스템에 의해 사회양극화, 사회적 차별과 배제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자 사람들과 그들의 사회는 협동운동을 통해 자기를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근대’의 의미가 좁은 의미에서 ‘개인주의에 기반한 산업문명’, ‘성장발전주의에 기반한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의 물질문명’, ‘돈이 지배하는 자

-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 이 글은 2013년 3월 필자가 대표로 초안한 다른경제포럼의 팸플릿 「다른세상, 다른경제」와 2011년 역시 필자가 초안한 품앗이생협의 설립제안서에 많은 부분을 옮겨왔다. 함께 토론한 많은 동료들의 생각에 빚지고 있다.

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고 전제할 때, 근대적 협동운동을 극복하고 새로운 협동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초는 역설적이게도 근대적 협동운동의 맹아로부터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사회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1830년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프랑스의 경제학자 샤를 뒤느와이에였다. 사회적경제는 국가 단위에서 돈을 기준으로 한 부의 창출을 경제발전으로 여기는 정치경제학에 이의를 제기하며 인간과 그의 노동, 사회를 중요시하는 사회적경제를 주창하였는데, 그들은 당시의 사회를 '임금노동사회'라고 규정지었다. 농민들은 생존의 토대였던 토지로부터 쫓겨나 도시를 전전하는 부랑 노동자가 되었다. 온 가족이 자기 노동력을 팔아 임금을 받아야 겨우 생존이 가능한 소외된 노동을 하며 생존에 허덕이는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것이다. 5~6세의 아이들이 먼직산업에 동원되어 학대를 받아가며 일하다 죽어갔고, 탄광에서 하루 19시간, 주 6일을 일해야 하는 소년들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출발한 근대적 협동운동의 시작은 17세기 후반 영국의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생활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우애조합이라는 노동자 공제조합을 들 수 있으나, 본격적인 근대적 협동운동은 로버트 오언의 협동촌 실험과 윌리엄 킹의 월간지 『협동조합인』의 영향을 받아 1844년 영국 랭커셔 주의 작은 마을 로치데일에서, 28명의 노동자들이 28파운드의 출자금으로 시작한 로치데일 공정개척자조합이다.

로치데일 공정개척자조합으로 출발한 근대적 협동운동은 또한 근대와 함께 시작된 탈근대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로치데일은 근대적 협동운동의 출발이지만 21세기 새로운 협동운동에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김기섭에 따르면 로치데일 공정개척자조합의 의미는, 첫째 상호자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 둘째 소비의 조직화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셋째 조직된 소비의 힘으로 생산을 변화시킨다는 것, 넷째 조직된 소비와 변화한 생산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러

한 네 가지 의미는 근대적 협동조합운동이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유산이다. 이러한 유산을 현실에서 구현해 온 몬드라곤 공동체의 창립자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 신부는 협동조합의 원칙으로 다음 세 가지를 힘주어 강조했다. 첫째, 특정 협동조합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자. 둘째, 공동체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자. 셋째,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경제 제도의 건설을 위해 도전하자. 위와 같은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방향은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의 저자 레이드로 박사에게 의해 협동조합의 사회적 목적으로 다시 강조된다. 첫째, 세계적 기아 해방, 둘째,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마련(노동자생산협동조합), 셋째, 보전자 사회(the Conserver Society)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넷째, 협동조합 지역사회 건설이 그것이다.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몬드라곤 공동체, 이탈리아의 트렌토와 볼로냐의 협동조합 연합체, 캐나다 퀘백의 데자르뎅 그룹, 일본 가나가와생활클럽 생협 등은 21세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폭력적 질서에 굴하지 않고 상호 부조와 우애의 원리에 따라 로치데일의 이상을 현실화하고 있다.

물론 로치데일 이후 모든 협동조합이 이러한 의미에 충실한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로 대표되는 영리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새로운 사회를 위한 결사체의 이상을 저버린 경우도 많았다. 현재 전 세계에 94개국 249개 조직에 140만 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합원 10억 명, 글로벌 탑 300의 총 매출은 1조6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양적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야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협동조합은 무엇을 해온 것일까? 로치데일 이래, 협동조합의 선구자들이 힘주어 강조한 새로운 사회 건설이라는 대안의 자기사명은 21세기 협동조합에 얼마나 살아있는가?

## 사회위기·생명위기 시대, 대안은 있는가?

자본주의 300년, 신자유주의 30년, 자본주의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만을 위한 세계화가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1:99 사회'라는 부의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위기가 극심해진 시대를 살고 있다. 한편, 이기적 개인주의를 발전 동력으로 한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기후변화,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라는 생명의 위기를 불러 왔다.

자본주의의 모순, 야만성과 폭력성, 지속불가능성은 그 체제가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모순을 사회에 고발하고 폭로하는 것으로 극복의 주체를 대중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노동운동, 시민운동을 대중적 기반으로 하여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결집해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전략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저항의 결집을 통한 정치혁명' 노선이다. 자본주의가 극복된 새로운 세상의 실질적 내용은 오로지 정치권력 획득 이후의 일로 유예한다. 그런 것이 아직도 존재한다면, 이른바 지금껏 우리가 실험한 '정통노선'이다.

이 노선은 새롭거나 낯선 것이 아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 노선을 채택했다. 그러나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고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는 자본주의 모순에 뒤지지 않는 모순을 드러낸 채 몰락했다. 깃발 아래 모였던 사람들은 떠났고 대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깃발 아래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새롭게 모이고 있다.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이 그 모델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력했던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을 틈타 거칠 것이 없어진 자본주의가 더 형편없어졌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삶의 고통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 새로운 협동운동의 방향

### 저항과 건설의 만남

자본주의 시장사회, 임금노동사회는 새로운 세상을 말하던 사람들과 조 직을 압도했고 그 저항 세력을 무력화시켜 왔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 본주의 극복을 말하지 않게 되거나, 말하더라도 자기의 생활, 그 살림살 이는 이미 자본주의 체제에 포섭되어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지지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서 혐오스런 자본주의에 이따금 치를 떨지만 어쩔 수 없다는宿命론과 패배감에 좌절하고 있다.

전 세계적 현상이었던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는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에서 방황하며 민과 민의 살림살이 공동체인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것에 저항해 온 노동운동, 시민운동은 자본이 주인 노릇하는 시장과 싸우고 국가와 싸우면서 정작 그 근원으로서 사회를 새롭게 건설 하지 못했다.

자본주의의 극복은 오로지 자본주의 속에서 그 대안의 영역을 건설하고 창조하는 것을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다. 가라타니 고진의 표현에 의하면 비록 자본주의 속에서 자라지만 자본주의를 숙주로 삼아 그것을 쓰러뜨 리는 이른바 대항의 대안세포가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극복의 주체 형성 에 있어 저항의 노동운동과 건설의 협동조합운동이 노동자 결사체운동 의 전통 위에서 다시 만나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운동, 시민운동이 대중조직운동의 비옥한 토양이 되고 이를 자양 분으로 새로운 정치변혁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운동의 새로운 지평은 오래된 미래로서 주체화, 민주화, 인간화, 자립과 자치의 토대는 바로 지역사회라고 생각한다. 땅에서 쓰러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난다.

### ‘다른 사람-참나’, 내 안의 자본주의 넘어

자본주의가 지배한 지 300년, 거짓 나, 이기적 개인주의 사상이 급속히

퍼졌다. 그것은 사회와 자연을 타자화하고 대상화하여 배타적 자기이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여긴다. 제국주의적 침략을 일삼으며 사람과 자연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경쟁의 논리로 정당화한다.

자본주의는 생명의 길, 사람의 길, 진리의 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그것의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종말이 세상과 인류의 종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그만큼 치명적인 모순과 문제를 발생시키고 키워왔다.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본주의는 먼저 내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지금 여기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나로부터 분리하고 대상화한 뒤 그 어둠과 싸우려는 것은 도깨비와 씨름하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300년 자본주의 역사가 아직 해치지 못한 전체적 생명으로서 참나의 자리를 자각하고 나부터 너를 모시고 살리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가능해진다.

남 탓, 세상 탓만 하게 되면 도리어 남과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자기다움을 잃고 자기소외, 자기 상실, 자기분열을 겪게 되고 자본주의의 극복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른 세상은 나와 내 삶에 가까운 것으로부터 동심원을 그리며 나아가야 한다. 나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되 나 혼자 극복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너를 만나 우리가 되어 함께 저항과 건설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

## ‘다른 경제 - 자립’, 다른 노동에서 시작하는 살림살이

“오래 전부터 인간은 다른 노동을 추구하고 그들의 활동에 인간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결사하였다. 사회적연대의 경제는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그곳은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땅이다.”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긴 행진)

다른 세상, 다른 경제는 다른 노동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여긴다. 임금노동 사회의 태동 이래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전통, 마르크스와 그의 사상을 따르던 사람들은 누구나 ‘노동의 해방’과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한국사회 역시 이러한 전통에 따라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본격적인 노동운동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때의 노동운동은 주로 노동조합운동으로 이해되어 왔다. 노동조합운동은 경제투쟁에 머물거나 자본-임노동관계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위한 수단에 머무르면서 자기다움을 실현하는 대안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적 노동을 만들어 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정규직 확보 등의 고용 보장, 노동조합활동 보장 등이 주요한 이슈였다. 현재의 노동 문제는 첫째,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 격차가 심해지는 것, 둘째, 노동 소외 및 예측, 셋째, 사회에 유용한 창조적 노동이 아니라 자본가의 맹목적 이윤 추구에 동원되는 노동이라는 데 있다.

다른 노동이란 노동관계, 노동의 목적, 노동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실천의 방향으로 첫째, 협동조합과 자주관리기업을 통한 대안 노동을 활성화하고, 둘째, 기업 내 노동자 경영참여를 보장하며, 셋째, 시민사회조직 영역의 활성화를 통해 최저소득이 보장되는 시민노동을 새롭게 발굴해가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노동과 노동관계를 재조직하는 것과 더불어 소비의 재조직을 통한 생산관계 및 생산양식의 근본적 변화를 스스로 일구어가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쟁시장에 매몰되지 않는 호혜시장의 영역을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시장사회, 임금노동과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극복할 수 있는 물질 토대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결사한 주체들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다른 정치를 만들어갈 것이다.

## ‘다른 정치 - 자치’, 다른 경제에 토대를 둔 이중권력 형성

“정치는 인간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즉 사회뿐 아니라 개인들의 삶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자족적 존재가 아니라 존재하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양식의 저장은 필연적이다. 양식을 저장하지 않으면 공동의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과제, 즉 최종 목적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다.” (한나 아렌트)

새로운 협동운동은 사회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비록 협동조합공화국을 말한다 하더라도 협동조합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자기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럴 때 다른 운동의 영역을 존중할 수 있으며 새로운 영역이 개발된다. 실제 개별 협동조합이 사회 전체의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이것의 해결을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협동조합 내의 노동과 임금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를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기본소득제,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 경영참여, 재벌구조 혁신 등의 문제의식이다.

다른 노동에 기반한 다른 정치의 주체형성 전략은 노동자결사체운동의 전통에 따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불안정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만남이다. 이 주체는 지역사회를 무대로 사회적경제운동의 전통을 복원하고 지역풀뿌리운동을 결합할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을 유력한 살림살이 기반으로 삼아 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권력을 형성하기 위해 상시적인 정치운동으로 이중권력 운동을 제안한다. 이중권력운동은 협동운동을 통해 다른 노동, 다른 시장을 건설하면서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압박하고 견인하며 대안적

복합경제모델을 제안하고 실천하는 동시에 민의 정치경제결사체 운동을 확산시켜 마침내 다른 세상, 새로운 사회를 열어갈 새로운 상상이다.

## 다른 세계화는 가능하다

엄기호의 책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마라』에는 ‘인문학의 눈으로 본 신자유주의의 맨얼굴’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신자유주의가 인간과 사회에 왜 재앙인지 이 책의 제목은 말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노골적 속삭임,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마라”라는 메시지는 지난 세월호 참사의 비극적 결과로 나타났다. 새로운 협동운동은 기업의 이윤 추구만을 위한 자유주의의 세계화를 극복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는다.

그것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의 슬로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한다”를 지지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대의민주주의와 새롭고 활력 넘치는 참여민주주의가 결합하여 2001년 1월 브라질 보르트 알레그레에서 진행되었던 세계사회포럼의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슬로건 역시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보다 이윤을 더 중시하는 체제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렇다면 다른 세계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다른 세계는 다른 경제로부터 비롯된다. 우리는 경제를 생각함에 있어 “민중을 먹여살리는 것은 경제성장이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신념 없이 어떻게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김종철의 물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협동운동은 생활세계의 식민화에 맞서는 운동이다. 우리의 삶이 이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세계의 문제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초국적 금융자본의 은행과 보험에 가입하며, 값싸고 편리하기 때문에 골목가게를 버리고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있다. 머리와 가슴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지만 생활세계는 그 체제를

끊임없이 지지하는 ‘이념에 대한 생활의 배반’,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도대체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우리는 역사로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전의 살림살이를 살펴 원시반본<sup>原始返本</sup>하는 것으로 다른 세계화를 위한 다른 경제를 상상할 수 있다. 고대 아시아 경제의 핵심인 신시<sup>神市</sup>는 호혜와 교환, 재분배의 획기적 시스템이었다고 한다. 김영래에 따르면 신시는 필요 이상의 축적을 하지 않으며, 지나친 축적을 경계하는 사회, 잉여 처리 방식이나 교환 시장이 개인적 축적이 아니라 사회적 잉여 즉 공동체로 환원되는 사회, 이윤을 목표로 하는 대신 나눔을 목표로 공생과 호혜 원리에 입각한 사회, 일상 물자를 구매하고 소비하는 행위 자체가 다른 이를 돕고 나도 도움을 받는 사회, 그리하여 물건이 선물이 되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고 도는 사회였다고 한다. 품앗이, 두레, 계, 울력을 현대에 맞게 재조명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을 나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나부터 신자유주의적 인간과 달라질 것이다. 세계사가 무기의 싸움에서 돈의 싸움으로 변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도<sup>道</sup>의 싸움, 영성의 싸움을 준비하는 것으로 새로운 협동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 살림의 길

---

## 생명문화

경계를 흐리는 음악, 문화, 삶

삶과 음악, 지역과 세계를 넘나드는  
음악가 김반장에게 듣다

- 편집부

## 생활협동

협동조합과 거버넌스

최근 영국 협동조합 그룹의  
사업 실패와 거버넌스 위기

- 하만조

## 사회실천

분노와 망각을 넘어서

생명 위기 사회와 남겨진 과제들

- 편집부

# 경계를 흐리는 음악, 문화, 삶

- 삶과 음악, 지역과 세계를 넘나드는  
음악가 김반장\*에게 듣다

## 음악은 삶이고 관계다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직업 음악인으로서, 삶과 음악 사이 경계 혹은 균형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실 원래는 다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했던 것들이 분화되어서 지금 시대에 음악가, 예술가라는 직업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음악 행위를 하는데, 또한 그건 자기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삶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는 음악 자체가 대중들이 좋아할 코드나 미디어들이 만들어내고 마케팅이 이루어낸 어떤 것에 자기를 맞춰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것, 음악을 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다시 필요한 것 같아요. 삶과 철학, 말하자면 자기의 세계관을 내놓는 음악보다는 히트나 차트 순위를 목표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때로는 음악이라는 것에서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제 삶에 스며들고 삶으로부터 배어나오는 음악을 하고자

---

\* 정릉 생명평화마을에 살며 레게밴드 윈디시티에서 드럼 치고 노래함.

해요. 음악 행위에 음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는 데, 생각하는 데 있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음악화 하는 작업이 진정 음악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직업적으로 보다 ‘프로페셔널한’ 음악보다는 제 삶이나 내면으로부터 나와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삶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풀어내는 하나의 화법으로서 음악을 하려고 합니다.



삶으로부터 음악이 나오지만 그 음악은 또한 소통을 위한 것이기도 할 텐데요.

그렇죠. 음악이라는 건 무형의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활동이고, 그 피드백은 그것에 동의하고 즐기는 관객들로부터 오니까요. 제가 어떤 음악을 내놓았을 때 이 음악에 대해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반응하고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또한 거꾸로 그 에너지를 제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그 에너지를 좀 더 잘 승화시켜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서로 교감하는 통로로서 음악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악의 질적 수준 또한 높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음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어떤 퀄리티로 표현할 것인지 계속 고민해야죠.

농부에 비유하자면, 생명을 키우는 사람이면서 한편으로는 상품으로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 딜레마가 있는데, 음악가도 그런 점에서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집 마당에서 연습하고 있으면 동네 꼬마 친구들이 가끔 와서 보고 같이 얘기 나눌 때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핸드폰으로 듣는 음악들을 같이 듣고 있으면 그게 그

친구들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이거든요. 그러다보면 내가 만드는 음악이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정서와 어떻게 교감하는지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는 무게감이랄까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음악은 일종의 소울 푸드 같은 거잖아요. 단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유기농 농사를 짓듯이 하나의 좋은 먹거리가 될 음악을 생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3~4개월 만에 반짝 하고 사라지는 음악들도 많지만, 계속해서 제가 만든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테니까요.

## 음악이 사회와 만나는 방식

그처럼 음악이 갖는 여러 속성, 특히 치유와 위로, 화합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단지 즐기고 노는 행위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소비되는 경향 또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음악페스티벌들이 연이어 취소되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고요.

우선은 음악 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음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한 책임도 있는 거겠죠. 음악이 음악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나, 산업으로서만 기능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물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음악의 표피적인 면은 다양해지고 풍부해졌지만 내적으로 받쳐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음악 하는 사람들이 자기 삶과 음악을 어떻게 연결하고 그 음악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지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을 내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잖아요. 실제 음악의 역사를 봐도 노동요부터 시작해서 서로를 위안하고 같이 노래 부르면서 울고 웃게 하는 힘을 갖고 있었는데 상품화되면서 그런 측면이 쏙 빠지고 물질적인 부분만 남은 거죠. 지금 한국 음악시장은 모더니즘 시기예요. 그런데 이를테면 레게음악

같은 경우 일정 부분 모더니즘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곳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거기에도 정신문화가 넘어가야 한다는 포스트모더니즘, ‘한 바퀴 돌았으니 원래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예전에 4대강 공사현장에 가서 뮤직비디오도 찍으시고 ‘하러 가세’ 같은 투표 돌려 노래도 하셨는데, 그런 ‘사회참여’라는 측면도 음악의 한 속성이겠죠.

지금 보이는 것, 실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눈감고 애인과 헤어진 얘기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하나의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음악이라고 봐야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음악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근간이 되는 영감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걸 ‘관계’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옆에 있는 이웃과 친구가 힘들어하거나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음악이 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의문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음악은 훨씬 더 쌍방향적이예요. 음악이든 그림이든 예술이라는 게 자기를 뽐내거나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음악의 의미가 보다 확장되어야 하고 한 단계 내려와서 깊게 움직이는 음악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맥락에서 집회나 사회단체 행사에도 많이 참여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는 사회주의 동아리에 있으면서 집회나 시위에 나가고 연주도 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사회적으로 편을 가르고 있던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옳다 그르다 사이에 옳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은 어디로부터 음악이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한쪽 편에 서야 하는 게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 되어 버렸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람의 양심이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어떤 체제든 마음에 대해 생각하

지 않고 물질로만 사람을 대하면 결국 똑같이 착취구조로 가잖아요. 그런 것을 좀 나와서 보게 되면서, 제가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지만 정치적인 견해나 이익집단끼리의 대립 사이에서는 별로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사회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 ‘비빔’의 미학: 같음과 다름 사이, 지역과 세계의 경계에서

장르적으로는 주로 레게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계신데요, 한 인터뷰에서 ‘개발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를 멀리하고 자연과 생명을 섬기는 정신과 가치가 레게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음악뿐 아니라 삶 전반에 영향을 주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영향 받은 음악들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같이 더불어 살자’는 것이지 경쟁하면서 나 혼자 잘살자는 게 아니었거든요. 국적을 막론하고 그런 메시지들이 강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춤추게 하는 ‘그루브’가 있는데, 돋보이게 춤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춤을 추게 하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 음악들이 저에게 얘기해준 것은, ‘너는 너 자신으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누구처럼 하려고 할 필요 없다’ 이런 거였어요. 저 역시 음악은 그런 각자의 독특한 독자성을 키우는 것이고, 경쟁하거나 견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상황을 얘기하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레게음악이 상당히 강한 울림을 저에게 줬어요. 이를테면 물질이나 욕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허영심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가난이란, 진짜 부(wealth)란 무엇인가 하는,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노랫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듣다 보면 이 가수가 어떻게 힘 주어 목청껏 외치고 있는지 알겠거든요. ‘그 길은 아니야’, ‘네가 느낀 슬픔이라는 게 뭔데’, ‘밖에서 부는 바람과 이 태양에 대해서 왜 감사하지 않



사진: 한알학교(2014 느티나무음악회)

지?’ 이런 메시지들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 감각이 새로워지면서 일깨워지는 부분들이 있죠.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대중가요는 대체로 남녀 간의 슬픔에 대해서만 울고 있지만, 그건 사람을 한쪽 채널로만 보는 거예요. 정말 많은 채널이 있는데도요.

한편으로 토속적인 느낌도 강한 것 같은데요.

제가 레게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단순히 자메이카 음악에 매력을 느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한국음악 같기 때문이에요. 한국 장단이 거기에 있어요. 심지어 지금 한국의 국악보다 레게가 훨씬 저에게는 한국 음악처럼 들려요. 마치 우리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의 리듬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저건 우리 동네에 있던 건데, 재들이 어떻게 알지?” 이런 느낌인 거죠.

한 지역에서 시작됐지만 다른 지역의 고유한 것과 만나서 접목되거나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유연함’이 있는 거네요.

그게 레게음악이 가진 힘인 것 같아요. 호주의 애버리진 원주민,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레게음악을 사용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레게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런 가운데 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고요. 채우지 않고 빼는 것, 여백을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한국적이라고 느끼죠.

저는 기본적으로 레게라는 음악적 문법과 철학적인 바탕에 영향을 받았지만 평생 레게 뮤지션으로 불리고 싶진 않고 제 기준을 만들고 싶어요. 한국 사회가 항상 기준을 밖에서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 아닐까 싶어요. 저는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들이 지금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는 음악들과 ‘비벼졌을’ 때 어떻게 들릴지에 대한 실험도 해보고 싶어요. 레게든 아크로비트든 라틴이든 기본적으로 다 맞아떨어지는 리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리듬을 가지고 저의 정서와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좀 더 확립되는 음악을 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사회적으로 굿이나 토속문화 같은 게 근대로 오면서 거세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고유의 문화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굿을 보면 거꾸로 마치 아프리카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향유했던 문화라는 것에서 오는 감동과 반가움도 있고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굿과 우리 전통문화라는 게 훼손되고 심지어 비하되는 지경까지 왔잖아요.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의 소리가 있고 영국에 가면 영국의 소리가 있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소리가 강하고, 그렇다면 한국의 소리가 뭘지에 대해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바이올린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가야금으로 바이올린을 쳐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가야금 자체의 아름답고 독특한 소리가 있는데, 다만 그것이 정말 괜찮은 문화가 되려면 ‘온고지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인류 공통의 뿌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전통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결국 모든 것들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고 인종을 넘어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고유한 것들을 만나도록 하는 작업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좋겠죠. 저는 퓨전국악보다 오히려 레게음악이 더 우리의 전통과 인류의 전통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통기타 하나를 치더라도 자기의 메시지를 갖는 게 전통이라고 보고요. 전 세계에서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팝이나 기존 음악의 대안으로서 전통을 중요시하는 움직임들이 이미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것과 다른 것을 접목시킨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해외 공연도 많이 하시면서 또 마을 음악가이기도 하잖아요. 요즘 언어로 ‘글로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밖으로 뺏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이뤄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한국 밴드들이 외국에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지 외국의 페스티벌이 원하는 콘텐츠만 제공하는 입장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정체성에 기반해서 스스로 기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 벽을 깨고 경계를 허무는 문화

멋있고 세련된 것에 대한 시각은 제각각 다를 수 있는데, 현재는 음악을 포함한 문화 전반에서 획일적인 기준이 마치 정답처럼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경우엔 텔레비전에 나오는 잘생기고 예쁜 가수들의 무대보다 뒷산에서 할아버지가 등산하면서 부르시는 노래가 진짜 멋있다, 진짜 음악이다 싶을 때가 있어요. 각자 개인의 존엄이나 독자성을 되살려내

는 데 역할 해야 하는 게 미래의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감성, 소울이 얼마만큼 당당하게 발현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제 경험으로도 사춘기 때 들었던 음악들이 저에게 준 것은 내가 뭐가 할 수 있다는 것,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나의 특별함이 있다고 일깨워주고 가르쳐준 것이었거든요.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음악을 초등학생부터 성인들까지 듣고 있다는 것은 좀 ‘빈한’ 느낌을 주죠. 동시에 한국 교육의 맹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기의 정신적 소산이나 철학을 생각해볼 겨를이 없이 밖에 있는 반짝거리는 것만을 보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문화를 향유하고 그 문화를 얼마만큼 자기 걸로 체득하느냐로 ‘일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다양함’은 한편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 다양한 선호와 취향을 가진 소비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제 경우에는 다행히 한국에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음악이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구분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말할 수 있으면 다 노래할 수 있고, 몸이 있으면 춤출 수 있잖아요. 어떤 가수처럼 노래하고 싶다는 게 음악 하는 데 자양분이 될 순 있지만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난 내가 될 거다, 그것이 음악이 주는 메시지여야 하지 않을까요? 음악 생산자-소비자라는 말이 지금은 통용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과거의 촌스러운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공연 역시 무대와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 궁극적으로는 경계가 없어지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대에 서는 입장에서는 어떤지요?

우선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자 시도하는 게 무대에 있는 사람의

몹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무대에 선 사람 마음이 충만하고 평온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음악을 하는 사람의 '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동안의 생활에서의 모습이 저한테서 드러나기 때문에 무대에서 제 모습을 볼 때 제가 일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스스로 모니터가 아주 잘 되죠. 부끄러울 때도 많고 공부가 많이 됩니다.

이따금 마을 잔치나 시골 동네에서, 어르신들 앞에서 공연할 때가 있는데 반응이 뜨거워요. 음악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훌륭한 관객들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누군 줄 알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감되는 게 있으니까 앉아계시는 거겠죠. 그게 진짜 '스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어우러지면 저만 공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공연을 보고 있는 셈이 돼요. 살아있는 관계죠. 그런 게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 '흥'과 '신명'을 공유한다는 게 음악이 갖는 가장 큰 힘이자 매력이겠죠.**

저는 모두가 손을 잡고 동글동글 도는 그 순간이 굉장히 많은 신명을 내는 것 같아요. 때를 한 번 벗겨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록페스티벌에 모이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각자 따로 살다가 그 순간만큼은 연결되고 싶은 욕구라고 생각해요. 같은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동질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 생명문화라는 기치가 있다면, 사람들 사이 거리감을 좁히고 보이지 않는 벽과 경계를 허무는 문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문화가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같이 어우러지고, 고정관념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요.

저도 고립돼 있다가나 쓸쓸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음악은 그걸 풀어내려고 하는 일종의 한풀이거든요. 그게 개인적인 한풀이가 아니라 모두의 한풀이로 모여진다면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가장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요.

##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생명평화

정릉 생명평화마을에 살고 계시잖아요, 마을살이의 특별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동네는 서울이지만 아직까지 시골 같은 정서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남아 있어요. '생명평화'라는 게 어떤 커다란 가치인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생명평화는 아랫집 아줌마랑 얘기하고 가끔 맛있는 거 나눠 먹고 그런 거 아닐까 싶거든요. 마당에서 연습할 때 문을 열어놓으면 이웃집 아저씨도 와서 들으시고, 북 들고 나가면 여기서 한 번 쳐 보라 하시고요. 정이 있고 사는 재미가 있죠.

요즘엔 원룸이나 고시원도 많고 독거청년이란 말도 있잖아요. 몸이 아픈데 옆방 친구들이 알지 못하고, 외로움과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커뮤니티도 만들려고 하고요. 우리 사회가 여전히 경쟁 중심이고 남들보다 더 큰 아파트 같은 것들이 가치로 인식되는데, 한편에선 그런 단단한 벽에 조그만 구멍을 계속 내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 바뀌어갈 거라는 희망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은 획일적이고 갇혀 있잖아요. 세계관의 변화랄지 다른 감각을 깨우는 계기 같은 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곳에서도 사람이 10~20년 안 살면 풀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당연한 자연의 이치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흐르는 방향을 막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게 뭐지 생각해 보면 답이 있지 않을까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들어온 생각에 따라 살고 있다거나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왜곡되어 있어서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고 남들 보기 괜찮은 집에 살아야 자기표현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에 치우쳐 있고 다른 방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분명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이죠.

저도 음악 하는 부분에만 에너지를 많이 써왔는데, 작게는 집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스스로 음식을 해먹는 일,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서 느끼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의 삶, 살림이라는 게 없다면 좋은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돈을 버느라 밖에서 조미료 잔뜩 들어간 음식을 계속 먹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요즘 힐링이라든지 자유의 길을 묻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인문학 강의도 많은데, 그런 걸 보면 포화상태라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어떤 게 더 좋은 삶이냐에 대한 고민을 모두가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십니다'라는 노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앨범 제목이기도 한데, 어떤 의미를 담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신 김매물 선생님의 황해도 곳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지금처럼 서로 내 가 잘났다고 하는 자기PR 시대에 '모신다'는 말이 저에게는 자극적으로 들렸어요. 멘탈을 건드리는 얘기잖아요.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도 배우는 자세와 모시는 자세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이를테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만나는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데서 감사하게 모셔야겠다는 마음이 들죠. 우리가 다 지구에서 같이 살고 있고 같이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이유 없이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세계관도 같이 담고 있는 표현 같아요.●

# 협동조합과 거버넌스

## 최근 영국 협동조합 그룹의 사업 실패와 거버넌스 위기\*\*

영국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 그룹’<sup>Co-operative Group</sup>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했다. 직접적인 원인은 자회사인 협동조합 은행의 경영 실패에 따른 누적 손실에 있다. 지난 4월 최종 발표된 2013년 협동조합 그룹(이하 그룹)의 손실은 총 25억 파운드(약 4조3천억 원)이며, 이 가운데 약 84%가 은행 관련 손실로 집계됐다.<sup>1)</sup> 이는 직전 해 그룹 손실의 네 배에 달하며 지난 150여 년 역사에서 가장 큰 실패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협동조합 은행(이하 은행)은 다행히 파산은 면했지만 미국계 헤지펀드로 넘어갔고, 은행에 대한 그룹의 지분은 100%에서 30%로 내려앉았다. 여기에다 전임 은행장인 폴 플라워P. Flowers의 마약 소지로 인한 기소 사건과 지급보장보험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400만 파운드 벌금 부과<sup>2)</sup> 등이 겹

---

\*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원

\*\* 영국 협동조합 그룹은 자회사인 협동조합 은행의 부실과 관련해 2013년 7월 영국 보건 분야 싱크탱크인 킹스 펀드(King's fund) 의장인 크리스토퍼 켈리(Christopher Kelly)에게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부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의뢰했고, 그해 12월 전 재무부 금융서비스 장관 폴 마이너스(Paul Myners)를 그룹 이사회의 독립전문 비경영 이사로 임명해 조직의 포괄적인 거버넌스 검토보고서를 의뢰했다. 이 글은 두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1) Co-operative Group의 2013년 연차보고서에서 필자가 계산함.

2) The conversation "Now Co-op is just another bank, it's time to ditch the name" 2014. 4. 7.

처 ‘윤리적인 은행’이라는 명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었다. 그룹 또한 자회사의 경영 실패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년보다 감소하긴 했지만 14억 파운드(약 2조4천억 원)에 달하는 부채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며, 은행 사업과의 분리에 따르는 각종 비용 지불, 지분을 회복 등을 위한 고강도 개혁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그룹의 사업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2009년에 인수한 썸머필드Somerfield의 자산가치가 감소하여 핵심 사업인 식품 분야 역시 개혁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분석한 두 개의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전체 그룹의 사업 전략과 방향을 지휘하고 경영을 감독하는 그룹 이사회를 포함한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6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그룹 거버넌스 개혁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 영국 협동조합 그룹의 대규모 손실의 원인

이번 손실의 원인으로는 우선 리스크 및 자본 관리의 실패가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그룹은 2000년대 후반 시작된 은행과 식품 체인의 인수·합병을 통해 그룹의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이는 2009년 썸머필드 식품 체인 인수, 브리태니아Britannia 주택금융조합과의 합병에 이어 2013년 632개에 달하는 로이즈Lloyds 은행의 지점 인수 시도로 이어졌다. 잇따른 인수·합병은 그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 둘째, 합병에 따른 기대는 매우 높았다. 식품 체인의 증가는 매출 향상으로 이어지고, 은행은 지점과 고객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고비용 구조를 벗어나 경영 성과 개선을 기대할 수 있었다. 실제 2011년까지 지

난 5년간 그룹의 수익과 조합원은 대략 두 배가 되었다.<sup>3)</sup> 셋째, 그러나 2009년 이래로 계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은 브리태니아가 안고 있던 기업 여신 리스크를 높였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부실로 이어져 2012년 영업이익은 전년의 5억2천6백만 파운드에서 1/10로 급감한 5천4백만 파운드였다. 넷째, 내부적으로 2007년부터 약 5년에 걸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 IT 재배치 프로젝트의 실패, 지급보장보험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여 가용 자본이 감소하고 있었다. 다섯째, 2009년 경제 위기 이래로 금융규제가 강화되었고 2013년 1월에는 금융당국이 은행에 요구되는 총 자본을 19억 파운드에서 34억 파운드로 증가시켰다. 여섯째, 결국 2013년 6월 은행은 내부적인 가용 자본의 감소와 외부에서의 자본 확충 요구가 맞물린 압력에 직면하여 총 15억 파운드(약 2조6천억 원)의 자본 부족을 발표했다. 물론 규제 당국은 은행의 리스크 프로필에 대한 우려를 보내왔었고, 은행이 좀 더 일찍 주의를 기울여 대응했다면 결과는 아마도 이만큼 극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쨌거나 자본 부족에 대한 인식은 곧장 로이즈 은행 지점 인수 철회와 손실로 이어졌고, 규모 확장 전략에 따라 인수·합병한 자산에서 비롯된 대규모 손실은 (은행 분야 약 21억 파운드, 식품분야 약 2억 파운드) 총 25억 파운드에 달했다.

## 거버넌스의 구조적 취약성

경영 리스크와 자본 관리의 실패 책임은 경영진에만 있지 않다. 켈리와 마이너스 모두가 지적하듯 거버넌스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룹 홈페이지에 제시된 거버넌스와 관련한 집합적 책임 기구로서 이사회의 책임을 살펴보면 ▲그룹의 목적과 이해관계자의 이해에 따라 그룹의 공

---

3) Telegraph "Has the Co-op bitten off more than it can chew?" 2012. 3. 24.

식적인 사업을 지휘하고 관리 ▲그룹 경영진과 협의하여 비전과 전략을 결정 ▲그룹 경영진의 일상적 경영 활동을 감독 ▲핵심적인 재무 및 비재무 지표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 ▲그룹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감독 ▲거버넌스 관련 표준 정립 등이 명시돼 있다. 그런 점에서 은행 이사회는 경영진을 감독하는 데 실패했고, 나아가 그룹 이사회 역시도 100% 은행 지분 소유자로서 조합원 자산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사회는 왜 실패했는가?

이에 앞서 그룹의 거버넌스 구조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3년 현재 그룹의 조합원은 개별 조합원과 법인 조합원 두 가지로 구분된다. 개별 조합원을 대표하는 기구는 48개의 지구 위원회(area committee), 7개의 권역 위원회(regional board), 그리고 그룹 이사회(group board)가 있다. 그룹 이사회에서 개별 조합원의 대표는 총 20개 의석 중 15개를 차지하는데, 이들을 일컬어 ‘일반 이사’로 칭한다. 법인 조합원은 그룹과는 별도로 독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총 127개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에게 할당된 그룹 이사회 의석은 5개이며 이들을 일컬어 ‘법인 이사’로 칭한다. 현재 ‘일반 이사’로 대표되는 개별 조합원과 ‘법인 이사’로 대표되는 독립 협동조합의 그룹 이사회 내의 의석 수 비중은 구매액에 비례하여 결정되었다. 즉 그룹으로부터 구매액 중 개별 조합원이 78%를, 나머지 22%는 독립 협동조합이 구매하고, 이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누었다. 2001년 그룹의 전신인 CWS(Co-operative Wholesale Society)와 CRS(Co-operative Retail Society)가 합병하기 전까지는 ‘법인 이사’가 그룹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했지만 합병 이후 현재까지는 ‘일반 이사’가 그룹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그룹 이사회에는 독립 전문 비경영 이사(independent professional non-executive director)를 세 명까지 둘 수 있으며, 이들은 이사회에 의해 임명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그룹 위기 전까지 독립 전문 비경영 이사(이하 ‘전문 이사’)가 임명된 적은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이너스는 그룹 거버넌스의 실패 이유를 개인의 문

제보다 구조의 문제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의 진단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 이사는 각 지역별 조합원 선거에서 선출되므로 대규모 복합 비즈니스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이 부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컨대 재무, 위기 관리, 마케팅, 소매업에 관한 지식, 그리고 기술과 의사소통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각자의 능력이 이사회 안에서 상호보완될 필요가 있지만, 실제 이사회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맥락을 다루지 않고 사회적이거나 윤리적인 의제에 관한 논쟁이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었다. 사업 관련 주제를 다룰 때에도 개인의 지극히 제한된 경험담이나 출신 지역의 관점에 편향된 수준의 의견 제시에 그쳤고, 전문성이 필요한 판단에 대해서는 낮은 확신과 그로 인한 판단 지체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룹 내에는 이사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마이너스는 대규모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능력은 교육을 넘어서는 실제 경험으로부터 얻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 이사회는 자신에게 경영에 대한 감시와 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 때문에 반복적으로 경영에 대한 실패 책임을 들어 경영진을 비난하고, 일상적으로 경영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불평했다. 이사회는 불만스럽지만 도장을 찍는 역할밖에 못했다는 평가다. 또 이사회는 경영진을 지원하고 상담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지만 전문 지식과 경험의 차이는 상호불신으로 귀결되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유능한 경영자의 영입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셋째, 이사회는 그룹 전반의 포괄적인 이해에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은 종종 자신이 소속된 지역의 편협한 이해에 너무 과도한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었으며, 연대성의 부족, 공유된 목적의 불일치, 동료 이사에 대한 존중의 부족도 나타났다. 심지어 어떤 이사는 이사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지지를 원칙으로 하는 집합적 책임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뒤집으려는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반 이사는 때때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회의 후에 선거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이유

로 의사결정을 지체시켰다.

넷째, 규모의 문제와 역할의 문제가 있다. 현재 20명으로 구성된 이사의 수는 유사한 규모의 경쟁 기업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 이는 효율적인 논쟁과 토론을 저해하고, 조합원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도록 하며, 사안의 이해를 깊이 하고 새로운 통찰을 발생시키기보다는 전형적으로 이사의 질문과 경영진의 답변이 오가는 수준으로 이사회 기능이 축소되도록 만들었다. 일부 자회사 중에는 이사회가 역할을 잘 하는 곳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자회사와 그룹 이사회, 그리고 각종 위원회 간의 역할과 책임 구분이 명확치 않아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마이너스가 지적한 또 다른 거버넌스의 문제는 대표자 선출 시스템에도 있다. 즉, 현재 선출 시스템은 능력을 담보로 대표자를 뽑는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이사가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해, 감독은 물론이고 상담자이자 조언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그룹 이사가 광범위한 그룹의 필요보다는 개별 선거구의 좁은 이해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압력하에 있다는 점이다. 즉, 그룹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권역과 지구 위원회 멤버로서 직을 유지해야 하는 이른바 ‘겸직’ 조건이 있는데, 이로 인해 2개 선거구에서 임기 3년인 위원으로 선출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재선을 위해 선거구의 이해에 복무해야 할 뿐 아니라 종종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에도 직면해 있었다. 거기에서 겸직 조건에 따른 세 개 조직에서 개최되는 회의 참여는 물론이고 자회사 위원회 참여 등으로 거의 풀타임 수준의 시간이 요구되어, 능력은 있지만 시간이 부족한 개인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또한 그룹 이사가 되기 위한 까다로운 ‘겸직’ 조건은 잠재적인 그룹 이사의 수를 크게 제한하므로, 결국 인재 풀을 좁게 만들고 심지어 경쟁이 필요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까다로운 겸직 조건은 1997년 앤드류 리건 A. Regan의 CWS 탈취 시도가 실패한 이후 의도적으로 고안되었지만 결과

적으로 조직의 구조를 경직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끝으로 그는 현재 조합원의 권리가 단지 지구 수준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데 머물러 있다며, “조합원의 요구와 참여가 심각하게 억제되었고, 모든 거버넌스의 취약성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결손으로부터 축적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마이너스의 개혁안

마이너스의 개혁안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가치 창출이 선행되어야 가치 분배로 이어진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사업적으로 성공해야 하며, 동시에 차별적인 가치와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그룹의 목적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그의 거버넌스 제안은 경영진과 이사회에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민주적 구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개혁안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 첫째, 개혁을 통한 그룹 이사회 역량 강화, 둘째, 전국 수준의 조합원 협의회(NMC: National Membership Council) 설립, 셋째, 모든 조합원의 민주적 권리 확장이다.

첫 번째로 제시된 이사회 강화와 관련한 세부 개혁안을 살펴보면, 첫째, 이사회는 6-7명의 전문 이사와 2명의 경영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조직의 규모는 10명 이내로 하고 전문 이사는 항상 경영진보다 다수로 구성된다. 그룹 이사회의 모든 임명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전문 이사는 그룹의 주요 경쟁 업체의 이사 수준으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물론 전문 이사가 다수인 그룹 이사회에서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모든 전문 이사는 반드시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약속하는 조합원이어야 하며, 이사(혹은 이사 후보자) 평가 기준에도 가치와 원칙을 포함시킨다. 그리고 이들이 전체 조합원에 의해 정기적으로 선출 및 재선출 되도록 한다. 둘째, 그룹 연차총

회에서 이사 후보자를 제안하는 지명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5명의 비경영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조합원 협의회(NMC)에서 제안하는 최대 2명의 대의원이 포함될 수 있다. 지명위원회는 그룹 이사회와 협력하여 후보자를 추천하며, 추천된 후보자는 조합원에 의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경쟁 투표가 아님). 또한 위원회는 연례 감사를 통해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 그룹 이사는 조합원 1인 1표에 의거 선출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1/3이 순환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매년 사업 성과를 공식적이고 철저한 방식으로 평가받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과 후보자 지명 전략을 만들어 나간다. 평가 내용은 효율성보다는 규칙적인 운영 관행, 이사회 내부의 역학관계, 역량과 경험의 균형성, 그룹의 가치와 원칙 및 조합원 구성의 다양성 측면을 고려한다. 넷째, 그룹 비서를 두고 이사회와 정책과 작업 관행의 적합성을 방법론적으로 재검토하는 역할은 물론이고, 그룹 전반의 거버넌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두 번째로 제안된 내용은 대략 50명 규모의 전국 수준 새로운 조합원 협의회(NMC) 설립이다. 여기에는 그룹에서 일하는 직원 10명과 최대 5명의 독립 협동조합 대표자들, 그리고 최대 5명의 특별 선거구<sup>4)</sup>를 포함한다. 조합원 협의회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되며<sup>5)</sup> 그룹 이사회 및 경영진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 협의회는 세 가지인데, 첫째, 그룹 이사회와 정례적으로 관계하는 자문 조직으로서 역할 하는 한편, 그룹 이사회가 그룹의 재산을 관리하고 조직의 성공과 성장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그룹의 운영 성과에 책임을 갖도록 한다. 즉 그룹 이사회가 전문성을 갖고 경영을 감독한다면, 조합원 협의회는 조

---

4) 특별 선거구는 상대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그룹, 예컨대 청년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들을 대표하도록 할 수 있다.

5) 30석의 개별 조합원 대표는 30개 지역으로 나누어 조합원에 의해 선출되며, 10석의 직원 대표는 사업 파트별이나 지역 또는 업무 기능별로 할당하여 직원들에 의해 선출된다.

합원 대표기구로서 그룹 이사회의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인 셈이다. 둘째, 조합원의 다양성을 대표하고 촉진하는 포럼을 제공한다. 여기에서는 경영 및 거버넌스 관련한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며 특히 그룹의 사회적 과제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셋째, 조직이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헌신하도록, 그리고 이러한 원칙이 조직의 비전, 전략,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는 조직의 수호자로서 기여한다. 이와 같은 조합원 협의회는 잠재적으로 그룹 이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위원회의 인력풀로도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조합원 협의회 구성원 중에서 독립 협동조합 구성원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조합원 협의회를 지원하고 조합원 협의회와 그룹 이사회, 경영진과 조합원의 상호작용을 위해 복무한다. 한편, 지구위원회는 더 이상 선거구로서 역할 하지 않으며, 그 대신 그룹 자체 브랜드 상품을 홍보하는 활동, 지역 공동체 교육 활동, 지역에 관한 정보 제공, 공동체 기금의 조성 등 사업적이거나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촉진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제안은 조합원 권리의 확장과 관련된다. 그동안 조합원은 그룹의 정점에 있는 그룹 이사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권리가 없었고 지역 연차총회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그룹 이사는 지구별로 선출된 대의원에 의해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권고안의 의미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확장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서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권리를 얻게 된다. 첫째, 그룹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할 권리, 둘째, 지역사회 연차총회에 참석할 권리, 셋째, 중요한 거래를 승인할 권리, 넷째, 사회적 목적의 프로그램을 승인할 권리, 다섯째, 분배를 승인할 권리, 여섯째, 조합원 협의회(NMC) 구성원을 선출할 권리, 일곱째, 지역사회 연차총회에서 발의할 권리, 여덟째, 그룹 이사회 후보자를 추천할 권리이다. 이와 같은 조합원의 권리 확대는 과거 법인 협동조합이 다수를 이루었던 CWS와 달리 조합원이 그룹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으로의 변화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로 설명된다.

## 협동조합 거버넌스 개혁안이 주는 시사점

지난 5월 16일 연차 총회에서 마이너스의 개혁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대규모 협동조합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거버넌스 실험이기에 앞으로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현실에서 협동조합들의 거버넌스 수준은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이다. 정부의 개입에 따라 성장해 온 대규모 협동조합을 제외하면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사업체로서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거버넌스의 역할과 책임, 이행이라는 기본적인 제도 세팅과 실천 감독에 대한 체계화가 우선적인 관심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사례로부터 우리는 협동조합 거버넌스의 일반적인 쟁점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조직의 규모화에 대한 예방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룹은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도전적 경영 전략으로 수익과 조합원 수가 2배로 성장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지만 이면에서 조직의 리스크는 커져왔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로 이어졌다. 이번 진단에서 제시된 가장 큰 문제는 경영의 부실이었고, 이는 또한 그룹의 성과를 총괄하는 이사회에 책임, 그리고 구조적으로 부실한 감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버넌스의 문제로 이어졌다. 그런 점에서 조직의 규모화 문제를 안고 있는 어떤 협동조합도 이번 영국 협동조합의 사례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특히 대부분 조직에서 거버넌스가 합리적인 검토와 필요보다는 인간적인 측면과 우연적인 요소, 특정 상황에 대응할 필요, 그리고 관행적인 이유로 형성되므로 조직의 규모화에 따르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고려사항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조합원의 권리 확장과 관련된다. 2001년 이래로 법인 조합원보다 일반 조합원을 대표하는 '일반 이사'가 그룹 이사회에서 다수를 점유하게 되면서 일반 조합원의 권리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대의원을 통한 그룹 이사 선출이라는 점에서는 간접 선출이라는 형식을 띄고 있었다. 그런데 이

번 개혁안은 조합원이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이 그룹 이사를 선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합원이 직접 그룹 이사를 추천하고 선출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는 그룹 이사 선출에 있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의 변화로 조합원 권리가 확장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즉 전체 조직의 정점에서 전략과 방향, 감독에 책임을 갖는 기구의 대표는 특정 지역이나 업체의 이해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조합이 아니라 그룹 전체 차원의 시각에서 이해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조합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제안은 지역별, 사업체별 대표성을 갖는 이사들 간의 이익 갈등을 구조적으로 벗어나려는 시도이다. 게다가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와 민주적 통제 제도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협동조합운동의 경험에 비춰볼 때도 조합원의 권리 확장은 충분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sup>6)</sup>

세 번째 시사점은 대규모 조직에서 조합원의 이사 참여 문제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에서 일반 이사의 참여는 당연시되어 왔고 그것은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라는 협동조합 원칙과도 부응한다고 생각되어 왔다. 즉 경영진이 전문 경영을 담당하고, 조합원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가 의사결정과 경영 감독을 담당하는 역할이 정착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마이너스의 제안은 선출직 '일반 이사'가 다수를 이루는 이사회가 가진 비전문성이 경영 리스크 통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전문가와 경영진으로만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와 경영진의 원활한 소통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물론 그는 조합원 협의회 설립으로 이사회를 지원하고 이사회가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원 직접 선거에 의해 조합원인 '전문 이사'를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 원칙에도 충실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 이사회가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

---

6)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참여 민주주의 공동 프로젝트 보고", 「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 동향 15-1」, 2014년 1월호

는 일반 이사를 배제하고 경영 전문성만을 강조하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존재한다.<sup>7)</sup> 이와 관련하여 존스톤 버찰, Birchall은 전 세계 60개 대규모 협동조합의 소유권과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성원의 목소리(voice), 대표자(representative), 전문지식(expertise), 경영(management)의 네 가지 요소가 거버넌스에서 핵심이지만 여기에는 어느 조직이나 적용되는 단일한 모델은 없다고 주장하며,<sup>8)</sup> 좋은 거버넌스는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실험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9)</sup> 그런 점에서 그룹 거버넌스에 ‘일반 조합원의 목소리’가 고려되도록 설계되었지만 그룹 이사회에서는 ‘일반 이사’가 배제되는 형태의 이번 거버넌스 실험이 어떤 과정과 결과를 만들 것인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영국 협동조합 그룹은 경영에서 크게 실패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조합원과 소통하고 내부 진단을 통해 급진적인 개혁안을 받아들였으며 이행 일정을 만드는 한편, 이러한 과정 모두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태도를 시종 유지하고 있다. 어쩌면 이런 태도가 그들의 150년 역사를 유지하는 힘이였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배워할 지점은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거버넌스 원칙의 이행과 감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닐까.●

---

7) the guardian “Co-operative Group can't put its trust in 'experts' 2014. 5. 13.

8) Jonston Birchall. 2014. The governance of large co-operative businesses: A research study for Co-operatives UK. Co-operative UK. p.74.

9) 위 보고서 p.77.

# 분노와 망각을 넘어서

## - 생명 위기 사회와 남겨진 과제들

### 시대의 물음으로 등장한 '생명'

300명이 넘는 생명들이 무참하게 희생된 지난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는 '돈'과 '이윤'을 좇아 바쁘게 달려온 우리 사회의 시선을 '사람'과 '생명'으로 돌려놓았다. 믿었던 도끼가 발등 짚는 흥기가 된 것 이상으로 이번 참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뢰 기반을 흔들어 놓았다. 사람들은 이번 충격적인 사고를 통해 바다는 물론이고 하늘, 땅 위, 땅속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과 사회 구조가 생명을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인식들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에 소위 생명운동이 등장한 지 한 세대가 흘렀지만 '생명'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면에 등장한 것은 참사 이후 아주 최근의 일이다.

지난 5월 22일에는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전국 600여 개 단체들이 참여해 세월호 참사의 상처 치유와 생명의 소중함이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만들고, 유족들이 요청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6월 2일에는 각계 원로 인사 50여 명이 참여해 '생명

안전시민회의'를 만들고 생명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우리 시대 탐욕과 무지의 대표적인 예인 고리 1호기 노후 핵발전소의 폐쇄를 요구했다.

지역별로도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세상을 위한 움직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광주 지역에서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진실 규명과 대안 마련을 위해 3년상을 치르는 마음으로 '시민상주모임'이 꾸려졌으며, 강원도 지역에서는 생명문화 확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시민·사회·환경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한 '강원생명평화회의'가 만들어졌다.

전국 대학에서도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학계에서도 세월호 참사 후 우리 사회 전반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논의 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당별로 처방에서 차이는 있지만 우리 사회가 물질만능주의에서 사람과 생명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일깨워주고 있다.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는 비용은 최소화하고 이윤은 극대화하면서 곳곳에서 위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위험의 문제들을 책임 있게 해결하기는커녕 외부화<sup>外部化</sup>하고, 심지어는 상품화<sup>商品化</sup>를 통해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재앙 자본주의'로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들이 있다.

지금 우리는 '파국으로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전환의 새 길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한마디로 사회 전체가 '임계 상태(critical state)'에 와 있다는 것이다. 임계 상태란 기존의 상태나 상황이 현저하게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는 경계 지점을 말하는데, 지금이야말로 기존 질서가 몹시 불안정해서 작은 자극이나 충격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현실을 깊이 있게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차원 변화

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여전히 높은 현실의 장벽

끔찍한 사고와 충격을 통해 사회적으로 생명에 대한 각성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실천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과 정성,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권력과 자원, 정보, 가치의 우선순위와 흐름 자체를 바꿔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공공성의 논리로 공적 자원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역할 변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현실은 이런 기대와는 한참 거리가 먼 듯한 모습이다. 특히 정치의 역할과 정부의 태도가 그러한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 정치이고 이것을 책임 있게 실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한다면, 우리에게 이들은 여전히 이상과 현실 사이의 커다란 간극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가깝게 지난 6.4 지방선거의 의미와 결과를 되짚어 보자. 충격과 슬픔, 분노, 미안함 등으로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려서 살림살이를 제대로 해낼 일꾼을 뽑는 본래의 의미는 묻혀버리고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을 묻는 쪽과 대통령 지키기를 주장하는 쪽의 이상한 대결 구도로 치러졌다. 진영논리를 앞세운 이런 식의 대결구도는 세월호 참사 이전의 선거 행태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세월호 참사 여파를 고려해 노골적인 선거 운동을 조금 자제하고, 급조된 각종 안전 공약들을 쏟아낸 것이 약간의 변화라면 변화라 할 것이다.

주목할 점은 책임정치에 대한 기성 정당들의 근본적인 한계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거대 정

당들은 유권자를 포함한 사회에 대한 책임정치보다 자신들의 기득권 정치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수많은 선거 공약들을 ‘표 얻기용’으로 만들었다가 선거가 끝난 뒤엔 손바닥 뒤집듯 없었던 일로 하고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봐 왔다. 이번 지방선거도 예외가 아니었다. 애초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여야가 함께 주장했던 기초 선거 정당 공천 폐지는 없던 일로 했고, 기호순번제도 등 거대 정당과 명망가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도 그대로 유지했다. 문제는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존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거대 정당들의 이런 행태가 민심을 왜곡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시켜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 자체를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정당 기호 없이 치러진 교육감 선거 결과가 정당에 기반한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 결과와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의 선거제도가 만들어 놓은 높은 진입 장벽은 한편에서는 녹색당과 같은 새로운 정치조직들의 등장을 가로막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적 연고 등을 통한 나눠먹기식 정치행태의 낡은 틀을 지속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짚어봐야 할 문제다.

한편, 승자독식의 현실 선거제도 속에서 ‘승리’와 ‘패배’의 이분법적 잣대가 만들어내는 문제도 심각한데, 행정구역별 지도를 펼쳐놓고 당선자 소속 정당에 따라 색칠하는 등의 접근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편 가르키하고 증오와 대결을 부추기게 된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선거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태도다. 인물과 정당, 공약, 여론, 사회분위기 등 유권자들의 선택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데, 이것을 무시한 채 수치화 된 득표율과 지지율을 놓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행태는 민심의 왜곡을 넘어 민심을 무시하는 오만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집권 여당이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도 그렇다. 선거 과정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지

지를 호소했던 정부와 여당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태도를 돌변해 국민들 도덕성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인사들을 국가개조의 책임자로 앉히려 하고, 교육감 선거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하자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치권 못지않게 정부의 태도도 문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원전 건설 확대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가 침몰하던 4월 16일 당일 노후 문제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던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고,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지난 5월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설치행사에 참여한 데서도 확인된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자각한 시민들이 국민투표 등을 통해 국민들 의견을 확인해서 원전 정책 방향과 폐쇄 여부를 결정하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의 정책을 물리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에 대한 정부의 조치도 마찬가지다. 수년째 밀양지역 주민들이 생계를 내려놓고 송전탑 건설을 반대해오고 있으나 지방선거가 끝난 지 1주일째 되는 6월 11일 아침에 소위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경찰 2천 명, 공무원 2백 명 등을 투입해 송전탑 반대 농성장을 철거했다. 정부와 한전은 후쿠시마의 교훈은 애써 외면한 채 설계수명이 한참 지난 노후 원전 고리 1호기의 재가동과 비리로 인한 불량부품 납품으로 준공을 못하고 있는 신고리 3, 4호기의 건설을 송전탑 건설 강행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의 이런 행동은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들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확인하고 원전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바꾸기 시작했다. 특히 원전 주변 지역의 경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형성되어 오던 탈핵에 대한 여론이 세월호 참사 이후 크게 증폭되었고, 이번 지방선

거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삼척 시 경우 이번 선거에서 원전 유치에 앞장섰던 기존 시장을 누르고 '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무소속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시장에 당선되었다. 고리 원전을 옆에 둔 부산에서도 시장으로 출마한 여야 후보 모두 탈핵 의사를 밝혔다. 고리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반대 의사를 밝힌 야당 후보는 물론이고, 시장에 당선된 여당 후보도 2017년까지 고리 1호기 완전 폐쇄 의견을 내놨다. 또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와 인접한 울산과 경주의 시장 당선자도 여당 소속임에도 원전 수명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무소속의 부산 기장 군수 역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폐쇄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경직된 입장을 가지고 현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다양하고 새로운 변화의 조짐들을 잘 읽어낼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의 틀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우리 사회를 구분 지어 온 보수-진보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와 논리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개인이나 조직 또는 사회를 보더라도 그 속에는 보수와 진보의 속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의 위치가 바뀌기도 하고, 상호 관계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각이 가진 특성들이 변화하기도 한다.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어느 한쪽이 기울면 다른 한쪽을 받쳐서 역동적인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생명이 가진 기본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 보수와 진보는 개인이나 집단을 선과 악처럼 '명쾌하게' 구분 짓는 잣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화해하기 어려운 간극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러한 경직된 진영논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한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열망을 제대로 읽어내지도 담아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창조적 대안을 오히려 가로막게 된다.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앞세워 현실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고 편가르기를 통해 갈등을 촉발시키는 사람들이다. 이들 '주의자'들에게 보수, 진보는 자신들의 도그마적 이념을 실현하는 도구이거나 또는 이념 장사의 소

재일 뿐이다. 올바른 보수주의자는 청렴과 도덕, 법과 원칙을 소중히 하면서 약자를 위한 배려와 자선 활동에 열심인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부패하고 몰상식, 몰염치하고 비윤리적이며 폭력을 선호하는 집단들이 '보수'를 앞에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진보 영역도 예외가 아니다. 진정한 진보주의자는 깊은 인류애를 바탕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개인의 안위를 넘어서 사회 전체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신들이 내세운 진보 논리로 현실을 재단하면서 스스로에게는 관대해 자기 성찰과 혁신에는 소홀해서 오만하고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보수와 진보에 대한 낡은 인식의 틀을 유지한 채 상식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좌-우, 친일-종북 같은 대결적 논리로 상대를 규정하는 방식은 사회적 갈등과 피로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게 된다. 생명 위기에 대한 전 사회적 성찰과 변화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아쉽고 우려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 분노와 망각을 넘어서

흔히 사람들은 위협에 맞닥뜨리면 공포심 때문에 본능적으로 눈을 감거나 시선을 돌리게 된다. 나아가 위협이 발생한 현장이나 현상으로부터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사태를 책임질 대상을 찾거나 당장 눈에 띄는 조치로 심리적 안도감을 얻으려 한다. 하지만 이런 일차원적 대응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기 어렵다. 자신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가치와 삶의 방식, 또는 사회 구조 속에 문제의 원인이 자리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생명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벗어나려면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위협과 직접 대면해서 문제의 본질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 점에서 세월호 참사 후 정부가 보여준 태도와 일련의 대응 방식들을 보면 많은 아쉬움과 한계들이 발견된다. 엄청난 희생과 충격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선장과 선원, 선박사주 일가를 엄벌하고 자신들이 알아서 국가를 새롭게 뜯어고칠 테니 시민들은 이제 그만 관심을 내려놓고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소위 ‘앵그리맘’을 포함해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권 퇴진 문제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들은 활성화되지 못한 채 정치적 공방과 정파적 진영논리에 갇혀버리는 모습이다.

이런 식이라면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놓쳐버리고 엉뚱한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해 버릴 수 있다. 분노와 망각을 넘어서 성찰을 통한 진지한 대안 모색이 절실한 때다.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것은 ‘위기’를 강조한다고 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대안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위기의식의 확대는 사람들의 조바심을 자극해 성급한 대책을 내놓게 만든다. 준비 없이 맞게 된 위기 상황은 극단적 선택으로 연결되기 쉽다. 최근 유럽 선거에서 경제위기 여파로 극우와 극좌의 정당들이 힘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바람’을 일으켜 한꺼번에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나 복잡한 문제를 한꺼번에 속 시원히 해결해 줄 ‘메시아’ 같은 지도자의 출현을 기대하는 심리도 마찬가지다. 이런 인식과 태도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주체적 역량을 제대로 키워내기 어렵다.

이제 사회운동의 역할도 더욱 새로워져야 한다. 현실에서 제기되는 필요와 요구들이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혔을 때 운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시대에는 필요와 요구를 새롭게 하고 제도적 틀을 넘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대안을 창조해내는 운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기의 징후를 예민하게 읽어내는 안목을 가

져야 한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무오류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탐욕과 무지, 위험한 오만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살필 수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핵과 원전 문제다.

또한 우리의 지난 성장 과정 자체가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듯이 이후의 민주화 과정과 외환위기를 거친 신자유주의화 과정도 매우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런 속도주의의 관성을 유지한 채 창조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성급한 결론과 빠른 망각의 습관을 내려놓고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길러낼 수 있는 다양한 실천 영역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바로 이런 곳들이 전환의 거점이 되어서 개인적 자각과 사회적 각성 운동을 동시에 일으키고,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획득한 생존의 비결인 공감 능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시켜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소통을 마비시키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자기중심적인 사회에서 배려와 협동의 관계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현실 개혁운동과 저항운동, 불복종운동 등을 대안 창조운동과 입체적으로 연결시켜내어 사회 전체적인 변화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미래세대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할 때

새로운 삶, 새로운 사회를 향한 노력은 누군가가 대신해줄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해 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전환기에는 오랜 인생 경험이 지혜가 아니라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현실의 복잡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의 차이를 넘어서 미래를 향한 방향 설정과 실천의 구심력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가까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물어보고 경청을 통해 지혜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성 정당들이 정치적으로 순발력 있는 청년 한두 명을 비례대표로 세워

놓고 마치 역할을 다한 것처럼 하는 것은 착각을 넘어 기만에 가깝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의 정치 및 사회 제도는 미래세대가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고 담아내지도 못한다. 여전히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아직 미성숙하다’, ‘정치는 불온하다’, ‘공부에 방해 된다’는 생각으로 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후 ‘아이들을 살려내라’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선거법상 선거연령 제한에 묶여 희생자들과 같은 또래인 청소년들의 의사는 근본적으로 차단해 놓았다. 심지어 청춘의 시절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교육의 당사자이자 주체인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밀접한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아무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미래세대에 책임 있게 다가가고, 돈 중심의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가치와 이해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고 어른들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4.16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기본적인 자세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올바른 교육을 통해 우리의 미래세대가 깊은 성찰과 주체적 판단능력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때 사회 전반의 모습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국회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책으로 소위 ‘인성교육진흥법’을 내놓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지난 5월 26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 100여 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소위 (세월호 선장) 이준석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 법을 발의한 배경에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승객 수백 명을 버려둔 채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의 ‘인성<sup>人性</sup>’ 부족 문제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옥 같은 입시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 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인성교육 강화로 세월호와 같은 생명 위기 문제를 풀겠다는 어른들의 발상이 놀랍다. 이런 어른들의 행태에 대해 또래 친구들의 충격적인 죽음에 슬퍼하던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걱정이 앞선다. 그런데 이번 참사로 2학년 전체 학생 중 74%가 사망 또는 실종되

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단원고등학교에 대해 경기도와 안산시가 외국 어고등학교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대책으로 발표해 사람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끔찍한 참사를 겪으면서 ‘돈’이 아니라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윤을 좇아 경쟁의 쳇바퀴를 정신없이 돌리려는 우리 사회의 관성은 여전히 강력하고 뿌리가 깊다. 이 점에서 2차 대전을 일으키고 6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에서는 전후부터 지금까지 각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국민 세금을 활용해 어릴 때부터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추도록 학교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온 사회가 커다란 충격을 겪던 당시에 태어났다. 직장을 잃고 치솟는 은행금리와 물가로 힘들어 하던 부모세대의 심리적 부담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나온 아이들을 이 시대 어른들은 제대로 돌보고 살피지 못한 채 참혹하게 떠나보냈다. 누구보다 동년배의 안타까운 죽음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시대 어른들에게 묻고 있다. 참사가 일어난 지 20여 일 지나 안산지역 23개교 청소년들이 안산고교회장단연합회를 만들어서 희생된 친구와 선후배들을 추모하는 침묵거리 행진을 했다. 그때 나온 한 학생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린다. “우리는 무섭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이러한 아픔이 조용히 잊혀질까 너무 무섭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려고 합니다. 어른들이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우리들의 작은 변화로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뜻을 기리고 이들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대해 어른들이 책임 있게 답할 수 있는 길은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우리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데 있을 것이다. 내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년째 되는 날, ‘잊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던 어른들에게 아이들은 다시 질문을 던질 것이다. ‘그날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요?’, ‘달라지기 위해 정말 어떤 노력을 해 왔나요?’ ●

## 심고 나누고 되살리는 지역 씨앗 연결망 운동

올해 9월 강원도 평창에서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린다. 얼마 전 GMO가 검출되어 논란이 된 강원 지역에서 개최되는 회의와 더불어 생물 다양성 보존의 의미를 다시금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생명의 원천인 동시에 먹거리 사슬로 가는 최초이자 마지막인 씨앗<sup>1)</sup>이 가뭄, 홍수 등의 기상이변이나 전쟁으로 인해 한 지역에서 멸종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지만, 지금과 같이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GMO가 확대되며 국가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 분명하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재앙에 대비하기 위해 종자보존소를 지정해 인류에게 필요한 종자들을 보관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 역시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공인하는 국제종자보관소이다.

---

• 농민농민정책연구소, 모심과살림연구소 등에서 대안농업을 모색해왔으며, 현재 충북 괴산에서 토종 콩밭을 일구며 더욱 손에 잡히는 연구를 하려 애쓰고 있음.

1) 씨앗은 곡식이나 채소 따위의 씨 혹은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근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며, 생물의 번식에 필요한 기본물질인 씨앗을 일컫는 종자(산스크리트 Bija)란 불교에서 모든 존재와 현상을 낳게 하는 원인의 씨앗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로 씨앗이나 종자는 유사하게 쓰이는 말이지만 법, 제도적 의미로 통용되는 종자의 의미와 구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씨앗이라는 말을 살려 쓰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종자를 되살리는 일은 충분치 않다. 이는 지구적 재앙이 일어나더라도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보루일 뿐 지역의 토종씨앗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있어 대안이 되지 못한다.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는 씨앗은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아서, 몇십 년 후 이 씨앗을 되살렸을 때 발아되는 환경과 기후, 계통, 병해충이 어긋나는 등 변화된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 중앙집권화된 종자은행은 씨앗을 가장 필요로 하고 돌보는 농민들의 접근을 차단한다. 국립종자원의 설명에 따르면, ‘품종보호’란 품종을 등록한 사람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한다.<sup>2)</sup>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기관에만 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기 때문에 정작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농민들은 접근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종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겠다는 대상은 규모와 시설을 갖춘 기업과 연구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것과 같이 영리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이 등록한 종자를 지속적으로 자가채종하는 것, 자가소비분 이외의 생산물을 판매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즉, 토종씨앗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매년 씨앗을 받는 행위, 이웃에게 판매하거나 씨앗 나눔을 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대대로 농사지으며 씨앗을 받아온 농민들이 종자를 등록하는 데 익숙할 리 없다. 결국 무분별하게 종자를 사용하는 농민들로부터 ‘기업이나 국가기관을 보호’하겠다는 논리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농민의 관행에 대해 법적으로 예외조항을 두어 자가채종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준거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농민들은 보호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나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세계 시민사회 진

---

2) 국립종자원 [http://www.seed.go.kr/protection/system/apply\\_03.jsp](http://www.seed.go.kr/protection/system/apply_03.jsp)

영의 인식과 실천이 합의되면서 다국적기업들의 종자 독점에 대항하는 목소리 또한 거세지고 있다. 생물자원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통해 종자 주권과 농부권을 명문화하고 초국적 기업의 자본을 규제할 정치적 공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은 유전자원을 국가의 주권 영역으로 인정했으며 이후 2010년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에도 합의를 이루었지만, 씨앗을 돌보는 이들이 씨앗에 접근하기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이익을 공유하는 주체 역시 불분명하다. 오히려 생물자원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개념과 타협하게 된 국제 조약들은 결국 그 권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쟁의 한복판이 되었다. 이제는 기업뿐 아니라 국가 기관도 생물자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종자은행이 지적재산권에서 자유롭지 못해 씨앗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오히려 기업의 종자 독점권을 보호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대안적인 지역 씨앗 연결망 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져 왔다. 농민들의 씨앗 되심기가 최선의 현장 보존임을 강조하며, 씨앗 나눔 자체가 지역의 씨앗은행 역할을 담당해 온 역사를 재발견하고 씨앗의 생명성, 주체성, 지역성을 찾아가는 대안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지역 씨앗 연결망 운동은 지역의 씨앗을 보존하고 농민들의 자가채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씨앗은행, 씨앗도서관 등의 형태로 분화해왔고,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 인도

'9개의 씨앗'을 의미하는 나브다나는, 씨앗이 갖는 생물학적·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보호와 씨앗을 공유재로서 보존하고 나눌 수 있는 권리를 주장

하는 운동이다.<sup>3)</sup> 인도에서는 1998년 다국적기업의 종자를 수입한 이래 수십만 명이 농사짓는 것을 포기하고 자살자가 속출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져나갔다. 7루피(150원)에 불과했던 국내 보급종 가격이 3,200루피(80,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씨앗은 더 이상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나브다냐는 씨앗 보존 주체들과 유기농 생산자들 사이 일종의 연결망으로 인도 전역 17개 주에 걸쳐 111개 종자은행 설치를 지원해왔으며, 인도 북부의 웃다르아칸드 지역에서 ‘씨앗학교’를 운영해 농민 50만여 명에게 생물다양성 보존과 유기농토에 관한 지식을 전파해왔다. 나브다냐 센터는 정보 및 인프라 구축, 전통농법으로 병해충을 방제하는 교육 수행, 소농 조직과의 유기적 연결을 담당한다. 타밀-나두 주 안에 있는 여러 지역 NGO와 협동하는 것으로부터 이 운동을 시작해, 장래 농민이 될 마을의 학생들에게 고유종자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어린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생물다양성 대회를 열고, 자발적인 도움으로 토종씨앗과 그 정보를 수집하였다. 외양간두엄과 지렁이두엄을 활용하는 비법, 생물비료, 님(Neem) 씨앗 등의 자재를 제공하고, 토종 작물을 유기재배로 기르는 비법, 식물에서 추출한 자재로 생물농약을 만들고 자연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는 기술, 두엄을 만드는 기술 등을 훈련하고, 품종의 특성과 수확량 및 상세 정보를 여러 언어로 된 교재, 정기간행물, 서적, 포스터, 필름 형태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녹색혁명 이전 토종종자의 유익성을 보고 하는 농민 참여 실습, NGO, 학생, 교사,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교에서는 글짓기나 웅변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육을 주요하게 담당했다.

현재 유기농업은 약 125개 마을에서 약 3천 명의 농민들에게 퍼졌고, 채

---

3) <http://www.navdanya.org>

소밭 세대는 800가구 이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농가들로 이루어진 37개 소농 공동체가 설립되어 있다.<sup>4)</sup>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쿠로 마을은 농민 스스로가 씨앗 관리 체계를 만들어나간 사례라고 할 수 있다.<sup>5)</sup> 인도네시아는 녹색혁명으로 인해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쌀을 주식으로 삼게 되면서, 그 전에 널리 소비되던 밀, 고구마, 옥수수 등의 재배가 줄고 쌀만 집중적으로 재배하게 되었다. 그 결과 농민들은 무려 1만 종의 고유 종자를 잃게 되었다.

남부 수마트라 농민회(South Sumatra Peasant Union) 멜라티 농민단체의 농민들은 고유 씨앗 지키기에 힘쓰고 있다. 섭씨 30도를 웃도는 쿠로 마을의 기온에 가장 적합하고 가뭄과 홍수에 강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장 널리 심는 종이 바로 파디 살렉(padi salek)이다. 파디 살렉은 긴 줄기와 무성한 잎이 특징이며, 무성한 잎사귀 덕분에 잡초가 자라지 못해 제초제를 쓸 필요가 없다.

쿠로 마을 농민들은 씨앗을 지키기 위해 여러 장애를 극복해야 했다. 현장의 교육 간부들을 통해 끊임없이 상품 판매 기회를 노린 기업들이 자신들의 교배종자가 '최상품'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배종자와 부가기술 구매를 부추긴 결과, 많은 농민들이 높은 생산량을 약속받고 은연중에 전통 농업 방식을 버리기도 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멜라티 농민단체의 농민들은 고유 씨앗과 전

---

4) K. Vijayalakshmi, S. Arumugasamy and A.V. Balasubramanian, "Organic Farming and Indigenous Seed Conservation Experiences from Tamil Nadu, India", Leisa India, Centre for Indian Knowledge Systems, June 2007

5) 2007년 9월 5일 국제종자포럼(International forum on SEED) 자료집

통적 농업구조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다양한 모임을 통해 알려나가는 동시에, 생계형 농사에서도 고유 씨앗으로 수확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현장 보존을 실천하고 있다.

## 태국

수출용 작물 종자가 점유한 평야 지대와 달리 태국 북부 지역은 여전히 고유 씨앗을 유의미하게 보존하고 있다.<sup>6)</sup> 소수민족인 캐런족 공동체에서는 돌려짓기 방식을 통해 쌀 및 기타 곡물, 채소, 향초 등의 고유 씨앗을 보존해 왔다. 캐런족 공동체들은 각각 100종이 넘는 씨앗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공동체들은 300종 넘는 씨앗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고지대 개발, 삼림보존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부 농민들이 이들 지역에서 퇴출되면서 동시에 고유 씨앗이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 대안농업네트워크(Alternative Agriculture Network), 북부농민연대(Northern Farmers' Network) 등의 단체들은 농민들과 함께 고유 씨앗 보존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종자를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다양한 종자를 분류, 저장하고 이를 다시 심어서 씨앗을 늘리는 방식으로 보존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이를 통해 태국과 미국 간 FTA에서 의제가 될 수도 있는 벼 종자의 특허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종자품평회를 개최해 새로운 씨앗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종자품평회가 잇산 지역 종자품평회(Local Isaan Seed Fair, Ku Kasigha Area)이다. 농민들은 이 같은 품평회에서 씨앗을 분석하고 씨앗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품평회에서 씨앗을 교환하고 씨앗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고유 씨앗 보존 운동

---

6) 위 문헌

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태국 종자은행에는 약 2만여 종의 쌀 종자가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농가에는 그 몇 배의 고유 씨앗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하지만 태국 정부의 시장주의 정책으로 내수·수출 시장에서 모두 자스민 쌀과 같은 장립종 쌀류가 장려되자 여러 종류의 중·단립종 종자들이 퇴출되었고 소비자들의 입맛도 시장의 영향으로 변화한 탓에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경작 패턴도 변형되어, 사라져 가는 고유 씨앗 발굴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안농업네트워크는 약 130여 종의 쌀 종자를 수집해 검수하고, 전통적 방식으로 재생산하는 데 주력했다.

지금 태국 법에 의해 보호되는 쌀 종은 29개에 불과하다. 2001년 대안농업네트워크 등의 농민단체는 빈민포럼에서 ‘식물종다양성보호에 관한 법(Plant Protection Act)’을 통해 식물 종에 대한 권리가 민중들에게 속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수상으로부터 그에 대한 약속을 얻기에 이르렀다.

## 쿠바

쿠바는 2004년 세계유기농대회에서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농민참여형 종자개량 사례를 내놓아 이목이 집중되었다. 경제위기 상황 때문에 농약과 비료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가뭄, 고온, 병충해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씨앗을 재래종에서 발굴해낸 것이다. 농민과 과학자들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농민은 소비자가 아닌 주체로서 품종개량의 전 공정에 관여하며 과학자는 농업생물다양성의 촉진자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힐베르토레온 협동조합농장 농민들은 15계통에서 선별 육종하고 옥수수 신품종을 개발해 다수확 품종보다 30% 이상 많은 수확량을 거두었다. 쿠바의 이러한 사례는 FAO가 농가의 품종개량과 재래종

확보를 지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성과를 낳았다.

쿠바는 규모화 된 협동농장 혹은 국영농장이 주축이었던 기존의 중앙집권적 제도나 생산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전면적 발상의 전환을 꾀했다. 첫째, 다수를 차지하는 소농들과 도시텃밭 농부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생산 강화를 주요 원칙으로 삼고, 행정이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단행했다. 둘째, 식량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기존의 관행농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수입선을 모색하는 대신 전통농업을 복원하고 과학기술 체계를 재정비하여 교육과 현장훈련을 기반으로 한 농생태학을 정립했다. 농민, 학자, 행정관료 등이 현장, 연구소, 대학, 정부 부서에서 긴밀하게 연계함으로써 유기농업운동의 주체가 되었다. 셋째, 도시의 빈터와 텃밭을 활용해 재배한 신선한 먹거리가 직거래 장터 이하의 가격으로 도시 좌판, 재래시장에서 거래되었다. 기존 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토지들이 생태농업 선구자들에게 재분배되었고, 생태농업을 시행한 지 수년 만에 소농들과 도시텃밭 농부들이 식량안보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태농업을 이끈 사람들은 쿠바 유기농업연합 핵심 그룹으로, '생태농업 등대 프로젝트'를 통해 육성되었다. 1993년 5월 국가농업과학연구소에서 열린 이 프로젝트는 100명의 대표단과 해외인사 40명의 참여로 창설되어 2개 지자체의 3개 소농생산협동조합, 150농가로부터 시작되었다. 생태농업 등대 프로젝트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독려하며 쿠바 생태농업의 기틀을 만들어나갔다.

##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의 씨앗 보존 운동은 미첼<sup>Michel</sup>과 주드<sup>Jude</sup> 부부의 작은 텃밭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미첼은 자신이 줄곧 살아온 프

랑스뿐 아니라 1960년대~70년대에 살았던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동유럽, 중동, 동남, 동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영감을 받았다. 특히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짚 한오라기의 혁명』으로부터 배운 자연농법으로 자신의 농장을 일구는 기반으로 삼고, 10여 년에 걸쳐 작물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거쳤다. 이들은 1986년 씨앗보존재단(Seed Savers Foundation)을 설립했으며, 생물다양성과 씨앗 생산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초기 20년간은 재단 중앙이 한 지역에서 씨앗을 수집하고 실험, 저장, 재분배하는 활동을 벌였으나, 이후에는 10여 년에 걸쳐 재단 중앙을 분권화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 씨앗모임을 전국에서 100여 개로 확산시켰다. 또한 전통씨앗의 중요성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출판, 강연, 토론회,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를 넘어 40여 국가에 이 목소리를 전파하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들에도 지역 종자모임의 매뉴얼을 제시해 농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담당해왔다.

## 영국

영국의 지역먹거리생산네트워크(Tower Hamlets Food Growing Network)는 지역에서 텃밭운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환경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sup>7)</sup> 지역의 텃밭운동이 급증하면서 2010년 8월에 설립되었다. 이들에게 ‘씨앗 안내자’로 일컬어지는 전통 씨앗도서관(The Heritage Seed Library)은 영국의 유기농 운동을 50년간 이끌어온 그룹이 주도하고 있으며, ‘지구는 우리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서 빌려온 것’이라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격언으로 스스로

---

7) <http://www.wen.org.uk/...food/tower-hamlets-food-growing-network>

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지역 씨앗도서관은 매 계절마다 열리는 모임 자체를 의미한다. 이 모임은 참가자가 기증하는 씨앗들로 운영된다. 브라이튼Brighton의 ‘종자의 날(Seedy Sunday)’은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종자 교환 행사가 열리는 날이다. 씨앗도서관은 씨앗을 가져간 사람이 그것을 소비해 버리지 않고 자가채종을 이어가며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텃밭을 관리하는 것이 막막한 사람들에게 씨앗도서관은 씨앗을 심는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씨앗도서관은 자원활동가들을 모집해 근거리 텃밭을 확대시켜나가는 운동을 펼치며, 텃밭 지도사들을 두어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미국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Seed Savers Exchange)이 설립되어 재래종 씨앗을 보존하는 활동을 펼쳐왔으며, 1999년 바질(The Bay Area Seed Interchange Library, BASIL)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씨앗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씨앗도서관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sup>8)</sup> 씨앗도서관은 야채, 허브, 꽃 씨앗들을 공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도서관으로, 후원자들이 스스로 씨앗을 검수해 심고 갈무리해 반납하며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년 정기적으로 씨앗 교환 행사를 개최하는데, 먹거리와 씨앗을 공유하는 식사 모임 같은 방식으로 열린다. 바질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지역에서 열리는 씨앗 관련 행사를 통합적으로 홍보한다. 씨앗도서관은 기업적 독점 방식의 씨앗을 거부하고, ‘우리의 씨앗을 나누

---

8) <http://basilseedlibrary.com>

고 재생산하는 것, 지역에서 농민이 생산한 씨앗을 지역적으로 유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씨앗도서관은 특히 “씨앗을 기르고 먹고 되돌려줌으로써, 자연의 리듬에 공명하며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조응하고 우리의 존재가 거미줄처럼 얽힌 삶의 그물에 둘러싸여 있다는 깊은 이해를 얻게 된다.”고 설명한다. 현재 미국 전역에 약 45개가 운영 중이며, 설립이 비교적 쉬워 계속해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 각국의 주목할 만한 사례를 통해 기존의 종자산업 체계에 종속되지 않는 지역 씨앗연결망 운동의 요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씨앗의 생명성이 존중되는 보존에 주력한다. 생명에서 비롯된 씨앗이 반생명적이라는 말은 모순이다. 그러나 씨앗의 생명성을 훼손하는 GMO가 확대되면서 씨앗을 보존한다는 의미에는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오랜 세월을 걸쳐 스스로의 힘으로 적응해온 씨앗은 기후변화, 병해충으로부터 적응할 힘을 길러 본성이 살아 있다. 땅에서 대대로 살아온 씨앗을 보존한다는 것은 오래된 씨앗을 복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에 되살리는 생명의 힘으로 미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가 된다.

둘째, 씨앗에 대한 농민의 주체성을 인정한다. 씨앗에 대한 기여를 굳이 따지자면 씨앗을 키운 토양과 풍토, 농민에게 그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면 누구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농민권이 법제도적 권리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농민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땅에 씨앗을 되심어 왔으며 좋은 씨앗을 이웃과 바꾸며 한 종의 세력이 약해지거나 멸종되는 것을 방지해왔다. 자급을 목표로 하는 소규모 가족농과 여성농민들이 주로 텃밭을 가꾸어 왔으며, 도시텃밭 농민들 역시 그와 더불어 새로운 씨앗 보존의 주체이다. 국제적으로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농민인권 조항에 합의했으며, 이에 관한 선진국들의 국내 적용 사

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셋째, 씨앗은 지역에서 보존하며, 해당 지역사회가 관리한다. 지역 고유의 씨앗은 원산지가 어디건 해당 지역에서 가장 잘 적응해온 종자이다. 대를 이어 심고 거두는 과정에서 기후와 토양에 적응해왔기 때문에 그 지역의 추위, 더위, 병충해에 잘 견딜 수 있다. 지역 씨앗 연결망은 한 지역의 씨앗이 멸종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 현장에서 보존하고 씨앗을 토착화시키며, 개개인이 씨앗을 갈무리하지 못하더라도 그 씨앗이 멸종되는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 되살릴 수 있도록 관계가 연결되는 체계이다. 또한 소규모 씨앗 모임을 다차원으로 확대시키고, 씨앗은행, 씨앗도서관, 씨앗학교 등의 방식으로 교육과 합의에 중점을 두고 실천하며, 씨앗에 대한 권리를 지역사회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길이기도 하다.●

# 우리가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다

-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이후, '빚 탕감' 직접행동을 펼치다

시간은 망각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큰 사건도 곧 잊혀지곤 한다. 3년 전,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떠들썩했다. 2011년은 일본 후쿠시마 쓰나미와 핵발전소 폭발과 더불어 금융위기가 함께 닥친 해이다. 한국의 경우 부산에서 불안이 시작되었다.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보다 쉬운 대출, 높은 예금이자율을 이용하던 서민들의 희망을 앗아갔다.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겨우겨우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렸고 은행 앞은 눈물과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이 진을 쳤다. 부산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3,184억 원에 부채는 3조5,180억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야말로 '돌려막기'식 사업으로 은행을 유지했던 것이다.

2011년 9월, 뉴욕에서는 금융위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를 점령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월스트리트를 점거하라!(Occupy Wall Street)”라는 구호를 외치며 수천 명이 금융회사가 즐비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즈음 세계 주식이 곤두박질치고 금융위기가 국가의 위기로 연결되는 상황이 곳곳

---

•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원,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 생명경제연구회 및 해외 대안운동 조사연구 지원 활동을 함께하고 있음.

에서 일어났다. 이는 3년 전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가 해결되지 못하고 문제를 축적하다 일어난 일이다. 물론 2014년인 지금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제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에 따라 '신용'이 결정된다. 이를 갖대로 은행은 허수의 돈을 만들고 투기상품을 팔아댔다. 결국 가상공간에서 불어난 돈은 '악마의 뱀돌'이 되어 기업의 파산과 경제위기를 일으켰다. 하지만 기업은 구제된 반면 개인은 빚에 허덕였다. 1%대 99%의 사회에서 서민들은 빚을 고스란히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구조를 목격한 사람들이 월스트리트 거리로 나섰다. 그들의 구호는 우리에게도 크게 와 닿는다.

“기업 지배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윤이 아닌 사람”

“방사능의 내일보다 활력 있는 오늘이 낫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 이 돈이 지배하는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겠다.”

달나라로 가는 시대가 되었지만 제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든 세상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빚을 얻어 집을 구입했다. 낮은 이자율로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대출상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렸다. 하지만 이 상품을 이용해 더 큰 수익을 얻고자 했던 기업은 2008년 파국을 맞이했다. 자산규모 6,380억 달러의 리먼브러더스를 시작으로 시티그룹, 뱅크오브 아메리카 등 굴지의 기업과 은행이 위기에 처했다. 이 여파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세계 곳곳으로 이어졌다.

## 공포사회에서 희년을 외치다

세계공황의 위협에 처한 각국 정부는 긴급구제금융을 시작했다. 시장의 자율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는 기존 시스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미국 정치학자 데이비드 맥널리(David McNally)에 따르면 위기 타개책으로 세계 각국 정부가 투기한 비용은 총 20조 달러를 넘어섰다. 정부는 막대한 공공재정을 일부 거대 금융기업의 회생을 위해 사용했다. 이는 국민이 낸 세금이 일부 거대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쓰인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국채를 발행했기에 국민에게 빛의 부담을 고스란히 지우게 된 셈이었다.

더 심각한 건 구제금융을 하느라 복지에 쓰이는 예산이 반토막 난 것이다. 표면적으로 경제는 나아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긴축재정으로 인해 줄어든 복지혜택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었다. 보건, 교육, 환경 등 예산은 순차적으로 줄어들었고 정작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내쳐지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는 비단 미국뿐 아니라 마치 도미노처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다. 투기를 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지급준비율을 믿고 문어발식 확장 사업을 펼치는 금융기관의 무리한 시도는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다. 어려운 금융 용어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 은행에 돈을 맡기고, 대출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구조까지 꼭 닮아 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공포다. 경제 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노조 해체, 실업, 값비싼 교육비 등은 자신감을 앗아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 여러 가지 대안적 경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월스트리트와 같은 거대 자본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미국에서는 2008년 “월스트리트를 점거하라!” 운동을 계속해 이어 오고 있다. 숨통을 쥐는 금융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 당시 거리에서 만난 사

람들이 단체를 만들었다. 그들이 만든 단체는 서로가 가진 빛을 힘을 합쳐서 청산하는 ‘롤링



주빌리(The Rolling Jubilee(희년운동))다. 주빌리(Jubilee)는 성경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죄를 용서하고 부채를 탕감하는 등의 희년을 뜻한다. 롤링 주빌리는 ‘시민에 의한 시민의 긴급구제’를 모토로 불특정다수에게 돈을 기부 받아 부실채권을 구입해 빛을 탕감한다. 법과 제도의 틈을 이용한 아이디어인 셈이다. 2013년 11월까지 60만 불 이상 모아 1470만 불의 빛을 없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 빛을 지는 사람, 빛을 파는 은행

미국 경제의 상징은 월스트리트다. 거대한 빌딩숲 입구에는 우람한 황소 조각상이 마치 화가 난 듯 달려들 기세로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다. 이는 마치 황소처럼 질주해 자본을 쫓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려주는 듯하다. 오늘날 금융회사는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금세 포기한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이 부채이다.

만약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은행은 이 상품을 대부분 업체에 팔아버린다. A은행에서 돈을 빌렸지만 갚아야 할 곳은 B대부업체가 되는 것이다. 은행은 해당 대출을 손실로 처리한 후 헐값에 판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렸다면 이 금액의 10%가 안 되는 가격으로 채권이 판매된다. 마치 땡처리 비행기 티켓과 같이 대출금이 거래되는 것이다. 대부업체는 저렴한 가격으로 채권을 구입한 뒤 한 명이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이익이 남는 장사가 된다. 그래서 영화 <화차>, <피에타>에서 본 것처럼 무시무시한 사람을 동원해 인정사정없이 기어이 빛을 받아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에듀머니 제윤경에 따르면 국내 은행에서 헐값에 대부업체로 매각된 부실채권의 규모는 2010년부터 2012년 9월 말까지 약 2만 건 이상으로 12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심지어 은행에서 채권을 구입한 대부업체에는 원금, 이자는 물론이며 법정 비용까지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부업체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금융연구원에서는 채무취약계층 350만 명 중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 114만 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이 실행되어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지원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민금융지원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다. ‘개인이 무능해서 일어난 일을 왜 세금으로 메꿔야 하나’, ‘빚 갚는 건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개인구제를 비판한다. 즉 빚은 열심히 벌어서 갚아야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는 반응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롤링 주빌리는 질문을 던진다. 위기에 놓인 기업을 구제하는 데에는 수십억 원이 지원되어도 괜찮고, 빚에 시달려 생사의 문제에 놓인 사람들을 구하는 것에는 왜 부정적인가? 누가 누구를 도와야 하는가? 우리가 우리를 도울 수는 없을까?

## 빚에 저항하는 사람들

롤링 주빌리 운동은 ‘시민에 의한 시민의 긴급구제’이다. 정부가 서민을 내버려두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비꼬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을 ‘빚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들의 운동을 ‘빚 탕감 운동’이라고 명명한다. 빚에 대한 이들의 저항은 2013년 1월에 논의되었다. 롤링 주빌리는 2011년 월스트리트 점거운동에서 변형된 것으로 금융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실 부채 탕감을 외치는 운동이 처음은 아니다. 개도국<sup>(흔히 제3세계라 불리는</sup>

국가들이 상환하기 힘들 만큼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어 부채 자체가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2000년까지 이들 국가의 부채를 탕감하자는 ‘주빌리 2000 운동’이 있었다. 이 또한 국제연대를 바탕으로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운동으로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영국의 구호단체인 옥스팜Oxfarm에서는 국제 파산선고 형식으로 추악한 부채를 탕감해주는 방식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빌리 2000 및 개도국 부채탕감 운동과 롤링 주빌리의 차이는 개개인, 즉 시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비단 부채 탕감에서 더 나아가 사회와 생활 방식에 대한 반성과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윌스트리트 점거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경직된 사회를 좀 더 유연하고 말랑말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한다. 예를 들어 경제 문제 뿐 아니라 자치, 직접행동, 연대, 장애인 차별, 동성애 혐오증, 인종차별, 성차별 등 모든 억압과 탄압에 저항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와중에 대출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들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롤링 주빌리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대부분은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 보건, 집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었거든요.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빚을 지도록 강요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빚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됩니다.” 함께 모여 이야기하던 그들은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집과 차를 구입하기 위해 그리고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은행 문을 두드려 돈을 빌려야 했던 평범한 사람들이다.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David Graeber가 지적한 것처럼 미국인의 경우 단순한 생존 그 이상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선 빚을 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빚은 고스란히 개인의 부담으로 남는다. 이런 까닭에 사람들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무능하고 게으르다며 탓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대다수가 빚을 지는 상황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

론을 내렸다. 빚을 권하는, 빚을 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가 문제라는 것이다. 롤링 주빌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빚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죠. 불평등, 성차별, 인종차별을 지속하게 만들고 또 사회가 수직적으로 유지되는데 일조하죠.”라고 말하며 빚 탕감 운동으로 이를 분열시키기로 한다.

## 롤링 주빌리, 빚을 샅니다

그들은 ‘빚 탕감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이 프로젝트는 은행에서 파는 채권을 사는 것이다. 앞선 언급한 것처럼 은행은 아주 헐값에 부실 채권을 팔기 때문에 큰돈을 모을 필요도 없다. 그들은 이 지점에 착안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대부업체에서 하던 일을 그들이 하기로 한 것이다. 대부업체와 차이점은 대출을 갚으라는 협박이나 으름장을 놓지 않는다는 것. 그들은 단순한 방법을 사용한다. 채권을 구입하는 순간 이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빚에서 해방된다. 또한 1달러, 20달러 등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기금을 마련해 채권을 구입한다. 빚을 없앤 뒤 채권자에게 편지 등을 통해 “이제 당신은 부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연락하면 프로젝트는 마무리된다.

물론 롤링 주빌리는 특정 개인의 채권을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까지 구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도 받는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특정한 누군가를 돕기 위함이 아닌 금융제도에 억압된 개인을 서로의 힘을 모아 구제한다는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지만 연결되어 있는 연대의 힘을 느끼게 함으로써 한 단계 나아갈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롤링 주빌리는 빚 탕감 프로젝트를 경제정의와 민주적 자유를 위한 행동이라고 표현한다. 월스트리트의 힘은 기본생활을 위해 대출 받는 사람들

의 빛에 있으며, 이는 부자를 뜻하는 1%의 원천이라고 단언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은행에 굴복시키지 않기 위해 빛 탕감 운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고백했다. “우리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행은 빛은 개인의 문제라며 우리를 고립시켰고 수치심을 주기도 했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롤링 주빌리를 통해 그들은 직접 채권을 샀고, 빛이 사라지는 일을 목격했다. 이는 직접행동을 통해 위법적인 시스템에 도전한 일이었고, 그들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 확산되는 희년

롤링 주빌리는 ‘빛 탕감 프로젝트’가 단순한 캠페인에 그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빛 저항자들을 위한 실행 매뉴얼(The Debt Resisters' Operations Manual)을 책으로 만들어 배포하거나 프로젝트를 도모할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준다. 그들이 직접 겪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매뉴얼이라 실행에 옮기기도 쉽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함께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 놓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등의 내용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빛 탕감 프로젝트의 거둬들인 성공은 여러 지역과 나라로 퍼져나갔다. 뉴욕에서 시작해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등으로 확산되었고 스페인, 프랑스, 영국에서도 시작되었다. 또한 한국에서도 올해 초부터 ‘99%를 위한, 99%에 의한 구제 - 빛 탕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성경에는 ‘오십 년째가 되는 해를 특별한 해로 정하여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그해는 기쁨의 해인 희년이니 너희 모두는 각자 자기 땅으로 돌아가거라.(레위기 25장 8절)’, ‘여러분은 매 7년마다 빛을 면제해주어야 하오.(신명기 15장 1절)’라고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종교에

서 언급한 희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부의 분배는 한쪽으로 기울었고, 살림의 경제보다는 경쟁과 약탈의 경제가 횡행했다. 롤링 주빌리는 성경의 말씀을 현재 사는 땅으로 끌어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운동을 시작했다.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돕는 행동으로 희년을 만들 수 있다는 실험을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를 점거하라’부터 롤링 주빌리에 이르기까지 이에 참여한 사람들은 현재를 강조한다. 미래를 점거당하지 않기 위해 현재를 점거한다는 의미다. 그들은 빛에 대한 결박으로부터의 저항은 오늘날 할 수 있는 극단의 몸부림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다. “빛에 대한 저항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공공선(公共善)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가 상상하는 세상을 함께 만듭시다. 월스트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의 세상을 만듭시다! You are not a loan! (마이크잭슨의 You are not alone을 패러디한 문구)”●

## 참 고 문 헌

---

The Rolling Jubilee 홈페이지 <http://www.strikedebt.org>

던컨 그린, 주성수 역. 2011. 『빈곤에서 권력으로』. 이매진.

데이비드 그레이버, 정명진 역. 2011. 『부채, 그 첫 5000년』. 부글북스.

데이비드 맥넬리, 강수돌 역. 2011. 『글로벌 슬럼프』. 그린비.

“빛은 꼭 깊어야 하나?”. <프레시안> 2014. 6. 10

고병권. “월스트리트를 점거하라” 시리즈 기사. <위클리 수유너머>

---

# 1894년, 일본군은

동학농민군 '전원 살육 작전'을 전개했다!

그리고 일본의 조선 침략이 시작됐다  
왜, 일본은 사죄하지 않는가?



왜, 일본 역사에서 조선 침략 부분은 삭제되었는가?

‘일본의 양심’ 나카즈카 아키라가 그 이유를 밝힌다.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현대 일본의 역사 인식  
역사적 진실을 위조하고, 은폐하고, 이제 그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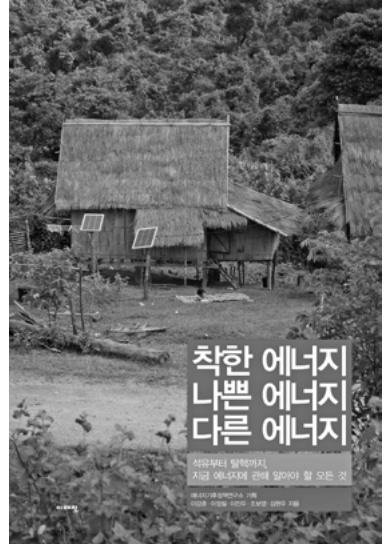
시바 료타로의 소설 『언덕 위의 구름』을 보며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은 그 위에서 짝이 났다.

## 그리고 일본의 한국 침략이 시작된다.

시민발주 ‘탈핵연구기금’으로 만든 책!

# 착한에너지 나쁜에너지 다른에너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기획  
이강준·이정필·이진우·조보영·김현우 지음  
이매진, 2014년 6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노력과 적정기술의 만남, 착한 에너지  
침몰하는 핵발전 카르텔과 에너지 빈곤의 악순환, 나쁜 에너지  
정의로운 탈핵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복지의 합주, 다른 에너지  
석유부터 탈핵까지 지금 시민이 알아야 할 탈핵 교양의 모든 것

## 시민발주 ‘탈핵연구기금’에 참여한 개인과 기관

기지혜 김다빈 김명화 김상현 김석연 김영희 김윤철 김지수 김현 이상윤 노완호 박년배 박지현 박진형 백영경  
백현석 손은숙 손제민 손형진 신화정 안설 오성규 오현아 유정민 이권호 이오이 이유진 이현석 이희정 임태희  
조승수 조영탁 진상현 최현 하승수 허장 홍덕화  
공공운수노조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제남국회의원실 녹색당 녹색연합 레디앙 생태지평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 좋은예산센터 진보신당(현 노동당)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환경공단노동조합지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정의 환경재단

# 사 리 리 모 이야기

www.salimstory.net

## 07

2014. 7 / 통권26호



특집

## 여름 휴가

그림으로 보는 휴가

잠시 멈춤, 휴식·체험·연대의 시간 나에게 휴가란 무엇인가  
농부의 얼굴도 보고, 쉬기도 하고! 생산지에서 보내는 휴가 - 강원·경북 중북부·경남 산청·제주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꼭 한번 따라 하고 싶은 4인 4색 휴가기

독자 만남

“늘 생산지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창간 호부터 독자인 이형옥 씨

우리를 먹여 살리는 꽃 마치 앙증맞은 해바라기, 썩갯꽃

한번 먹어 보시겨, 맛이 제대로이다 강화도의 입 작은 병어, 속 좁은 밴댕이

이야기가 있는 밥상

타이완 탈핵, 시민들의 손에 달렸다 제4핵발전소 건설 중단 운동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할머니를 밥은 드셔야 하지 않나요?” 밀양 송전탑 반대는 끝나지 않았다

살림의 현장

저마다 달라서 '즐거웁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다문화 통합 교육하는 강영란 씨

안녕하세요

“기게는 척척인데 뱀이 무서워” 전남 담양 대숲공동체에서 감농사짓는 한현미·김동주 씨

땅방거리며 살다

아이에게 건강한 간식 줘요 마을기업형 직원협동조합 '감성마을'

협동의 힘

탈핵 낫 직접 만드는 농사 연장

시골살림

맑은 가난이 즐겁고 편안하다 소시와 대서에 하는 아사나

절기와 물살림

책으로 떠나는 인문학 여행 상상의 시대에 성장은 가능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책으로 떠나는 인문학

새로운 생명 프레임이 필요한 때

# (사)모심과살림연구소 회원이 되어 주세요



생명운동, 한살림운동을 심화,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에 설립한 모심과살림연구소는 2013년에 사단법인 체제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과 함께 연구소의 운영 및 활동들을 더욱 힘 있게 만들어나가 고자 합니다. 연구소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회원께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소 발간 자료를 보내드리며, 연구소 활동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

소정의 후원회비(월 1만원 이상)를 납부해주시는 분들께 <모심과 살림>을 포함하여 연구소에서 기획·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을 보내드리고 그 밖의 자료 구입 및 행사 참여 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자료회원

소정의 회비(월 5천원 이상)를 납부해주시는 분들께 <모심과 살림>을 포함하여 연구소에서 기획·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을 보내드리고 그 밖의 자료 구입 및 행사 참여 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문의 : 02-6931-3604 [mosim@hansalim.or.kr](mailto:mosim@hansalim.or.kr)

※ 연구소 누리방에서도 회원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http://mosim.or.kr>

무심과  
살림연구소

서울 중구 장충단로 213, 동훈빌딩 5층

02-6931-3604 mosim@hansalim.or.kr

<http://mosim.or.kr>



재생종이로 만든 책

